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청년문제에 조명 (spotlight on youth)

OECD

OECD KOREA Policy Centre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이 번역본은 OECD와의 합의 하에 출간되었으나 공식적 OECD 번역본은 아닙니다. 번역의 질과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온전히 번역본 저작자의 책임입니다.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불일치 시에는 원본만이 정당합니다.

OECD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OECD KOREA Policy Centre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 진 : 표지 © pio3/Shutterstock.com
제3장 : © BABAROGA/Shutterstock.com
제4장 : © Rawpixel.com/Shutterstock.com
제5장 : © Mauricio Graiki/Shutterstock.com
제6장 : © gpointstudio/Shutterstock.com
제7장 : © Oleg Rebrov/Shutterstock.com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어와 불어로 발간되었습니다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 OECD 2016
Panorama de la société 2016: Les indicateurs sociaux de l'OCDE © OECD 2016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6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참조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는 OECD가 회원국의 사회발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며,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건강수준 등에 대한 25개의 계량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은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현황에 대한 분석과 학교에서 직업으로(from school to work)의 이동을 돕는 정책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우경미 부본부장과 장지은 연구원, 박유선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7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나성웅

서 문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사회 지표인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의 여덟 번째 판이다. 앞서 나온 보고서들처럼 이번 보고서도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 변화에 관한 정량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일곱 개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몇가지 새로운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자료는 제공되는 경우 보고서에 별도로 포함시켰다.

경기 대침체(The Great Depression)로 인해 OECD 전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청년층의 타격이 특히 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 회복은 청년층 - 특히 저 숙련 청년층 - 의 재취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위기가 발생한지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4천만 명 가량의 청년들이 니트족(고용상태도 아니면서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청년, NEETs) 상태이다. 문제의 뿌리는 아주 깊다. 많은 청년들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와 씨름하면서 구직에 필요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실업과 비 활동(inactivity)은 사회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수년간 각국 정부에 닥칠 큰 과제는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을 갖추게 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교육과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위기의 청년층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직장에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싣고 있다. 제1장은 OECD 국가 청년들의 상황에 관한 최근 자료를 논하고 니트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훈련, 고용, 사회 정책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 제2장은 독자들이 OECD 사회적 지표의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부터 7장까지는 지표들을 더욱 상세히 다루고 있다. 지표에 관련 추가 정보는 OECD웹사이트 (http://oe.cd/sa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Stéphane Carcillo (project leader) Pauline Fron, Raphaela Hyee, Claire Keane, Sebastian Königs, Maxime Ladaique이 작성했고 Nelly Biondi, Chris Clarke, Rodrigo Fernandez, Michael Förster, Gaétan Lafortune, Marlène Mohier이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 작성은 Monika Queisser 사회정책 과장의 감독 하에 수행되었다.

목 차

약어 및 일반기호 ····· 7

요약 ····· 9

제1장 니트족 문제: 실업 및 소외 청년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13
- 도입 ····· 14
- 1. 대침체 이후 청년 고용 ····· 15
- 2. 니트족은 누구인가? 청년 실업자 프로파일 ····· 24
- 3.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 39
- 4. 청년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 ····· 46
- 주 ····· 63
- 참고문헌 ····· 66
- 부록 1.A1. 종적 분석의 자료 및 방법론 ····· 72
- 부록 1.A2. 소득 지원 급여의 개요 ····· 73

제2장 OECD 사회지표 해석 ····· 75
- 한 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 76
- 지표의 선정과 설명 ····· 77
- 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 79
- 참고문헌 ····· 81

제3장 일반 지표 ····· 83
- 가구소득 ····· 84
- 출산율 ····· 86
- 이민 ····· 88
- 가족 ····· 90
- 인구 추이 ····· 92

제4장 자활 지표 ····· 95
- 고용 ····· 96
- 실업 ····· 98
- 기술 ····· 100
- 교육비 지출 ····· 102
- 노동시장 진입 ····· 104

제5장 형평성 지표 ····· 107
소득 불평등 ····· 108
빈곤 ····· 110
급여수급 ····· 112
사회지출 ····· 114
실업급여 수급자 ····· 116

제6장 보건지표 ····· 119
기대여명 ····· 120
인지하는 건강상태 ····· 122
자살 ····· 124
보건지출 ····· 126
흡연 및 음주 ····· 128

제7장 사회통합 지표 ····· 131
삶의 만족도 ····· 132
신뢰 ····· 134
투표 ····· 136
범죄와 재소자 ····· 138
사회적 네트워크 ····· 140

Follow OECD Publications on: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ilibrary
http://www.oecd.org/oecddirect/

This book has...

StatLink
A service that delivers Excel® files from the printed page!

Look for the StatLink at the bottom of the tables or graphs in this book. To download the matching Excel® spreadsheet, just type the link into your Internet browser, starting with the *http://dx.doi.org* prefix, or click on the link from the e-book edition.

약어 및 일반기호

OECD 회원국 ISO 코드

호주	AUS	한국	KOR
오스트리아	AUT	라트비아	LVA
벨기에	BEL	룩셈부르크	LUX
캐나다	CAN	멕시코	MEX
칠레	CHL	네덜란드	NLD
체코	CZE	뉴질랜드	NZL
덴마크	DNK	노르웨이	NOR
에스토니아	EST	폴란드	POL
핀란드	FIN	포르투갈	PRT
프랑스	FRA	슬로바키아	SVK
독일	DEU	슬로베니아	SVN
그리스	GRC	스페인	ESP
헝가리	HUN	스웨덴	SWE
아이슬란드	ISL	스위스	CHE
아일랜드	IRL	터키	TUR
이스라엘	ISR	영국	GBR
이탈리아	ITA	미국	USA
일본	JPN		

기타 주요 경제국 및 G20 국가 ISO 코드

아르헨티나	ARG	인도네시아	IDN
중국	CHN	리투아니아	LTU
콜롬비아	COL	러시아 연방	RUS
코스타리카	CRI	사우디아라비아	SAU
인도	IND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기타 약어

NEET	고용 상태도, 학업 중이거나 훈련 중도 아닌 청년
VET	직업교육훈련

관례적 표시

… 자료없음

그림에서 OECD는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회원국들의 비 가중평균을 의미.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7

요약

2015년에 OECD 청년 인구 중 15%는 니트족(고용 상태도 아니면서 재학 또는 직업훈련 중이 아닌 상태)이었다. 약 4천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중 3분의 2이상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14년에 니트족이 고용상태였다면 생산했을 총 소득은 미화 3,600 - 6,0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OECD 전체 GDP의 0.9-1.5%에 해당한다. 청년들은 취업과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의욕을 잃고 낙담해있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과 출산, 범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ECD의 정책 의제 중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G20이 저숙련자, 니트족 또는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를 2025년까지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일자리 열 개 중 한 개가 사라졌다.

30세 미만 근로자의 일자리 열 개 중 거의 한 개가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사라졌다. 스페인과 그리스, 아일랜드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중학교 졸업 후 생활전선에 나선 젊은이들이 줄어든 일자리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경기 회복이 청년층 고용 전망을 크게 개선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저숙련은 청년층을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니트족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졸자와 비교했을 때 니트족이 될 확률이 세 배였다. 그러나 저학력은 공식적 자격요건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이 약한 청년들은 니트족이 될 확률이 더 높으며 이는 학업을 일찍 중단하는 이들에게 질 좋은 대안 교육과 훈련 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젊은 여성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니트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여성이라는 점은 특히 장기적으로 니트족이 될 위험을 배가한다. 가정에서 아이들 및 여타 가족들을 돌보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 남성에 비해 니트족이 될 확률이 1.4배 높다. 한 부모인 경우,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기가 특히 어렵다. 그러므로 저렴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젊은 여성들의 구직 전망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니트족이 그 외의 불리한 여건도 안고 있다.

이미 다른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젊은이들은 니트족이 될 확률도 높은 경우가 많다. 외국 출생자들의 경우 국내 출생자에 비해 니트족이 될 확률이 1.5배이며, 이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저숙련자일 경우 특히 그렇다. 부모가 저학력이거나 실업상태인 젊은이들 역시 실업이나 비 활동(inactivity)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는 불리한 조건의 대물림을 보여준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 역시 니트족들 가운데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번도 니트족에 속한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반면, 청년층의 5분의 1은 장기적 니트족이다.

분석대상 국가들 중 청년층의 절반 이상은 4년간 한번도 니트족에 속한 적이 없었다. 어떤 이들은 짧은 기간 니트족이었으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하면서 잠시 나타난 현상인 경우였다. 그러나 전체 청년 중 5분의 1은 1년 이상을 니트족 상태로 보냈다. 이들의 경우 직장 및 교육의 중단은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였다. 위기에 심한 타격을 입었던 국가의 경우 장기적 니트족의 비율이 더 높으며, 여성, 저학력자, 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들 역시 장기적 니트족이 될 위험이 크다.

니트족은 행복, 신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낮다.

니트족이 된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이것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 니트족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비 니트족에 비해 낮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적으며 국민들의 생계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은 더 약한 경향이 있다.

학업을 일찍 중단한 이들과 띄엄띄엄 일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은 보험을 기반으로 한 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실업 청년 중 30% 정도만이 실업급여를 받는 반면 30세 이상 구직자의 경우 40% 이상이 이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청년층의 경우 사회 안전망이 빈곤퇴치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청년 중 40% 만이 공적 이전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반면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이 수치는 50% 수준이다. 대략 청년 여덟 명 중 한 명은 빈곤상태이며 청년빈곤율은 노인빈곤율보다 높다.

학업의 조기 중단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 졸업장을 받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OECD 지역 청년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감소해왔다. 그러나 25-34세 청년의 경우 여섯 명에 한 명꼴로 여전히 고교 졸업장이 없으며 젊은 남자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모든 젊은이가 고교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려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교 출석 여부를 점검하여 자퇴 조짐을 감지하고, 학생의 사회적 문제나 건강상 문제를 해결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질 좋은 직업 교육과 훈련은 학교 졸업 후 순조로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VET)은 학문적 교육의 귀중한 대안이 된다. 이는 젊은이들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염두에 두고 노동시장 참여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VET 중 실용적인 훈련이라는 요소는 업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조기에 고용주와 청년을 매칭하는 견습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학교에 염증을 내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며 도움이 될 수 있다. 견습 전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문해력, 수리력 또는 사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직장에서 기능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유익할 수 있다.

니트족들을 다시 사회에 참여시키려면 대상을 신중하게 설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기적 비 활동(inactivity)을 예방하려면 니트족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비 정부 관계자들이 소외된 청년들을 다시 사회에 참여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상자가 등록되면 심도 있는 프로파일링이 뒤따라야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많은 니트족들이 구직을 하는데 있어 약간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심각하거나 여러 장애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집중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 유망한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 실용적 훈련을 상담, 심리적지원 및 주택지원과 결합한 프로그램들이다. 일부는 소득 잠재력을 높이고 범죄 행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7

제1장

니트족 문제: 실업 및 소외 청년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도입

오늘날의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고학력 세대이면서도 구직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률은 핵심 생산연령의 성인들보다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일자리이고 임시 계약직이거나 저임금인 경우가 많다.

대침체로 인한 타격은 청년층이 특히 크게 입었으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다. 이 장에서는 청년을 15-29세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가족을 이루기 시작하는 연령층까지 포함하고자 했다. 니트족에 속하는 15-29세의 청년층 수는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위기 발발 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에 4천만명 가량이었다.[1] 가장 취약한 이들 – 저학력자, 건강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들 및/또는 이민자 – 은 일자리가 없거나 질 좋은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니트족의 3분의 2 이상은 비 활동 상태, 즉 구직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야기한다. 적절한 공적지원이 없을 경우 가구소득 감소는 빈곤 위험을 높인다. 이 경우 청년들과 그 가족들은 식량, 주택, 의료에 지출되는 필수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들의 웰빙과 건강이 손상될 수 있다. 청년기 중 비 활동 및 실업 기간은 향후 고용 전망 및 소득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5a). 직장생활을 시작할 무렵 청년들이 겪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전통적인 성인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부모와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는 비 활동과 실업은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야기해 건강, 출산, 신뢰 등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Carcillo et al., 2015).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사회와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이 OECD 회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이다. 이 장에서는 청년들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상황을 살펴보고, 고용, 교육 또는 직업훈련 상태가 아닌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며 OECD 국가들이 청년의 고용 및 교육성과 개선을 위해 채택한 정책과 접근방식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었다.

- **젊은이들이 대침체 기간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대규모 감원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젊은이들은 누구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장의 첫번째 섹션에서는 OECD 지역의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와 실직한 이들의 학력수준을 살펴본다. 재학 중이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 및 실업률 지표가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분석은 특히, 니트족과 경제 위기 중 니트족의 숫자 변화 추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니트족은 누구이며 이들이 니트족 상태로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실업 또는 비 활동 상태의 청년들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배경,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구직을 가로막는 장애물 측면에서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니트족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자립을 (재)달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섹션에서는 사회 재진입의 장애물뿐 아니라 주된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로 니트족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니트족 중 학업을 조기에 중단하는 비율과 구직이나 훈련에 필요한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의 비율은?
- 실업이나 비 활동의 남녀간 격차는 큰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소외 가정 출신의 청년이 니트족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실업의 장기적 악영향은 니트족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긴 청년들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세번째 섹션은 젊은이들이 니트족 상태로 남아있는 기간을 살펴보고 이들을 장기적 니트족으로 만드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다.

- **저소득 젊은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 형태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청년 빈곤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이 심각한 소득손실을 흡수하고 일정한 생활수준 보장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덜 관대하고 접근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번째 섹션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지원을 살펴본다.
  - 청년들 중 실업급여나 장애급여, 사회부조 또는 여타 유형의 현금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위기 기간과 그 이후 수급자의 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청년 실업자 중 일정 형태의 소득지원을 받는 이들의 비율은?
  - 청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청년빈곤율의 정도는?
-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니트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 니트족에 대한 국가간 분석을 보면 이들의 교육 또는 고용 진입에 다양한 장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저학력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이므로 마지막 섹션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본다.
  - 학교를 중퇴할 위험에 놓인 학생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 매력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경로 - 특히 질 좋은 견습기회 - 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업무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 니트족이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가? 이행상의 과제는 무엇인가?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s)는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1. 대침체 이후 청년 고용

청년 고용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실업률이나 비 활동성이 계속 높을 경우 경제적 기회와 소득이 상당부분 손실되며 정치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불완전고용은 청년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이 상처는 수년간 지속된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비 활동 및 실업기간이 존재할 경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조기 실직기간을 경험한 청년들은 이후에도 실직할 확률이 높으며(Schmillen and Umkehrer, 2013; Möller and Umkehrer, 2014) 소득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mkehrer, 2015).[2]

이 섹션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국가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대침체 발생 이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4번 지표 "노동시장 진입"도 참고).

청년층이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

2007-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대량 실업은 청년층에게 특히 큰 타격이었다. 이들은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이중성 개념상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가 약할 때에는 업무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청년층이 구직에 곤란을 겪게 마련이다. 위기 후 많은 국가에서 경기 회복이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청년고용률 추세를 반전시켜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실패했다. OECD 차원에서는 고용상태인 15-29세 젊은이의 수는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8% 하락한 반면 전체 고용률은 다소 증가했다(그림 1.1). 이 기간 중 가장 심한 일자리 손실은 침체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국가에서 발생했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의 청년 고용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의 경우 청년층 일자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사라졌다.

프랑스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고용률 하락 정도가 덜했고, 몇몇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일자리 손실을 피했을 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하기까지 했는데 룩셈부르크(38%)와 칠레(20%)가 그러하다(그림 1.1). 양국 모두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들의 고용률이 위기 발생 당시 낮았고 이후 발생한 고용률 증가는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 데에 크게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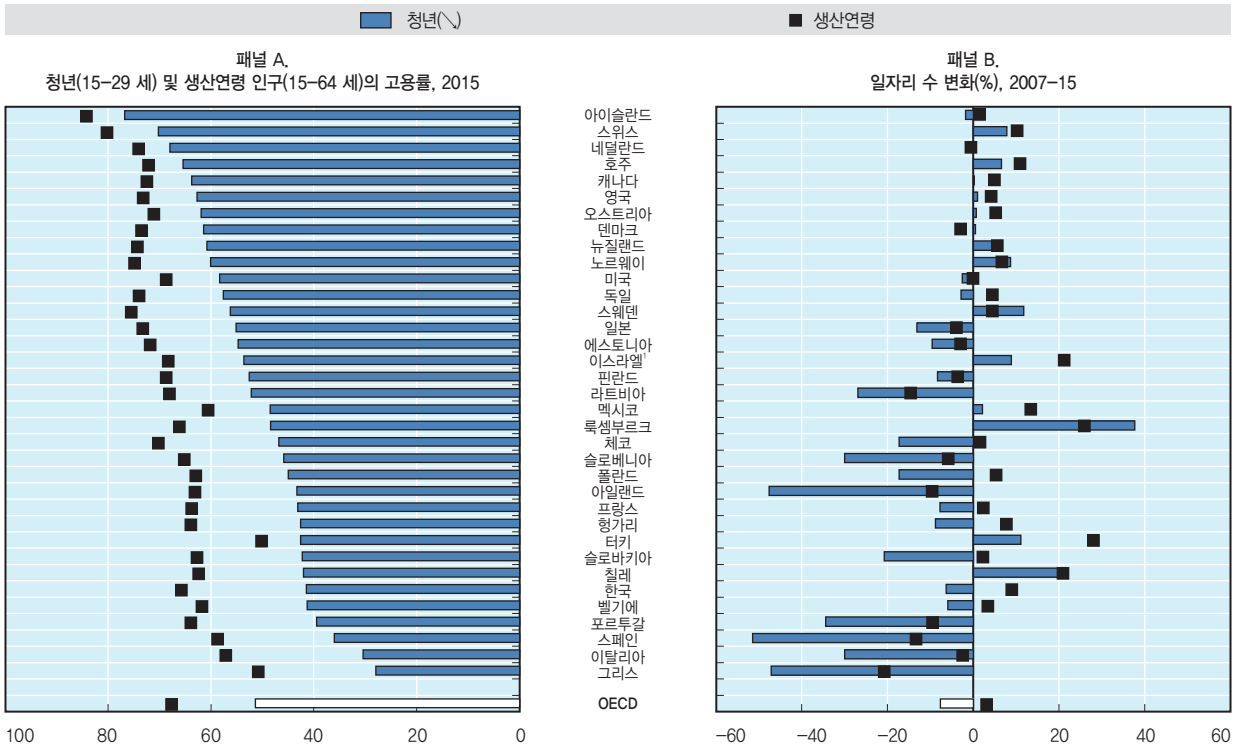
회복세가 너무 약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많은 국가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 회복세가 청년 고용률을 크게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로 위기에 크게 타격을 입은 남유럽 국가들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 의 경우 2011-12년에 두 번째 경기침체를 겪었고 청년 고용률은 회복되지 못했다. 다른 국가들 -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 - 은 청년 고용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회복 중이다. OECD 지역의 청년고용률 평균은 2010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그림 1.2).

저학력 청년들이 특히 일자리 손실에 취약했다.

경제위기 중 저학력(중졸 이하) 청년들이 가장 취약했고 약한 회복세를 보인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실업의 장기적인 여파를 겪을 위험도 가장 높은 집단이다. 고용상태인 중졸 이하 청년의 수는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소했으며 멕시코, 호주, 노르웨이 등 같은 시기에 청년고용률이 증가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이 7년간 OECD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대부분 저학력과 중학력자들이었다 (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그림 1.3의 주석 참조). 반면 대졸자의 고용률은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몇 개 국을 제외하고는 OECD 전체에서 상승했다. 예를 들어 체코의 경우 전체적인 청년고용률은 17% 하락했지만 고학력 청년고용률은 7% 상승했다.

그림 1.1. **청년들이 가진 일자리 열 개 중 거의 한 개는 위기 발생 이후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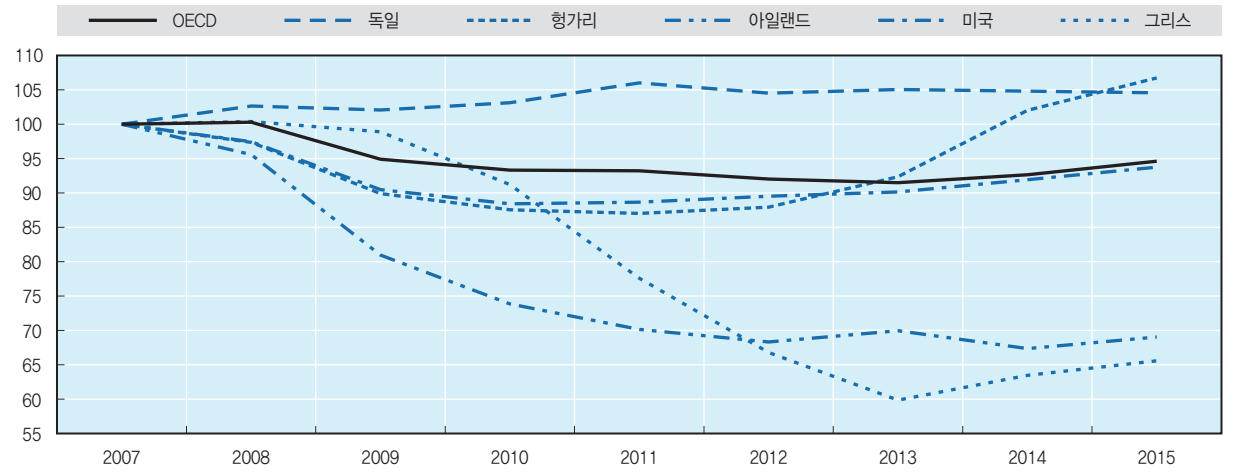
1. 2011년 관련 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00

그림 1.2. **청년고용률은 느리게 회복되었다.**

일부 OECD 국가의 청년고용률 변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007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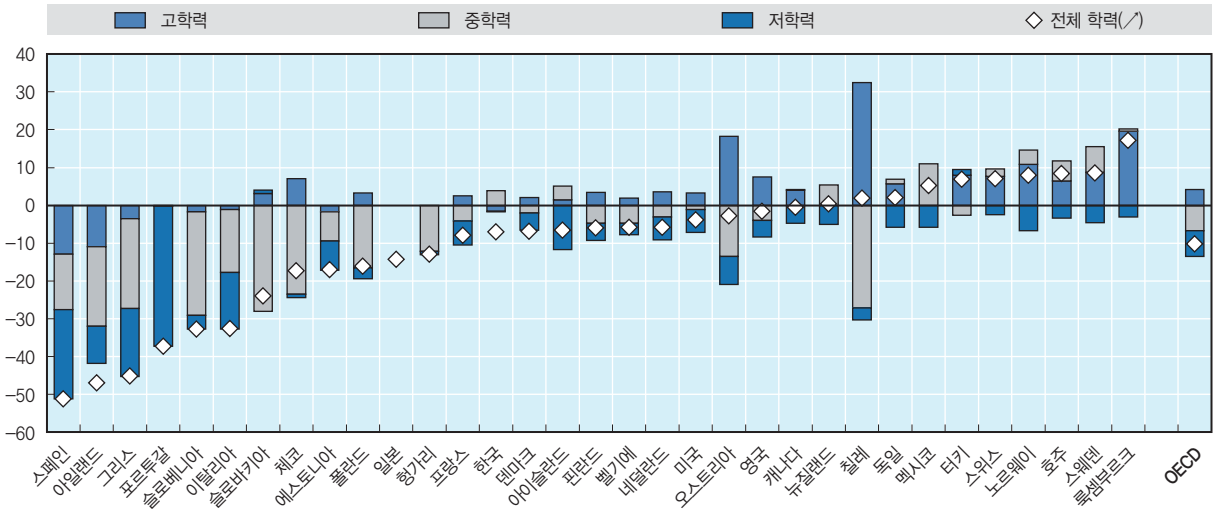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13

그림 1.3. **저학력 청년들이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다.**

15-29세 고용상태인 청년의 수 변화(%),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학력별



주: 수치는 고용상태인 청년의 전체 변화율로서 학력별 고용상태인 청년의 절대 변화값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는 15-24세 집단이 대상이다. 칠레의 경우는 2006-13년 자료, 한국은 2008-13년 자료, 독일, 일본, 뉴질랜드와 터키는 2007-13년 자료이다.

학력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저학력"은 중졸 이하(ISCED 레벨 3C short), "중학력"은 고교 및 중등 이후 비 고등(post-secondary non-tertiary) 수준(ISCED 레벨 3C long에서 레벨 4), "고학력"은 고등 수준(ISCED 레벨 4와 5)을 의미한다.

멕시코와 뉴질랜드의 경우 중(中)학력과 고(高) 학력을 구분할 수 없으며 일본과 한국의 고용상태 청년들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보도 없으므로 OECD 평균을 구하기 위한 수준별 분류값은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2011년 자료가 빠져 있어 2007-14년 비교는 불가능하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한국, 스웨덴의 경우 일부 개인의 학력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어 고용상태인 청년(다이아몬드) 숫자 변화와 학력간 총 편차(variation) 간 차이가 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an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Australia, Germany, Japan and Kore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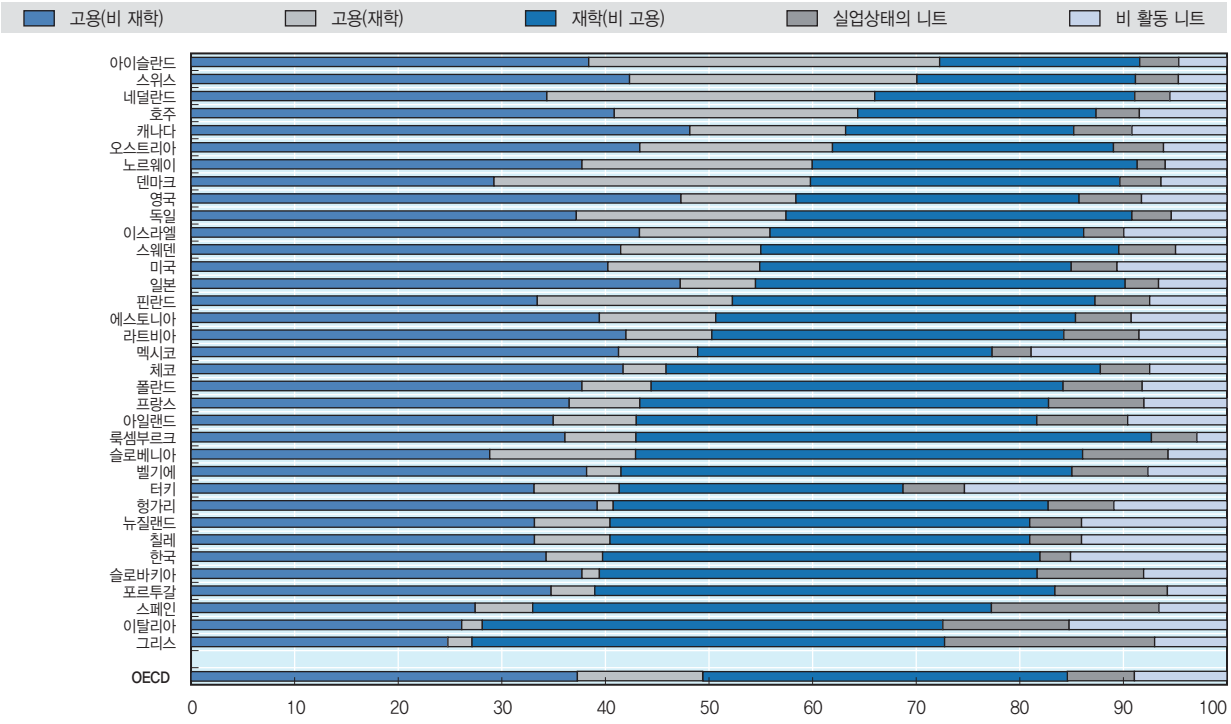
청년근로자 중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 극명한 차이는 학력 수준이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현재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2007년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은데다 일부 국가의 경우 청년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3] 이는 또한 숙련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중 사라졌던 일자리 중 상당수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모든 청년들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비교적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약한 시기는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능력개발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이다(섹션 4에서 자격요건이 취약한 니트족의 능력 향상을 도움으로써 이들이 준비된 상태로 노동시장의 활성화 시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하고 있다).

청년고용률은 많은 젊은이들이 근로와 공부를 병행할 경우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OECD 차원의 청년 고용 상황은 더욱 불평등해졌다. 2015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 성과가 가장 좋은 국가에서는 전체 청년인구의 3분의 2이상이 고용 상태였다. 반면 위기의 타격이 가장 컸던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1/4에서 1/3에 불과했다(그림 1.1).

그림 1.4. **성과가 좋은 국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지위(%), 2014



주: 국가는 청년 고용률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했다. 칠레와 한국, 뉴질랜드, 터키는 2013년 자료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an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Australia, Germany, Israel and New Zea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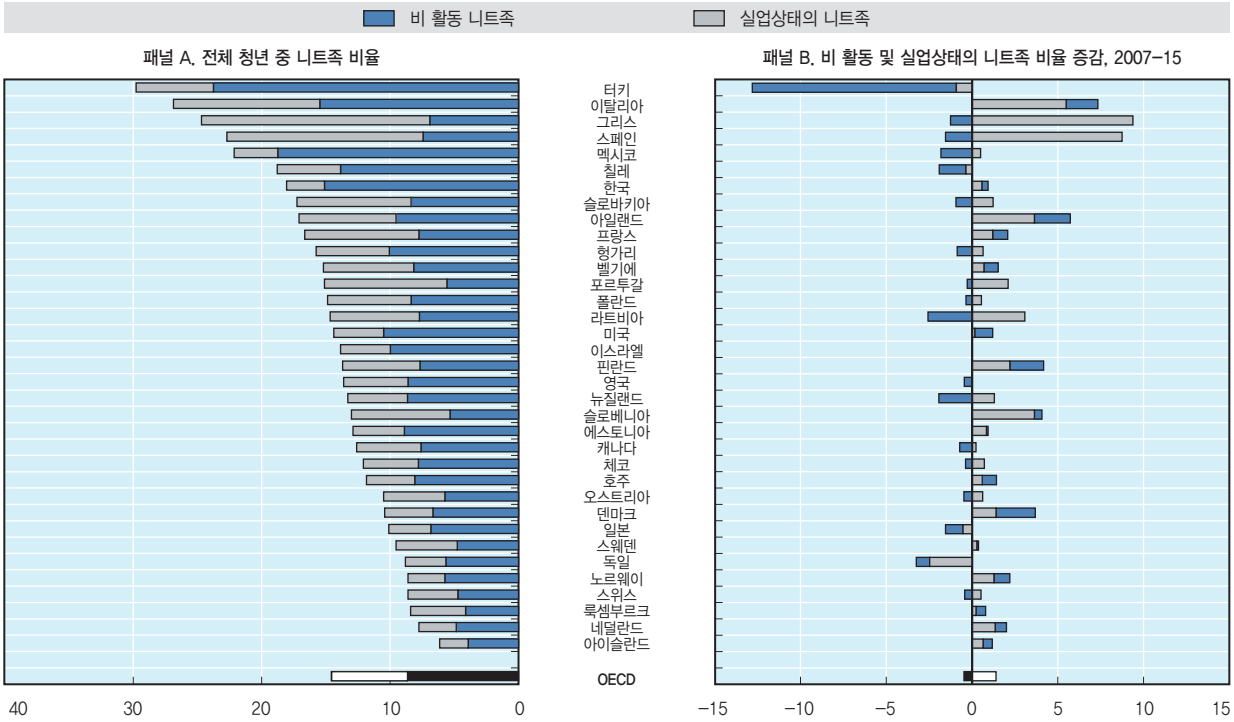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35

청년 고용률의 차이는 좀더 구조적인 요인 -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젊은이들의 비율 - 과도 관련이 있다(그림 1.4).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고용상태인 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바키아의 경우 고용상태의 학생은 스무 명 중 한 명 정도였다. 길지 않은 근로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이 조기 학업 중단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마도 그 이유는 일정시간의 근로가 성실함과 동기부여 등 중요한 삶의 기술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정시간 - 하프타임 미만 - 일할 경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 및 대학 과정에 업무에 기반한 구성요소를 도입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Quintini and Martin, 2014).

니트족의 상당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니트족의 수가 증가했다. 2015년, OECD의 니트족 수는 4천만명이었으며 이들 중 3분의 2이상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소위 "비 활동 니트족"이었다. OECD 평균을 보면 2015년 전체 청년 중 14.6% 가 니트족이었으며 국가별 청년 인구 규모를 감안해 가중치를 적용하면 이 비율은 17% 로 상승한다.[4] 이 비율은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엄청나게 높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전체 청년 중 니트족의 비율은 1/4에서 1/5사이이다.[5]

그림 1.5. **니트족 비율 증가는 대부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반영하고 있다.**



주: 국가는 위에서부터 전체 니트족 비율 기준으로 나열되었다.

이스라엘 자료는 2011년 전후를 비교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비율증감 자료는 없다. 칠레는 2006-13년 자료, 한국은 2008-13년, 이스라엘은 2014년 자료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and OECD National Educational Attainment Classification (NEAC) Database 2015,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Australia, Israel, Korea and New Zealand).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42

니트족을 적극적인 구직자 - 실업상태의 니트족 - 와 구직을 하지 않는 비 활동 니트족으로 구분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니트족의 과반수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활동 니트족의 비율은 터키와 멕시코에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한국, 칠레에서도 상당히 높았다(그림 1.5, 패널 A). 섹션 2 "니트족은 누구인가? 청년 실업자의 프로파일"을 보면 비 활동 니트족은 돌봄의 책임, 건강상의 이유, 약물 문제, 구직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 터키, 멕시코, 칠레 등 -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로 인해 청년층의 비 활동 니트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 활동 니트족들이 반드시 공공근로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등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섹션 4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비 활동 니트족들을 유인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논하고 있다.

실업상태의 청년비율은 일부 국가, 특히 위기에 큰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그리스는 18%, 스페인은 15% 였다. 반면 아이슬란드의 경우 전체 청년 중 2% 만이 실업상태로 구직 중이었으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한국, 독일, 일본, 멕시코는 그 비율이 3% 였다.

위기 발발 이후 니트족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전적으로 실업상태인 니트족 비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 활동 니트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그림 1.5, 패널 B).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니트족 비율의 상승이 오로지 실업상태인 니트족 증가에 의한 것이었으며 비 활동 니트족 비율은 실제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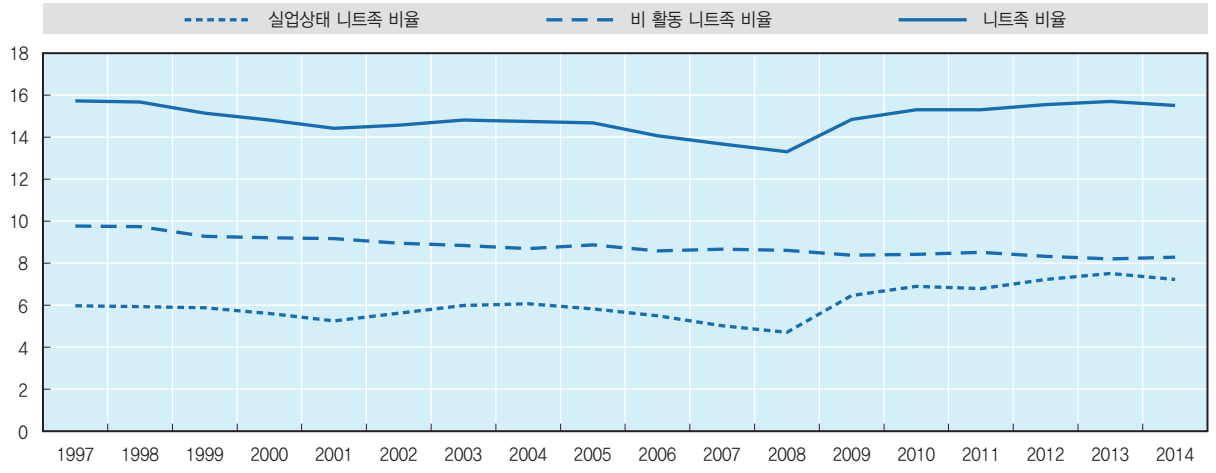
니트족 비율 상승이 고용률 하락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재학 중인 청년의 비율 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OECD평균을 보면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3% 포인트 상승했다(그래프 없음). 이러한 상승은 일자리 손실이 극심했던 일부 국가에서 두드러졌는데 스페인(15% 포인트), 아일랜드(12% 포인트)가 대표적이며 터키(9% 포인트)와 덴마크(8% 포인트)에서도 나타났다.

니트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지만 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다.

니트족 문제 중 대침체 이후 노동 수요 감소에 의해 유발된 부분은 어느 정도이며 구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 다시 말해, 니트족 비율은 노동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감소하게 될까, 아니면 경기 주기를 떠나 니트족의 고용에 장애물(예: 청년들의 숙련기술과 고용주의 요구사항 간의 부조화)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림 1.6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비 활동 및 실업 상태인 니트족 비율의 OECD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상태가 아닌 비 활동 청년의 비율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위기 기간 전체에 걸쳐, 즉 지난 17년간 2% 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속되었다. 그러나 실업상태인 니트족 비율은 경기 주기에 맞춰 명확하게 등락하고 있다. 대침체 기간 중 이 비율은 이전의 경기 침체 기간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2013년에는 7.5% 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는 이 기간 중 관찰된 어떤 값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림 1.6. **니트족의 비 활동성은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업상태, 비 활동 및 전체 니트족 비율, OECD 평균, 1997-2014



주: OECD 평균은 충분한 기간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는 25개국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55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위기 중 심각한 일자리 손실을 겪었지만 OECD의 평균 니트족 비율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2-3%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니트족 문제 중 구조적인 부분은 청년들이 고용에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필요로 하며 이중 일부는 섹션 4에서 다루고 있다.

니트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OECD 국가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

니트족의 높은 비율은 OECD 국가에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시간과 숙련기술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족 문제 중 일부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OECD 국가의 경기가 위기 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 비용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는 이 문제가 OECD 국가에 초래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니트족으로 인한 비용은 이들이 고용상태였다면 수령했을 총 노동소득으로 정의되며 총 노동 비용으로 측정된다(사회보장기여금 포함).[6] 이 비용은 니트족의 사라진 생산성의 대리값(proxy)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는 세 개의 추정치를 제시하는데 상위 추정치(upper bound estimates)와 하위 추정치(lower bound estimates) 그리고 점 추정치(point estimate)가 그것이다. 점 추정치는 실업상태인 청년이 고용상태인 청년보다 소득 잠재력이 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예컨대, 니트족은 다른 청년들보다 학력이 낮은 경향이 있고 돌봄 책임을 맡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제 3장 참고).[7] 상위 추정치는, 만일 고용되었다면 니트족이 평균적으로 동일 성별, 동일 연령의 젊은이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근로 시간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고, 하위 추정치는 니트족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만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성별 및 연령 집단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중위소득 기준 3분의 2로 정의된다.[8] 그러므로 상위 추정치와 하위 추정치는 교육 등 여타 특성의 차이는 무시하고 있다.

박스 1.1. **청년 실업률 측정**

노동시장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실업률, 즉 실업자 대 노동시장 참여자(실업상태이건 고용상태이건) 비(ratio)이다. 이러한 지표를 청년들에게 적용할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청년들이 학생이거나 비 활동 니트족 상태여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청년 비율은 이탈리아의 43%부터 아이슬란드의 83%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그림 1.4).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경기가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별 교육제도 구조의 영향도 받는다. 즉, 청년 노동시장 참여율은 견습제도, 즉 현장직무교육훈련(OJT)과 교실 교육을 결합한 직업 고교 과정이 있는 국가의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두 국가에서 실업상태인 청년인구의 비율이 동일하다 해도 노동력 참여율이 높은 국가는 실업률이 낮은데, 이는 분모가 더 많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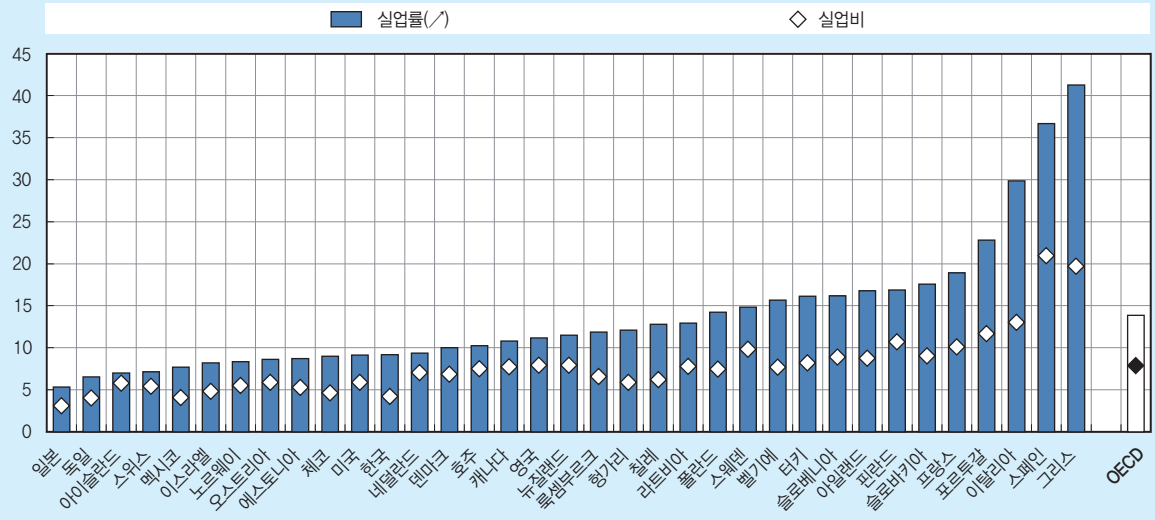
비 근로 학생의 수에 영향 받지 않는 청년실업 지표로는 실업률을 들 수 있다. 이는 전체 청년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만일 모든 청년들이 근로 중이거나 구직 중이라면 (노동력 참여율 100%), 실업률과 비(ratio)는 일치한다.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청년 참여율이 50% 정도라면 실업률은 해당 실업비(unemployment ratio)의 두 배가 된다(그림 1.7).

이 개념적 사안은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의 청년 실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극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 45%는 실업비 22%에 해당하며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40%는 23% 실업비에 해당한다(그림 1.7).

박스 1.1. **청년 실업률 측정(계속)**

그림 1.7. **실업률은 항상 실업비보다 높다.**

실업률과 실업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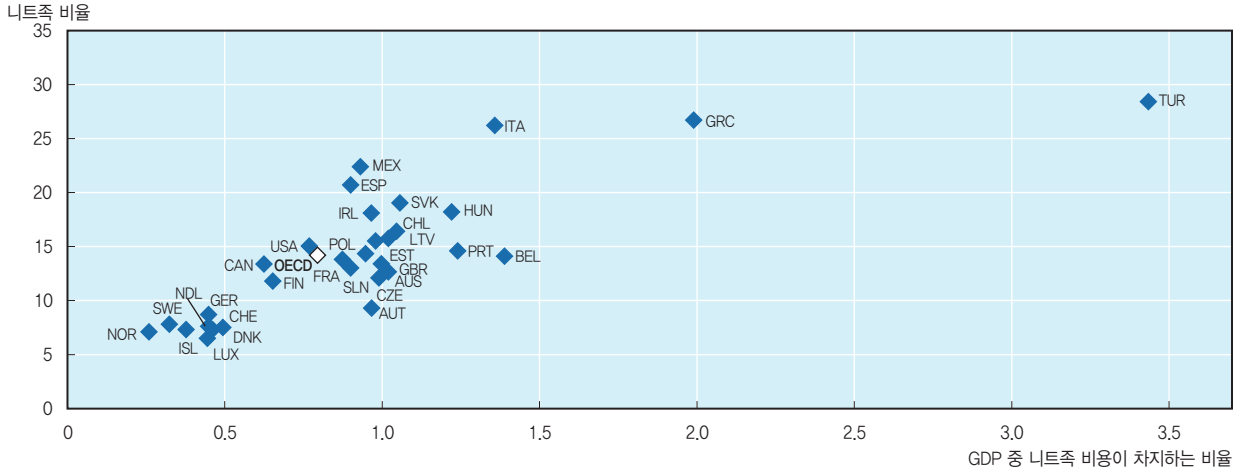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65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해보면 OECD 지역에서 니트족이 2014년에 창출할 수 있었을 총 노동 비용은 3,600억 달러에서 6,050억 달러 사이이며 점 추정치(point estimate)를 따를 경우 5,600억 달러이다. 이는 OECD GDP의 0.9%에서 1.5% 사이에 해당한다. 그림 1.8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 각국의 하위 추정치를 보여준다.[9]

그림 1.8. **많은 OECD 국가의 니트족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니트족 비율과 GDP 중 니트족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치, 2014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SILC, HILDA(Australia), SLID(Canada), CASEN(Chile), SOEP(Germany), ENIGH(Mexico), SILC(Turkey) and the CPS(United States). Data are for 2014 except for Chile and Switzerland (2013), Turkey(2012) and Canada(2011). GDP data from OECD.Stat, http://stats.oecd.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77

니트족의 총 비용은 니트족의 비율과 임금수준의 함수이다. 니트족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비용도 가장 높다. 터키는 GDP의 3.4%, 그리스는 2%에 해당한다. 그러나 니트족 비율이 아주 높지 않아도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 상당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니트족 비율은 중간 정도이나(그림 1.5 참고) 니트족 비율이 두 배나 되는 이탈리아와 상대적 니트 비용(NEET cost)은 비슷하다. 상대적 니트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니트족 비율이 낮은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니트족 현상의 실질적인 순 사회비용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한데 일부 니트족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들의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일을 안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높은 니트족 비율은 건강 악화나 범죄율 상승 등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부 니트족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out-of-work benefit)도 무시하고 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모든 니트족들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된다면, 특히 청년층 니트족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임금과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니트족은 누구인가? 청년 실업자 프로파일

청년실업 및 비 활동의 예방, 완화를 위한 정책을 이행하려면 니트족의 취업이나 학업을 막는 장애물이 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고 나야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욕구에 부합할 수 있다. 니트족들은 다양한 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여러 국가별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 역시 다양하다. 일부 청년들은 학업을 조기에 중단한 탓에 일자리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일부는 - 특히 여성들 - 돌봄 의무를 지고 있을 수도 있다.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이들은 고용이나 교육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을 것이며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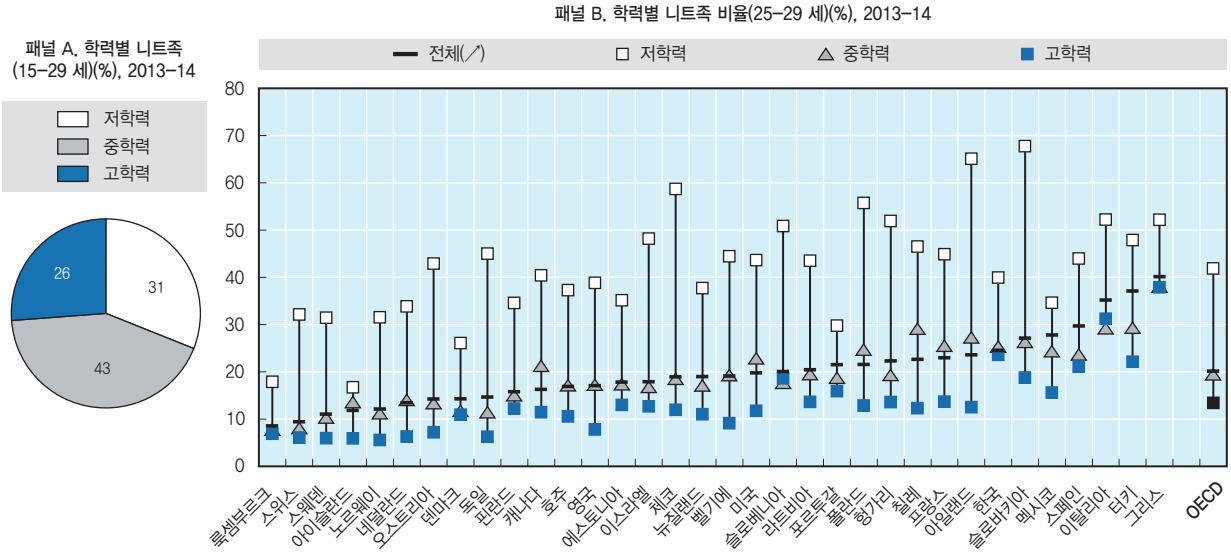
이 섹션에서는 니트족들의 프로파일을 심도있게 구성해보고, 젊은이들이 비 활동 또는 실업상태로 머물러 있는 기간을 살펴보며, 장기적 니트족이 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저학력과 저숙련이 니트족이 될 위험을 높인다.

노동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학력과 숙련기술을 요구하면서 저학력은 니트상태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니트족의 비율은 대졸(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과 비교해 중졸은 3배, 고졸은 1.5배 더 높다. 고교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 2014년 현재 청년(25-34세)층의 17% 가 중졸 이하 - 니트족의 상당비율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체 니트족 중 중졸은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며(그림 1.9, 패널 A), 43% 는 고졸에 그쳤다. 니트족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4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

니트족의 학력 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청년들의 학력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의 부재가 고용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학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니트족이 될 확률이 거의 7배에 달했다(그림 1.9, 패널 B). 칠레의 경우 니트족 비율은 고학력자 대비 중학력자의 경우 2.4배 높았다. 한마디로 좋은 교육을 받을 경우 니트족이 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 학업을 조기에 중단할 경우 니트족이 될 위험이 상당하며, 대부분의 다른 젊은이들이 고졸 또는 고등교육을 받을 경우 특히 그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9. **니트족 비율은 저학력 청년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주: 패널 B 자료는 호주와 칠레, 독일,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2013)를 제외하고는 2014년 자료이다. 일본은 자료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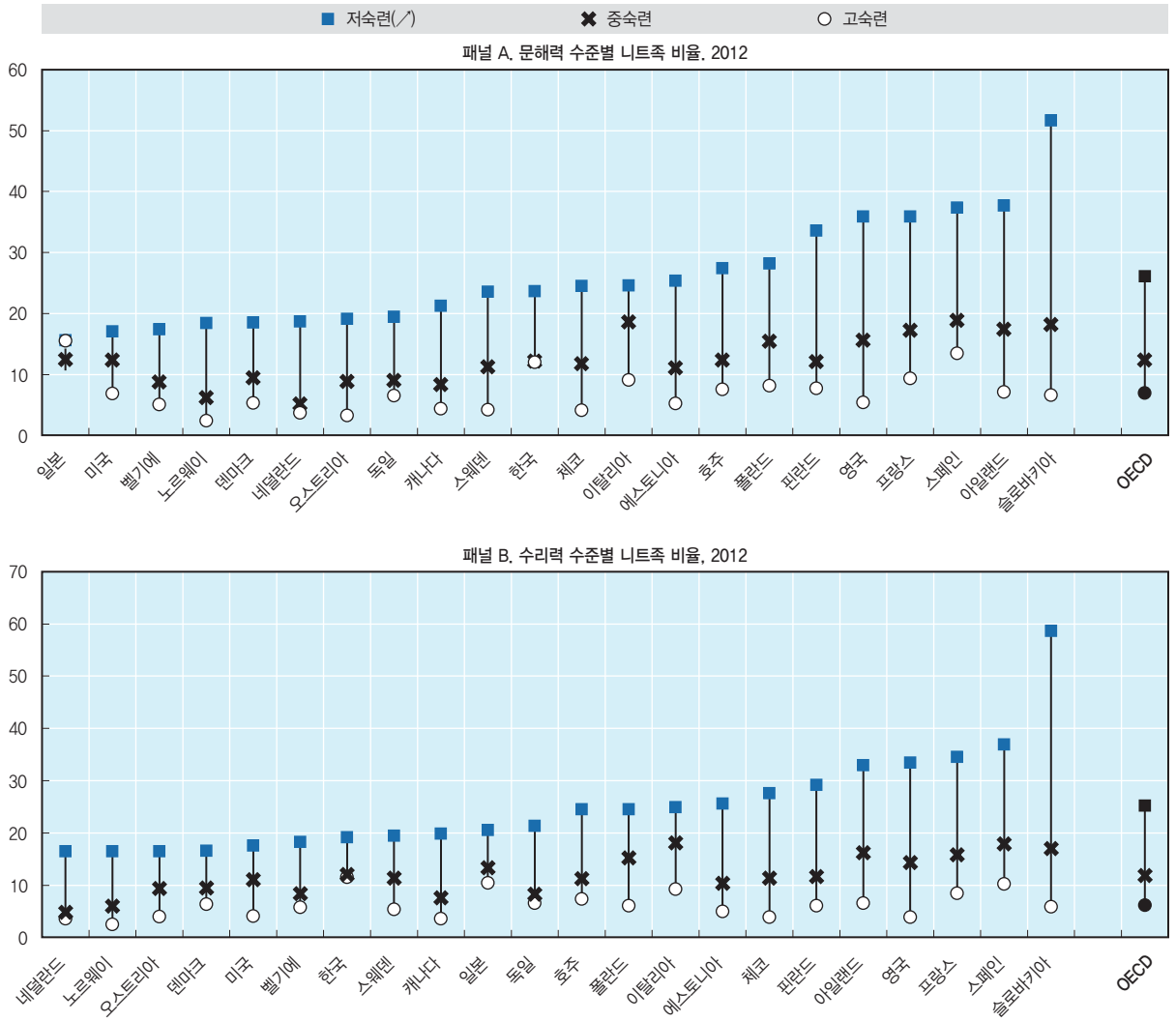
"저학력"은 중졸 이하(ISCED 0-2레벨), "중학력"은 고교 또는 중등 이후 교육(post-secondary) (ISCED 3-4레벨), "고학력"은 고등 교육(ISCED 5-6레벨)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for Australia, Germany, Israel, Korea, Mexico, New Zealand and Turkey, OECD Educa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TRAN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87

기본적인 능력 역시 니트족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역시 취학 전 교육 여부와 이후 읽기, 쓰기, 수학에서의 좋은 성과 간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교육으로 기술(skill)을 갖추게 되며 이는 교육적 성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학업을 조기에 중단하는 것은 문해력과 수리력 저조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어릴 때 기본 문해력 및 수리력 문제로 곤란을 겪은 학생들은 또래들보다 뒤쳐지면서 조기에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저조한 문해력과 수리력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젊은이들이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이 니트족이 될 위험을 낮춰야 한다. OECD 지역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이 중저 수준인 젊은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또래 젊은이들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이 네 배에 달한다(그림 1.10, 패널 A와 B).

그림 1.10. **문해력과 수리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청년 니트족이 될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



주: 문해력과 수리력은 OECD의 국제성인역량 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레벨을 따랐다. "저숙련"은 레벨 1이하, "중숙련"은 레벨 2와 3, "고숙련"은 레벨 4와 5에 해당한다. PIAAC에서 측정한 저(低) 문해력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과제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합할 능력은 부족한 수준을 가리킨다. 저(低) 수리력은 복잡한 수학적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하며 문제해결 전략을 덜 사용하는 수준을 말한다.

출처: OECD(2015),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Publishing, Paris (based on the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20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890

비 인지적 능력 역시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Heckman et al., 2006). 성실성, 감정적 안정성 또는 새로운 경험에의 개방성 등의 특징은 학교를 마치고 고등교육을 받으며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얻는데 있어 지능지수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다(박스 1.2 참고). 이러한 요소들은 또한 건강과 준법행위, 기타 사회적 성과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비인지적 능력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지적 능력보다 단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기절제, 집단 업무 능력, 감정 절제 능력 등이 여러 접근방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접근방식 중에는 두 개의 중요한 국가적 프로그램인 "Head Start"와 "Jobs Corps"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십대와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박스 1.6 참고).

박스 1.2. **비 인지적 능력, 교육 및 노동시장의 성과**

학업기간과 인지적 능력(집중력, 기억력, 문제해결력 등 지능지수 및 여타 능력 시험으로 측정되는 능력)이 소득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년간 인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특성이나 비인지적 능력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비 인지적 능력이 조기 학업중단 등 교육적 성과 및 학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상위 다섯개" 성격적 특성 - 성실성, 경험에의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감정적 안정성이라고도 함) 중 첫 두 개를 통해 교육적 성취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미국은 Goldberg et al., 1998; 호주는 Báron and Cobb-Clark, 2010 과 Van Eijck and De Graaf, 2004; 유럽국가는 Almlund et al., 2011; and Brunello and Schlotter, 2011). Heckman, Stixrud and Urzua(2006)에 따르면 성실성과 같은 성격적 특성은,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경우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성실성은 또한 지능만큼이나 좋은 점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Poropat, 2009). 감정적 안정성 역시 학교에서의 좋은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이다.

비 인지적 능력은 궁극적으로 학문, 가족, 사회, 고용상 성과를 개선시켜줄 "내부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Almlund et al., 2011; Cunha and Heckman, 2007). 직업과 학문적 성과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서로 중복된다. 예를 들어, 둘 다 제시간에 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정도는 다양하지만 지능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 인지적 능력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능의 중요도는 직업의 복잡성에 커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성실성은 숙련에서 준 숙련 및 비 숙련 노동까지 포괄하는 일자리에서 요구될 수 있다. 해당 연구자료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비 인지적 능력은 가정환경과 인지적 측면을 통제하고 난 후라 할지라도 교육, 노동시장, 여타 사회적 성과를 인지적 능력만큼이나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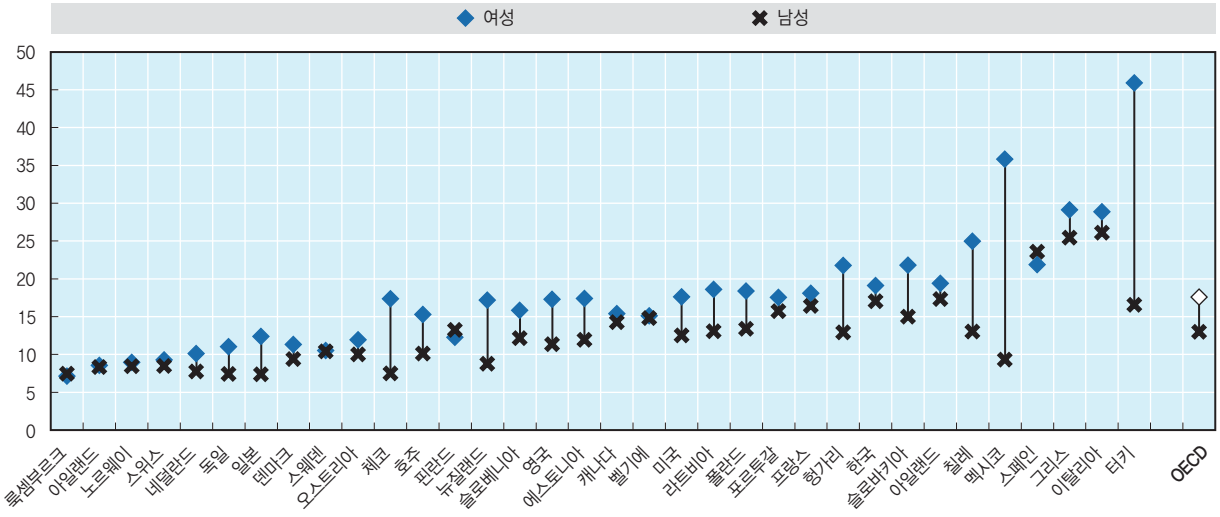
연구에 따르면 비 인지적 능력 중 최소 절반 정도는 아동의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유전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능력은 어린 나이에 형성되며 바꾸기 어렵지만 성격적 특성은 경험과 전문화된 개입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많은 성공적인 개입은 비 인지적 특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 강화 조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 고용, 교육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준다(Carcillo et al., 2014). 혁신적인 학교 프로그램, 방과후 지원, 멘토링, 견습 제도, 근로 경험,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들은 모두 비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니트족 비율은 여성들에게 높게 나타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이 주된 이유이다.

교육의 부족이 청년 비 고용의 가장 큰 요인이기 하지만, 여성일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OECD 전체에서 니트족이 될 확률이 1.4배이다(그림 1.11). 평균값은 이러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숨어 있다. 일부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의 경우 남녀간 격차가 미미하다. 반면 멕시코나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니트족이 될 확률이 남성의 서너 배에 달한다. 한가지 이유는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분배, 즉, 여성들이 무급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대부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체코 등 소득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도 니트족 비율의 남녀차이가 상당하여 여성 니트족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그림 1.11.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들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이 높다.**

15-29세 여성과 남성의 니트족 비율, 2014



주: 일본은 15-24세, 미국은 16-24세이다. 칠레와 터키의 경우 2013년 자료이다. 그 외 모든 국가는 2014년 자료이다.

국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반적인 니트족 비율의 오름차순으로 나열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U LFS), Canada's Labour Force Survey,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Mexico's National Occupation and Employment Survey(ENOE), the US Cur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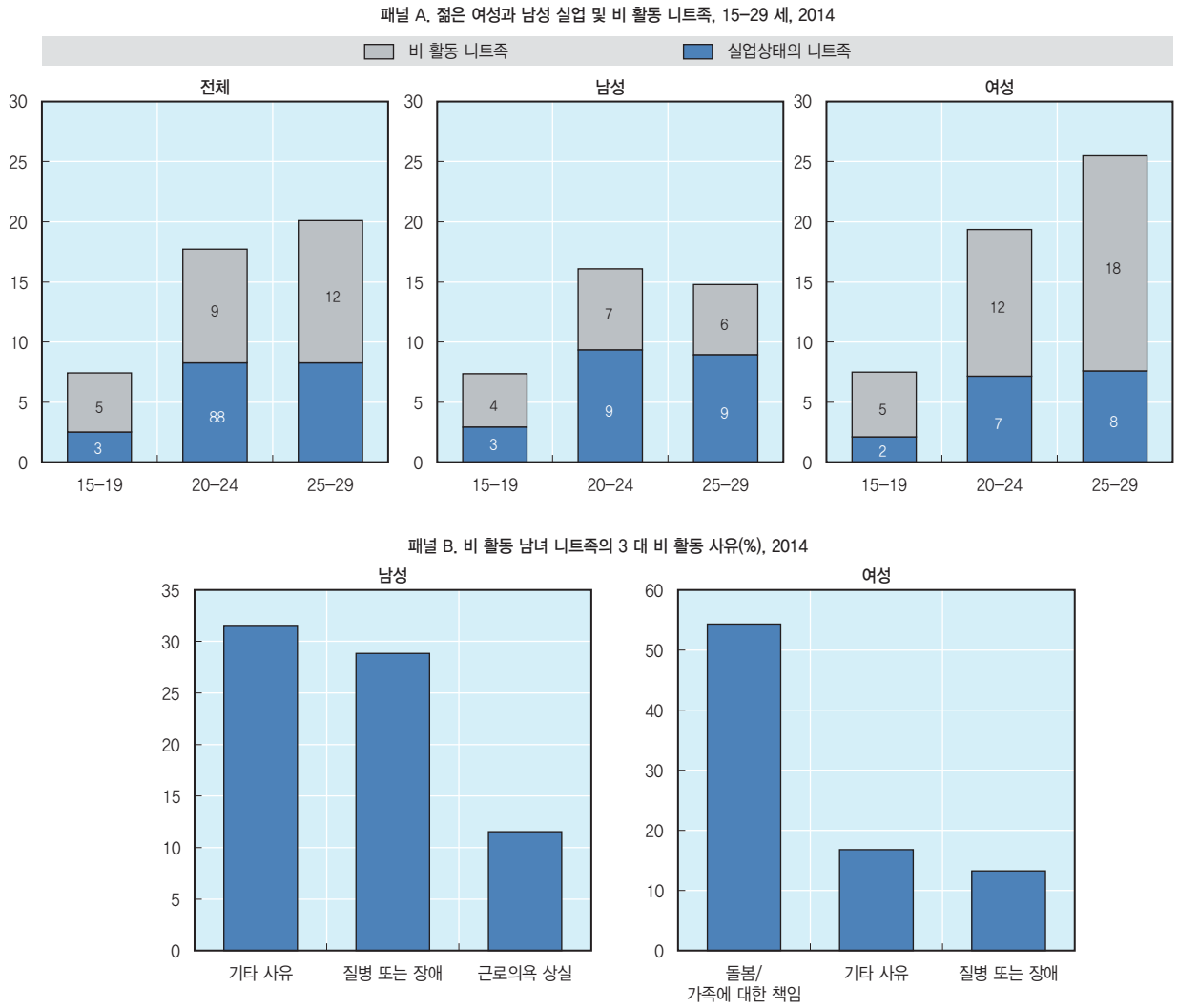
Population Survey(CPS), the Japanese Labour Force Survey an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for Australia, Germany, Korea and New Zeala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TRAN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03

문화적 차이는 차치하고 여성들의 비 활동성이 높은 주된 이유는 육아 책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의 경우는 건강이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성의 절반 이상은 돌봄 및 가정에 대한 책임을 비 활동성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림 1.12, 패널 B)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고용률이 일반적으로 낮은 점을 볼 때 이는 아마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에서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엄마의 절반 정도만이 고용상태로 있다(그림 1.13). 남성과 달리 비 활동 여성 중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소수이다. 일부는 자녀가 어릴 때 집에서 직접 육아를 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녀가 성장하면 일터로 나서는 엄마들이 많아진다(그림 1.13). 그러나 일부는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좀더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더 저렴하고 많이 제공된다. 실제로 저렴한 보육과 자녀친화적 고용 형태(child-friendly employment arrangements)는 젊은 엄마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핵심이 되는 요건이다(박스 1.3).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고연령 집단의 경우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니트족의 남녀간 격차는 이 연령대에서 좀더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남녀 니트족 비율은 어린 청년층인 15-19세 연령집단에서는 동일한데, 이 연령대에 속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직 재학 중이기 때문이다(그림 1.12, 패널 A). 하지만 그 이후 여성의 비 활동성이 남성의 두 배로 늘어나면서 20-24세 연령대는 남녀 격차가 3% 포인트로 벌어진다. 25-29세 연령집단의 경우, 여성 니트족 비율은 26% 로 남성보다 11% 포인트 높다. 이 격차 내에서, 비 활동 니트족의 비율은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

그림 1.12. **니트족은 20대 후반의 여성 비율이 특히 높으며 돌봄 책임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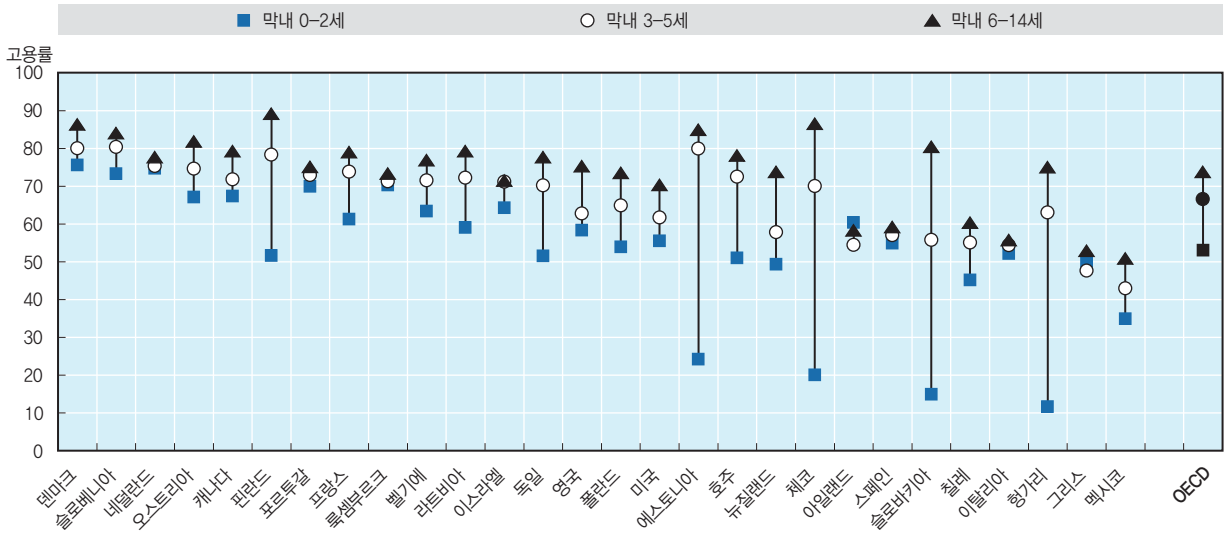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U LFS), Canada's Labour Force Survey,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Mexico's National Occupation and Employment Survey(ENOE),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the Japanese Labour Force Survey and the OECD Education Database (for Australia, Germany, Korea and New Zealan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TRANS). Australia, Germany, Israel, Japan, Korea, Mexico and New Zealand excluded from Panel B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16

그림 1.13.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용률이 낮았다.**

막내 연령별 엄마 고용률, 2013



주: 호주는 2011년 자료, 덴마크와 핀란드는 2012년 자료이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자료가 없다.

각국은 막내가 0-14세인 엄마의 고용률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했다.

출처: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21

박스 1.3. **높은 보육비: 엄마들의 유급 근로에 장애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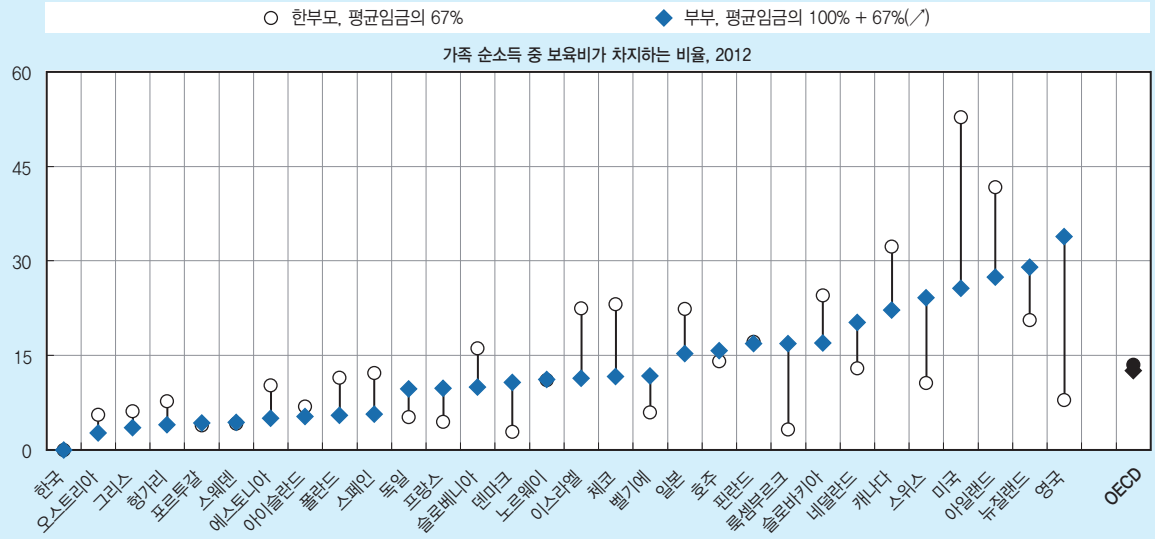
OECD 전체에서 보육비는 고용된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의 순 가족소득의 평균 15% 를 차지한다(그림 1.14). 그러나 비용은 OECD 전역에서 차이가 크며 한부모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한부모의 보육비가 순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아일랜드의 경우는 42%이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부부는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보육비에 지출한다. 이렇게 높은 비용은 고용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일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엄마 쪽이다. 몇 년간 노동시장을 떠나있다가 재취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여성들은 재취업 시 임금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Budig and England, 2001).

자녀를 둔 니트족, 특히 여성들의 취업을 돕거나 이들이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육비용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과후 돌봄을 포함해 보육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받는 질 좋은 공식적 보육은 사회발전 및 아동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 출신의 아동들에게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Heckman, 2008). 이 장에서 누차 설명하고 있듯이 니트족은 저학력 및 저숙련 청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부모가 저학력이거나 실직 상태일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데 도움이 된다.

박스 1.3. **높은 보육비: 엄마들의 유급 근로에 장애물이 된다.(계속)**

몇몇 OECD 국가에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가 6개월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정부 지원 보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진다. 스웨덴에서는 지방정부가 한 살 이상의 아동에게 주당 최소 15시간의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거나 재학중인 경우에는 그 시간이 풀타임으로 늘어난다. 다른 국가들은 한부모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슬란드(구체적으로는 레이캬비크)에서는 축소된 양육비를 지급하며 벨기에(플랜더즈 지역)에서는 한부모에게 보육 서비스 우선권을 준다.

그림 1.14. **OECD의 보육비는 순 가족소득의 15% 수준이다.**



주: 자료는 (1) 평균 소득의 67%를 전일제 소득으로 버는 한부모가 일반적인 보육센터에서 종일 돌봄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자기부담 보육비, (2) 평균소득의 100+67%를 전일제 소득으로 버는 부부의 경우이다.

OECD 평균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평균이다.

출처: Tax and Benefit System: OECD Indicators, 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33

출처: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4 Edition.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urydice(2016), Description of National Education Systems, Eurydice, Brussels, https://webgate.ec.europa.eu/fpfis/mwikis/eurydice/index.php/Countries; OECD(2016), Tax and Benefit Systems: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건강상태가 열악한 청년은 니트족이 될 확률이 네 배 높다.

니트족 중 비교적 적은 비율 - OECD 평균 7% - 만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건강상 이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고한 비율은 5분의 1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니트족 중 소수만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의 질병이나 장애는, 특히 남성의 경우 니트족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전조가 된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는 구직과 업무경력 구축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 니트족은 평균적으로 비 니트족 청년에 비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섯 배 많으며(그림 1.15, 패널 A), 건강에 의해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두 배 이상이다(패널 B, 그림1.15). 상당 비율의 남성과, 그보다 비율은 낮지만 여성 비 활동 니트족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주된 이유로 건강문제나 장애를 꼽고 있다(그림 1.12, 패널 B).

일부 니트족들은 영구적으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특정 유형의 일은 할 수 있거나 일정 시간만큼은 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작업장 여건을 특별히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물리적 제약이나 유연한 근로 조건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씨름해야 할 수도 있다. 질병과 장애는 또한 학교나 대학 공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업 출석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의 경우,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며 15-24세 젊은이 4명 중 1명이 이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OECD, 2012a). 발병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정신질환 중 절반 정도는 14세 이전에 발병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학교를 자퇴할 확률이 높다(OECD, 2015c).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5분의 1 - 그리고 중증질환자의 4분의 1 - 이 학교를 자퇴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그 비율은 14% 에 불과하다. 조기 학업중단과 실업 및 비 활동 간에 위에서 밝힌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정책조치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섹션 4).

그림 1.15. **니트족은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패널 A.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 니트족 청년 대 니트족 청년 비, 15–29 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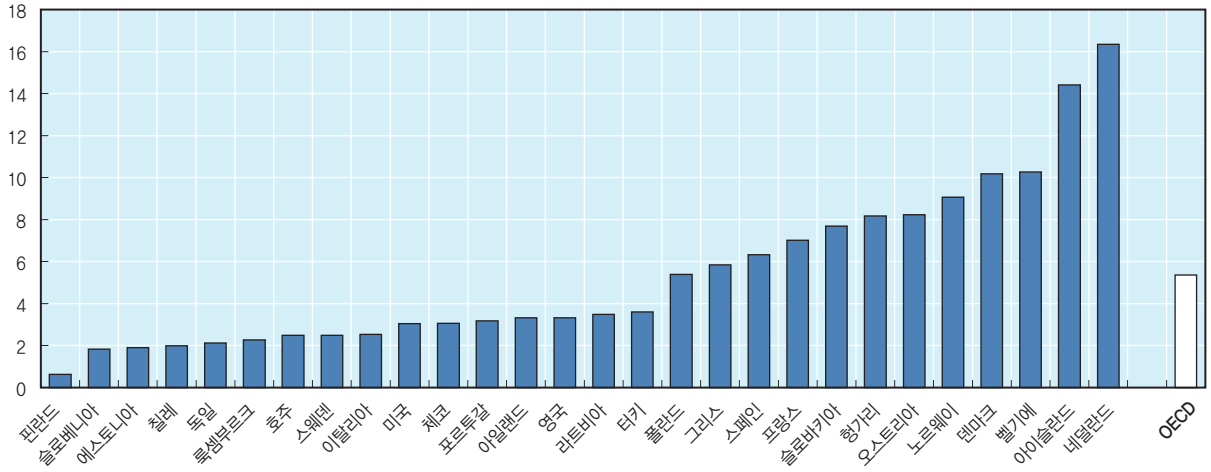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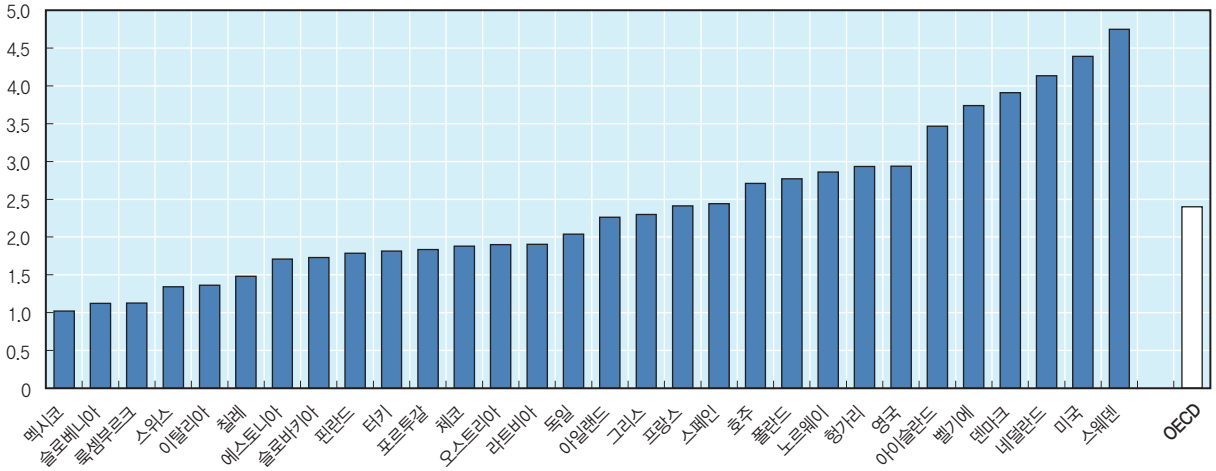


그림 1.15. **니트족은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계속)**

패널 B. 건강상 이유로 일상생활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 니트족 청년 대 니트족 청년 비, 15–29 세, 2014



주: 칠레(2013)와 터키(2012)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4년 자료.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Germanys Socio-economic Panel(SOEP),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47

청년 이민자들은 니트족이 될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로 니트족 중 외국에서 출생한 청년의 비율은 OECD 전체에서 13%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청년들은 자국 출생자에 비해 니트족이 될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거주국가 외 지역에서 출생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이 1.5배이다. 외국 출생 청년들이 니트족이 될 위험이 높은 것은 거주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력이 낮거나 차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낮은 언어 구사력은 저학력으로 이어져 불리함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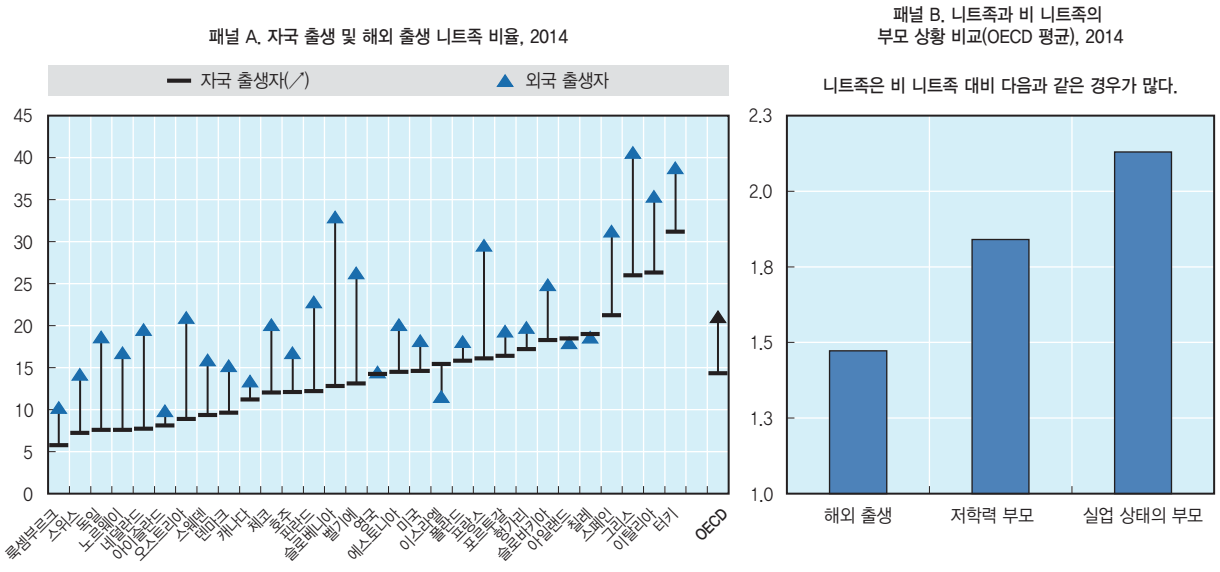
니트족이 될 상대적인 위험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니트족 비율이 낮은 여러 국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청년들이 자국 출생 청년 대비 니트족이 될 확률이 2-2.5배 정도였다(그림 1.16, 패널 A). 폴란드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었으며 이스라엘, 아일랜드, 칠레의 경우 외국 출생 청년이 오히려 니트족이 될 확률이 더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출생국가와 이민의 이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로 향하는 청년들은 난민으로 외국을 찾는 청년들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이 낮다. 그리고 고학력 국가 출신자들은 구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상태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거주국 언어 구사능력 역시 장점이 된다.

저학력 또는 실업상태인 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업 또는 비 활동을 야기하는 불리한 요인 중 상당수 (예: 저학력, 기술(skill) 부족, 정신질환이나 조기임신 등 건강 문제)가 부모로부터 자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지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전조가 된다(Clark, 2014). 니트족들은 다른 젊은이들 대비 부모가 중졸 이하일 확률이 80% 더 높고 부모가 실업상태일 확률이 두 배 더 높다(그림 1.16, 패널 B). [10]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 또는 비 활동 청년 중 상당 비율은 불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니트족의 3분의 1 가량은 부모가 실업상태이거나 최대 중졸 학력이라고 볼 수 있다(비 니트족의 두 배).[11]

그림 1.16. **니트족은 해외 출생한 경우가 많고 불우한 가정 출신이 많다.**



주: 패널 A에서는 각국을 전체적인 니트족의 오름차순으로 나열했다. OECD 평균은 비 가중평균이다.

패널 B는 각 특징을 공유하는 전체 청년 대 니트족의 비를 보여준다. 부모 학력 및 고용 상태에 관한 정보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만 나와 있다.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는 출생 국가 정보가 없다.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터키의 경우 가족 배경 정보가 없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Panel A); OEC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household surveys(Panel 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59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대물림을 견인하는 요소는 많다. 예를 들어, 저학력 부모가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없을 경우, 부모의 낮은 학력은 자녀 학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업상태인 부모는 자녀의 구직 기회를 도울 수 있는 직업적인 (또는 여타) 인맥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녀가 니트족이 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사교능력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은 근로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주요 요소이며, 이 점에서 청년층과 저학력자는 특히 불리한 상황이다(Pellizzari, 2010; Kramarz and Skans, 2013).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목표집단이 분명한 집중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빈곤 아동을 위한 일부 조기 개입 – 페리 스쿨 프로젝트(Perry School Project)[12] 와 좀더 최근 프로그램으로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 은 참여 학생들의 성격과 학교 성적에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Heckman et al., 2009). 섹션 4에서 논하고 있듯이, 불리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개입은 능력과 사회, 경제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한다(Kautz et al., 2015).

니트족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 요소들 외에, 생활형태도 청년 니트족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지만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다. 물론 니트족이라는 지위 자체가 가구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낮으면 독립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니트족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빈곤 위험이 더 높은데, 혼자 살거나 가구 내 누구도 소득이 없을 경우 특히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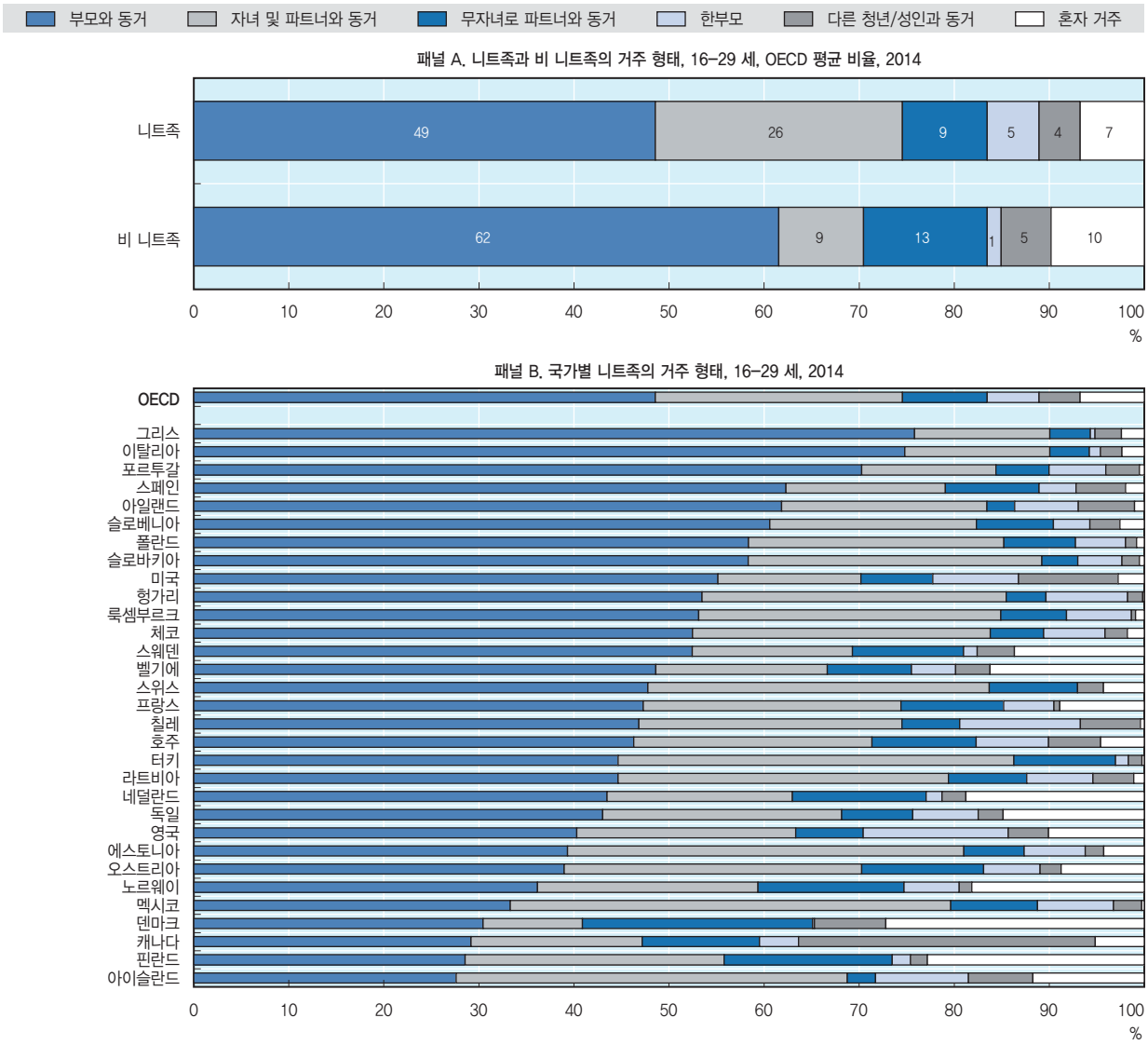
하지만 평균적으로 실업상태인 비 활동 니트족의 경우, 비 니트족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적다(그림 1.17, 패널 A). 전체 니트족의 절반 정도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반면, 비 니트족은 거의 3분의 2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는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부모의 집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니트족 중 상당 비율인 26% 는 파트너 및 최소 한 명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비 니트족의 경우 그 비율이 9% 에 불과하다. 이는 니트족이 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니트족 지위와 자녀 유무간의 상관관계는 위에 나타나 있다. 만일 부모 중 한 명이 일하고 있다면 다른 한 명 (대개 엄마)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비용이 높을 경우 특히 그렇다.

자녀와 동거하는 일부 한부모들의 경우 비 활동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수도 있다. 니트 족 중 한부모 비율은 비 니트족의 다섯 배에 달해 각각 5% 와 1% 이다. 니트족 중 한부모 비율은 영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니트족의 15% 가 한부모였다. 이들은 구직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을 택한다. 한부모들은 부부가 동거하며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비해 육아 대책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다. 또한 보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들을 위해 최저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용활동 요건을 전혀 또는 거의 두지 않고 있다. 한가지 예는 영국의 소득 지원 급여(Income Support Benefit)로 만 5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며 활동 요구 사항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기에는 니트족이 아니지만, 청년의 20%는 장기적 니트족이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니트족으로 머물러 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청년 니트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단기간 니트족 상태로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전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이나 여행 등으로 잠시 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회생활 초반에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나서 잠시 비 활동 또는 실업 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고용이나 교육에서 벗어난 상태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며, 심지어 상처가 남아 미래의 고용 기회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필요 정보가 나와 있는 16 개국의 니트 상태 지속 기간을 살펴보았다.[13]

그림 1.17.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니트족은 대개 부모와 사는 경우가 적다.**



주: 패널 B에서는 부모와 거주하는 니트족 비율의 내림차순 기준으로 국가를 위에서부터 나열했다. 패널 B의 "혼자 거주"는 젊은이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젊은이/성인과 동거"는 젊은이가 자신의 파트너는 아닌 최소 한 명의 젊은이 또는 30세 이상 성인과 동거하는 것을 의미(자녀가 있을 수 있음) 한다. "한부모"는 청년이 파트너 없이 최소 한 명의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무자녀로 파트너와 동거"는 자녀 없이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사는 청년을 의미한다. "자녀 및 파트너와 동거"는 젊은이가 배우자/파트너 및 최소 한 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부모와 동거"는 젊은이가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경우, 부모나 다른 성인과 동거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있는 한부모 또는 부부로만 구분 가능하다. 그래서 한부모 비율과 파트너 및 자녀와 동거하는 니트족 비율이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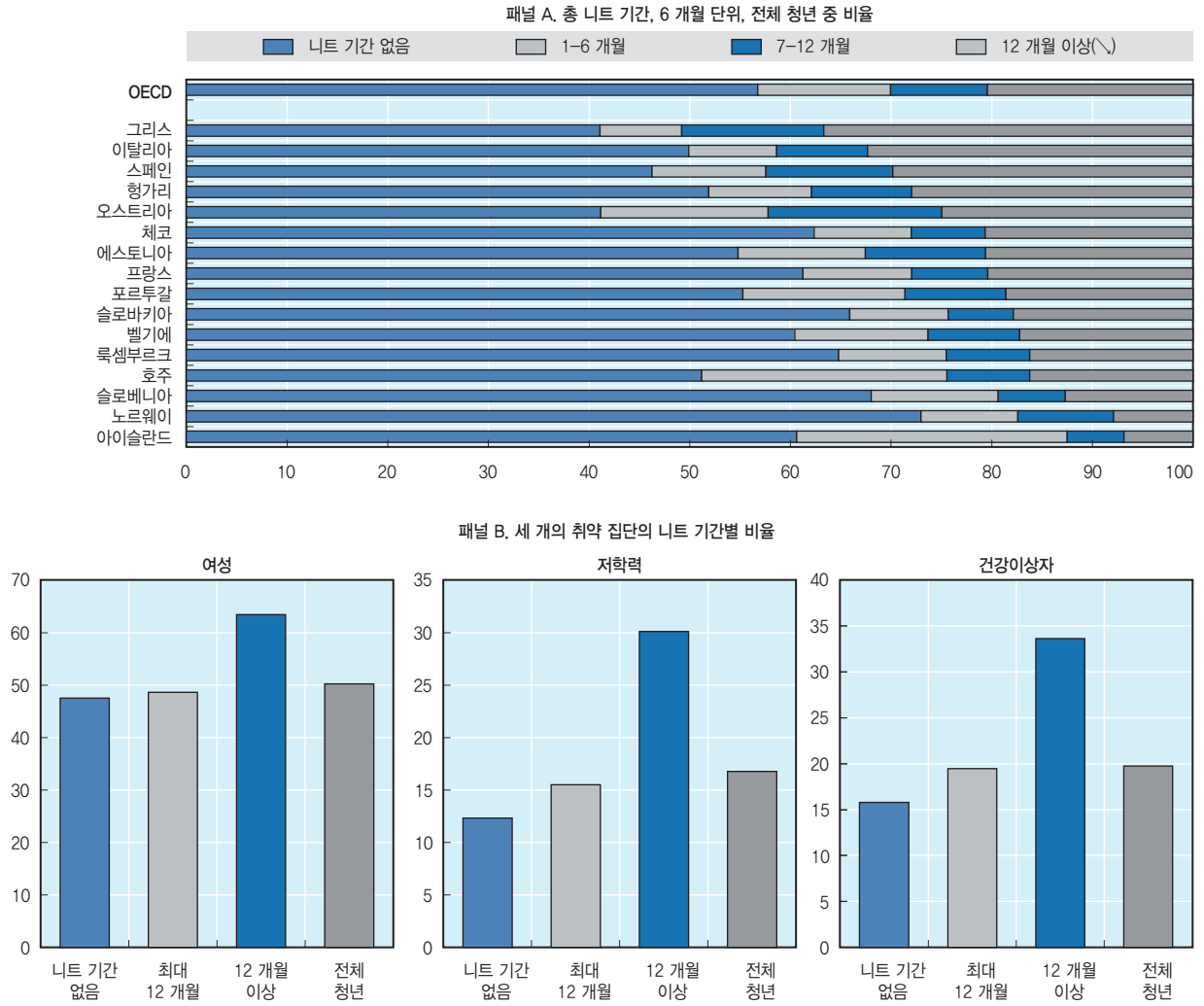
칠레와 스위스는 2013년 자료, 터키는 2012년 자료, 캐나다는 2011년 자료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Germanys Socio-economic Panel(SOEP),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anada's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SLID),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Mexico'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ENIGH),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63

평균적으로 전체 청년 중 거의 절반이 지난 4년 중 길든 짧든 일정기간 니트 상태를 경험했다(그림 1.18, 패널 A). 하지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청년의 거의 4분의 3 (73%)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한번도 니트상태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스의 경우 41% 만이 그러했다.

그림 1.18. **전체 청년의 절반은 어느 시기에건 니트족이 되며, 그 중 일부는 1년 이상 니트족 상태로 머문다.**



주: 장기 니트 상태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모든 OECD 국가에 대해 나와있지는 않다. 패널 A에서는 4년간 니트 기간 12개월 이상인 청년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국가를 나열했다.

검열된 니트 기간은 관찰 기간과 함께 산출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 OECD 평균은 자료가 나와있는 국가들을 바탕으로 했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평균이다.

표본 집단은 2009년 1월, 15-29세 청년들이다. 이들은 2012년 12월까지 48개월간 관찰되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관찰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였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longitudinal 2012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2009-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79

니트족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니트 상태로 머물러 있다. OECD 국가에 거주하는 전체 니트족의 3분의 1가량 (31%)은 2009-12년 사이 최대 6개월간 실업 또는 비 활동 상태였다. 거의 절반 (47%)은 1년 이상 학업도, 고용도 아닌 상태였다. 전체 청년의 약 5분의 1이 이에 해당한다. 위기로 인한 타격이 가장 컸던 국가의 청년들이 가장 위험이 크며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청년의 30% 이상이 1년 이상 니트족 상태로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청년들의 실업 또는 비 활동 시기는 중단없이 단 한번의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니트족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경우, 즉 한동안 니트족이었다가 학업이나 근무를 재개한 후 다시 니트족이 되는 청년 비율을 매우 낮았다 (5%) (그래프 없음).

젊은 여성들이 특히 취약했다(그림 1.18, 패널 B). 이유를 유추해보면, 최소한 일부 OECD 국가의 경우 여성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장기적으로 니트족이 될 확률이 높으며 이후 취업하거나 복직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학력 젊은이들의 경우(고졸 미만) 에도 장기적으로 니트족이 될 확률이 높다. 저학력 청년의 경우 전체 청년 인구의 17% 를 차지하지만 이들 중 30% 가 12개월 이상 니트족 상태였다. 또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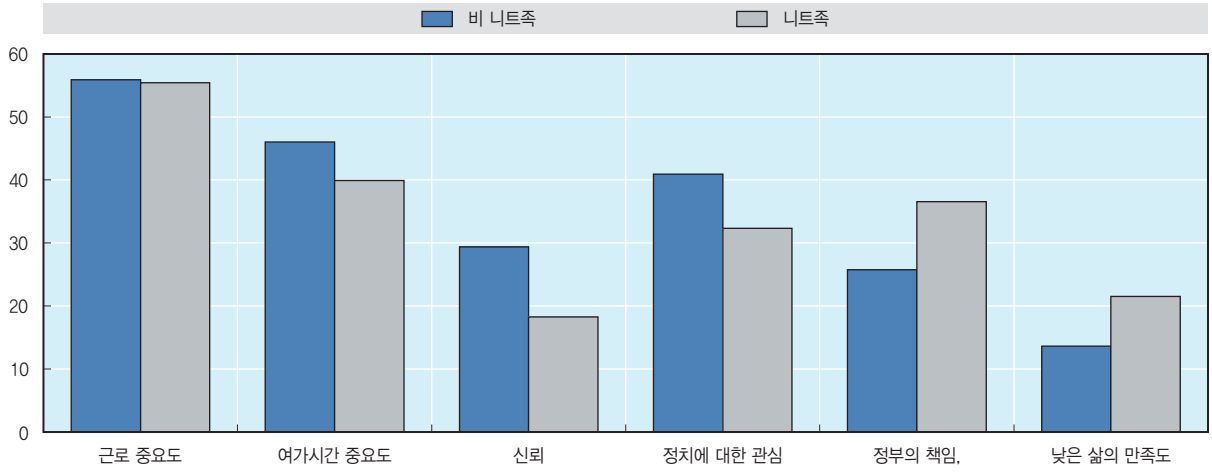
니트족은 행복 및 신뢰 지수가 낮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니트족은 사회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 역시 여타 청년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지만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니트족은 비 니트족과 마찬가지로 근로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림 1.19). 여가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 니트족 청년들만큼 가치를 두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비 니트족 청년들은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여가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니트족 청년들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트족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좀더 높았다. 니트족의 22% 가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비 니트족의 경우는 그 비율이 14% 였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자나 비 활동자의 대다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다면 노동시장에 기꺼이 편입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비 자발적 비 활동성이나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개인적으로 여파를 미칠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된다. 장기간 니트족이 될 경우 고립과 사회에 대한 관심 저하, 불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니트족 청년 중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18% 에 불과했으며 비 니트족의 경우는 29% 였다. 청년 니트족들은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적다. 비 니트족의 40% 가 정치에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관심이 많다고 답한 반면, 니트족은 3분의 1 미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은 니트족이 더 높았다. 비 니트족 청년들의 경우는 26%, 니트족은 37% 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고용상태이거나 재학중인 청년에 비해 니트족들이 급여 제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9. **니트족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약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정치에 관심이 적고 시민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선별된 18개국의 긍정적 답변 평균



그래프는 OECD 18개국의 니트족 및 비 니트족 청년들의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사용된 가치 조사에서 30명 미만의 니트족이 제시된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웨덴, 스위스이다. "여가 시간 중요도", "신뢰",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의 책임", "낮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니트족과 비 니트족 간 차이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제시된 모든 측정값은 2분법을 사용했다. 근로 및 여가시간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신뢰 측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정부의 책임 측정은 1(개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부터 10(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까지의 범주 중에 고르도록 했다. 분석은 범주의 양쪽 끝을 선택한 비율로 구분했다. 즉, 8-10으로 응답한 이들이 상위 25%이다. 삶의 만족도 측정이 낮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1(불만족)부터 10(만족)까지의 범주에서 5 이하인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다.

출처: Wave 6(2010-13) of the World Values Survey for Australia, Chile, Estonia, Germany, Japan,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Poland, Slovenia, Korea, Spain, Sweden, Turkey, the United States; Wave 5(2005-09) for Canada; Wave 4(1999-04) for Israel. Wave 4 of the European Values Survey(2008-10) for Austria, Belgium, the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the United Kingdom,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uxembourg, Norway, Portugal, the Slovak Republic and Switzerland.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85

3.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공공정책의 장기적 목표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저소득 청년들, 특히 니트족들은 빈곤을 피하려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소득지원급여를 젊은이들의 구직 또는 능력개발 노력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급여는 젊은이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위기와 그 이후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섹션에서는 OECD 국가 젊은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위기 발생 이후 청년 수급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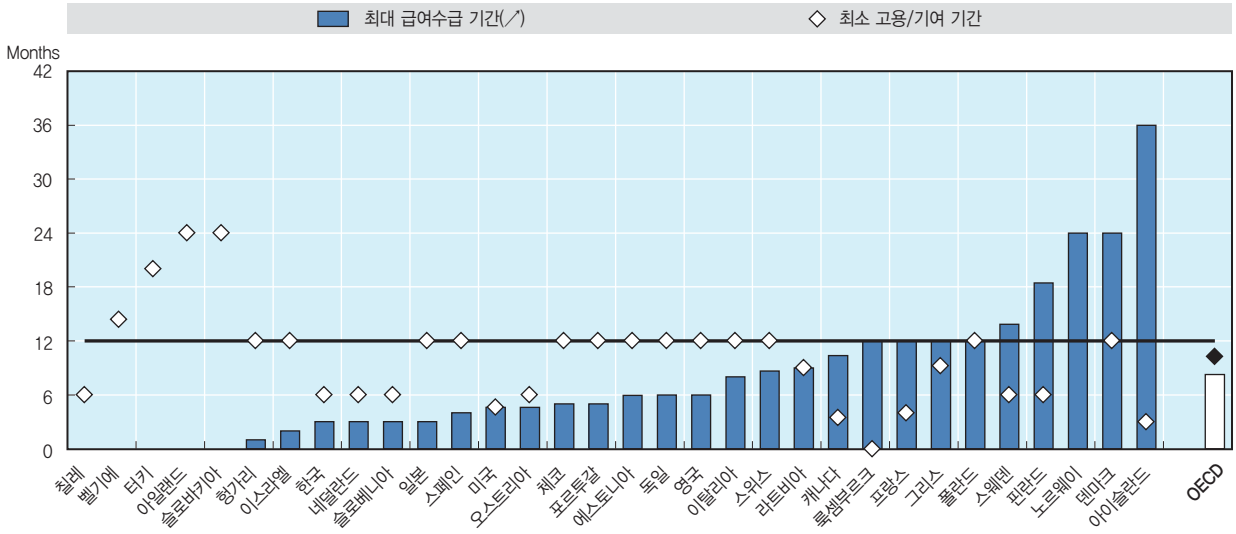
실업급여(Out-of-work benefits)는 청년들이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급여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는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젊은이들은 생산연령자를 위한 주요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14]

- 근로경력 및 기여 이력이 있는 청년 구직자들은 대개 실직한 구직자들의 주된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15] 그러나 급여수급 적격성이 최소 기여 기간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 대개 12개월이며 더 긴 경우도 간혹 있다(그림 1.20) - 학업 포기자와 띄엄띄엄 근로했던 청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실업급여는 단기간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여금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근로 이력이 충분치 않은 실직청년과 한시적인 실업급여를 소진한 이들,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이들은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나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급여는 대개 가구 차원의 자산조사적 결과에 근거하므로 부모 또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소득이 고려된다. 사회부조와 주거급여는 실업급여보다는 덜 관대한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8개국에서는 고용 기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부록 표 1.A2.1).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경우 가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OECD 평균적으로 16세까지 지급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급여는 재학 중인 경우 좀더 오랫동안 지급된다(부록 그림 1.A2.1).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또는 모성/부성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축소된 청년의 경우 대개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최저 기여 기간이 필요하다. 근로 능력이 제한적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자산조사적 장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20. **12개월간 근로한 경력이 있으면 거의 항상 실업보험 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나, 급여 수급 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다.**

최소 및 최대 고용/기여 기간 (월), 이전 고용 경력 1년인 20세 실직자의 실업보험급여, 2014



주: 벨기에,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1년간 기여금 납부 기록이 있는 20세 청년은 실업보험 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노르웨이는 최소 기여기간 대신 최소 소득 요건이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고용 기록이 없는 학교 졸업자에게는 대기 기간 후 축소된 급여액을 지급한다. 칠레의 경우 최대 급여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업보험 급여 프로그램이 없다.

미국의 경우는 미시건 주 자료이다.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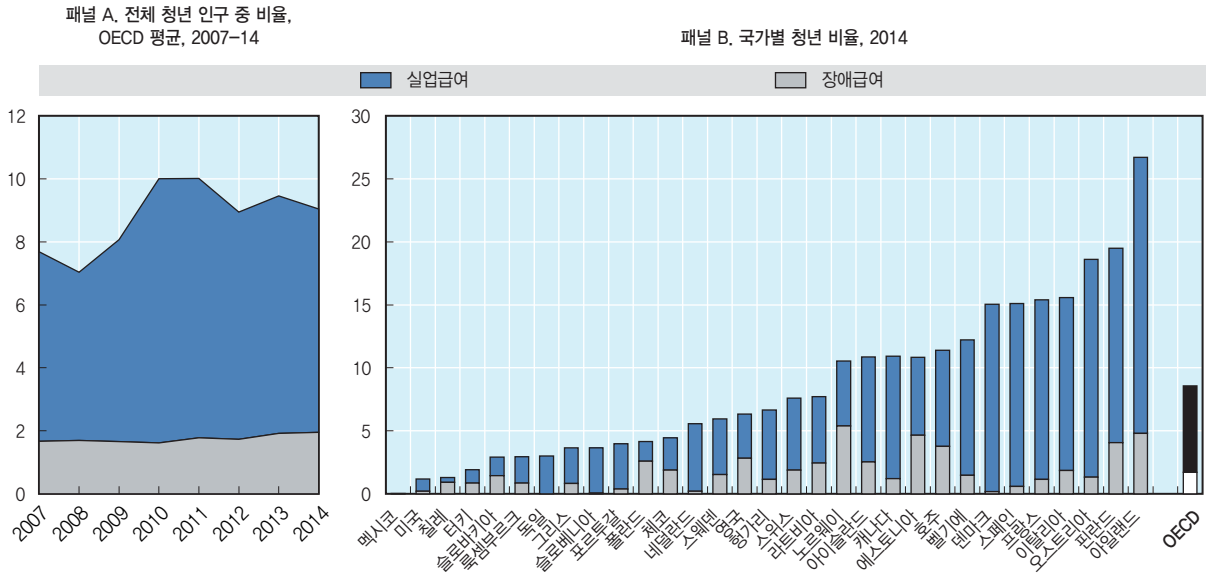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4991

실제로 소득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의 비율은 낮다.

실업급여는 청년들이 위기로 인해 받는 타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니트족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의 비율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OECD 전역에서 60% 증가했는데(그림 1.21, 패널 A) 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OECD 국가에서 수급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특히 여러 유럽국가에서 수급률은 위기로 인한 최고치 대비 약간만 감소했으며 2012년 이후 위기직후의 높은 수준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년 고용 파괴가 확산되었으나 이로 인해 장애급여수급이 특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전의 위기들과는 다른 부분인데, 이전에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빠진 젊은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대거 장애급여로 옮겨간 바 있다. 수 차례의 구직실패로 절망에 빠진 구직자들은 이러한 이동을 반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애급여 프로그램은 대체로 활동 요건이 훨씬 느슨하고 지급액도 검증된 사회부조보다 훨씬 관대하기 때문이다. 수용 능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고실업률 시대에 적절한 프로그램 옵션도 거의 없는 공공고용서비스 역시 장기실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기록에서 빠져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접근방식이다. 왜냐하면 경험상 청년들이 한동안 건강 관련 급여에 의존하게 되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OECD, 2010, 2012a). 위기발생 후에도 수급률이 안정적이었던 것은 OECD 지역에서 수급적격성 관리체계(gatekeeping mechanisms)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신청자들만 받을 수 있게 제한하는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림 1.21. **실업급여 및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청년(16-29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 독일(17-29세)과 미국(16-24세)을 제외하고는 16-29세 자료이다.

패널 B: 칠레와 스위스(2013), 덴마크와 터키(2012), 캐나다(2011)를 제외하고는 2014년 결과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anada's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SLID),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Mexico'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06

실업급여와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의 비율은 최근 실업급여 수급률이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림 1.21, 패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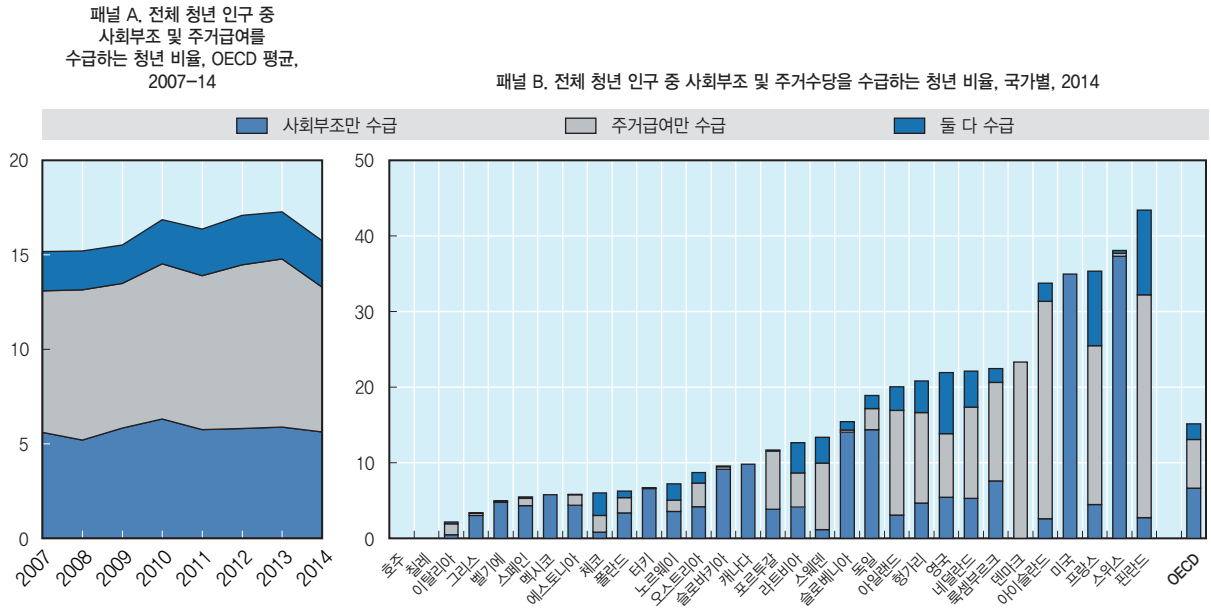
- 평균적으로 OECD 전역에서 2013년 실업급여나 장애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는 청년은 열 명 중 한 명 미만이었다. 비율은 일반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33% 낮았으며,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비슷했다(그림 1.21에 나와있지 않음).
- 대부분의 청년 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수급률은 청년들이 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국가 -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 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고용이 최근 악화된 핀란드와 낮은 기여요건 때문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도 상승했다.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칠레, 멕시코, 미국 등 미주지역(캐나다는 제외)과 터키였다.
-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 북유럽 국가(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의 높은 수급률은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

위기 발생에 따른 수급률 상승은 자산조사적 소득지원 급여의 경우 좀더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22).

-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benefit) 수급률은 위기 중 상승했으나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며 감소했다. 이들 급여는 저소득청년을 지원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뿐 아니라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거 푸드스탬프로 불림)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이 거의 없는 스위스, 미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은 상승추세였으나, 2014년 상당히 하락했다. 이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속해있는 국가에서 청년 수급자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급은 여타 북유럽 국가(덴마크와 핀란드)와,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프랑스에서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청년 중 3분의 1 이상이 일정 유형의 가족수당을 수급하고 있다(부록 그림 1.A2.2).

그림 1.22.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부조 또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거주한다.**



주: 이전 연도에 사회부조나 주거급여를 수급한 경우 또는 거주 가구 내 가구원이 해당 급여를 수급한 경우 급여 수급자로 간주한다.

독일(17-29세)과 미국(16-24세)을 제외하고는 16-29세에 대한 결과이다.

패널 B: 호주, 칠레, 스위스(2013), 덴마크, 터키(2012), 캐나다(2011)를 제외하고는 2014년 결과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anada's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SLID),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Mexico'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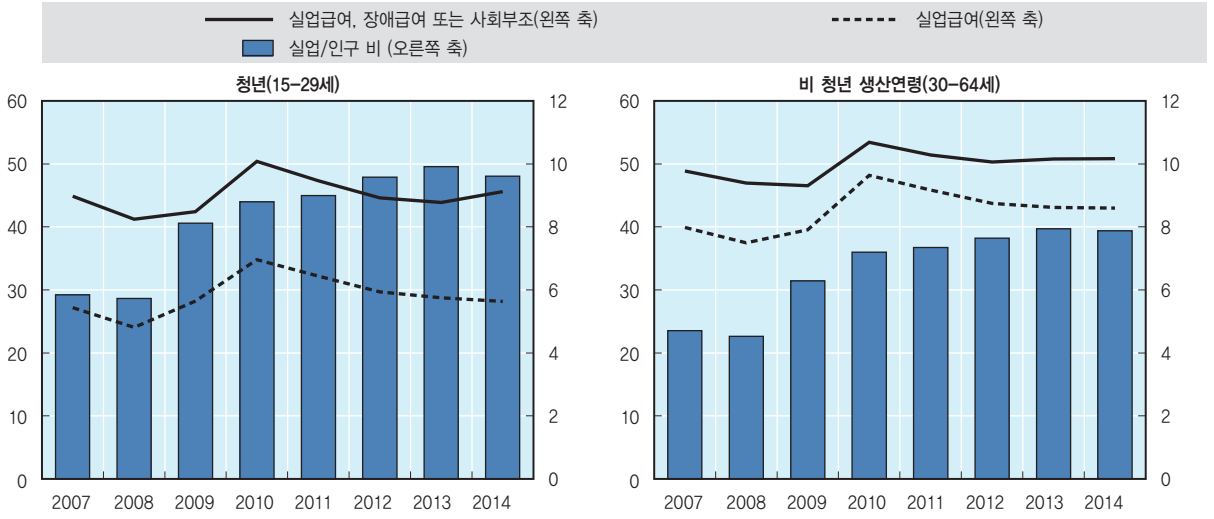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14

청년들은 실업급여(out-of-work benefits)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급여 적용률(benefit coverage), 즉 급여를 수급하는 실업 청년의 비율도 낮다(그림 1.23). 전체 청년 구직자의 30% 미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중장년 구직자들은 그 비율이 43%에 달한다. 장애급여와 사회부조를 고려하면 급여를 받는 실업 청년의 비율은 45% 정도로 올라가지만 30세 이상 실업자들의 50%보다는 여전히 낮다.

그림 1.23. **급여 수급대상인 실직자 비율은 핵심생산연령대비 청년층이 낮다.**

실업급여, 장애급여 또는 사회부조를 받는 청년 및 비 청년 생산연령 실업자 비율 및 동일 연령집단 중 실업자 비율, OECD 평균, 2007-14



주: 2014년, 실업자는 OECD 평균적으로 전체 청년(회색 막대)의 10%를 차지했다. 실업급여(점선) 수급하는 실직 청년 비율은 28%였다. 실업급여, 장애급여 또는 사회부조(실선)를 수급하는 실직 청년의 비율은 46%였다.

주: 공식 교육제도상 재학 중인 이는 실업자로 계산하지 않았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Survey,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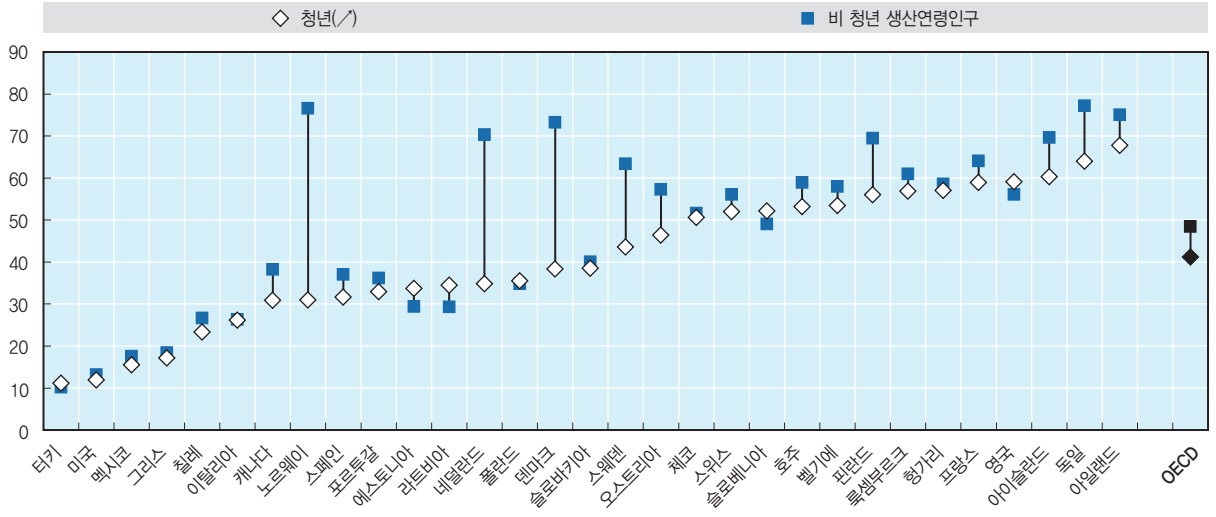
청년들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

급여제도의 효과성은 적용범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급여액이 가구 자원에 매우 중요하다. 급여제도가 빈곤퇴치에 성공적인가를 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그 제도로 몇 가구가 빈곤에서 구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급여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인가?

OECD 전체에서 30세 미만 생산연령 성인의 22%, 30세 이상의 18% 는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림 1.24는 이들 중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려줄 만큼의 급여를 수급하는 이가 몇 명인지를 보여준다.[16] 30세 이상 생산연령 성인의 평균 49%가 급여수급이 없을 경우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들을 빈곤에서 구제할 만큼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경우 이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생산연령 빈곤퇴치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간의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공적 이전(public transfer)으로 인해 30세 이상 생산연령 성인의 4분의 3 이상이 빈곤선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모면하고 있다. 이 비율은 청년층으로 오면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다. 공적 지원으로 빈곤을 모면하고 있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30세 이상보다 많은 곳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슬로베니아와 영국뿐이다.

그림 1.24. **소득지원은 청년 빈곤을 막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

공공 수급 이전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 중 공공 수급 이후 빈곤선 위로 올라오는 이의 비율, 청년(16-29세)과 비 청년 생산연령인구(30-64세), 2014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Survey,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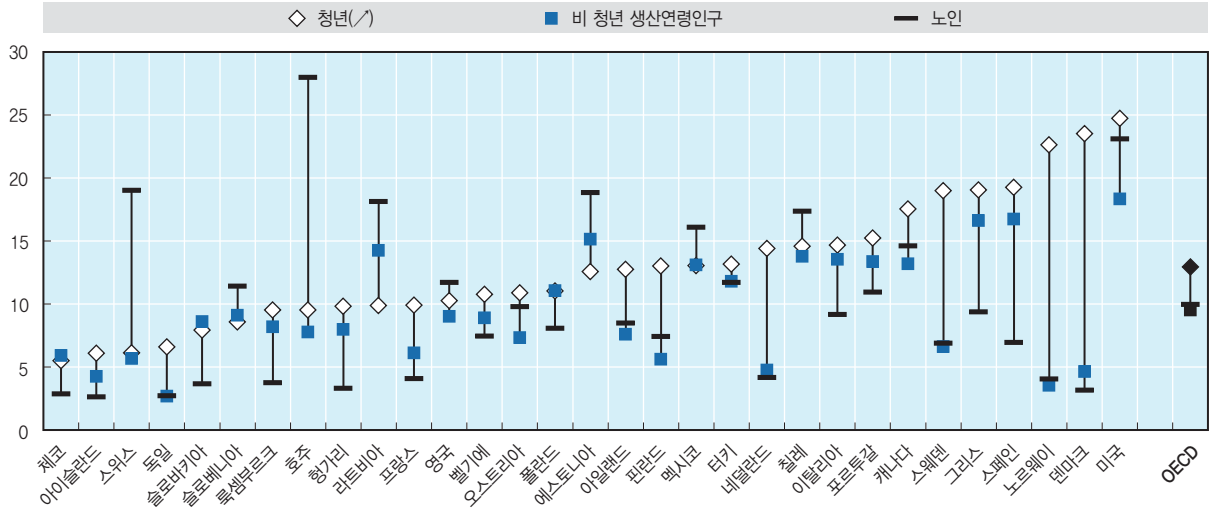
청년들이 노인집단보다 더 큰 빈곤 위험에 봉착해있다.

청년들은 노인들보다 빈곤해질 확률이 더 높다(그림 1.25). 많은 은퇴자들이 월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호주를 제외하고는[17] 청년빈곤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보다 높다.

OECD 전체적으로 청년 여덟 명 중 한 명은 빈곤상태이다. 청년빈곤율은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높은데 이곳의 청년들은 다른 나라보다 이른 나이에 독립해 나가므로 더 이상 부모의 소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인구가 좀더 젊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청년빈곤율이 높다(미국 청년층의 연령 분류에 관한 그림 주석 참고). 체코와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청년 빈곤율이 5% 정도로 가장 낮다.

그림 1.25.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제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더 빈곤한 경우가 많다.**

청년(16-29세)과 비 청년 생산연령인구(30-64), 노인(65세 이상)의 빈곤율, 2014



주: 균등화 가구소득(가구원 수를 감안해 조정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은 "빈곤"한 것으로 정의한다.

미국의 청년은 16-24세 자료이다.

캐나다는 2011년 자료, 터키는 2012년 자료, 칠레와 스위스는 2013년 자료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Survey,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46

4. 청년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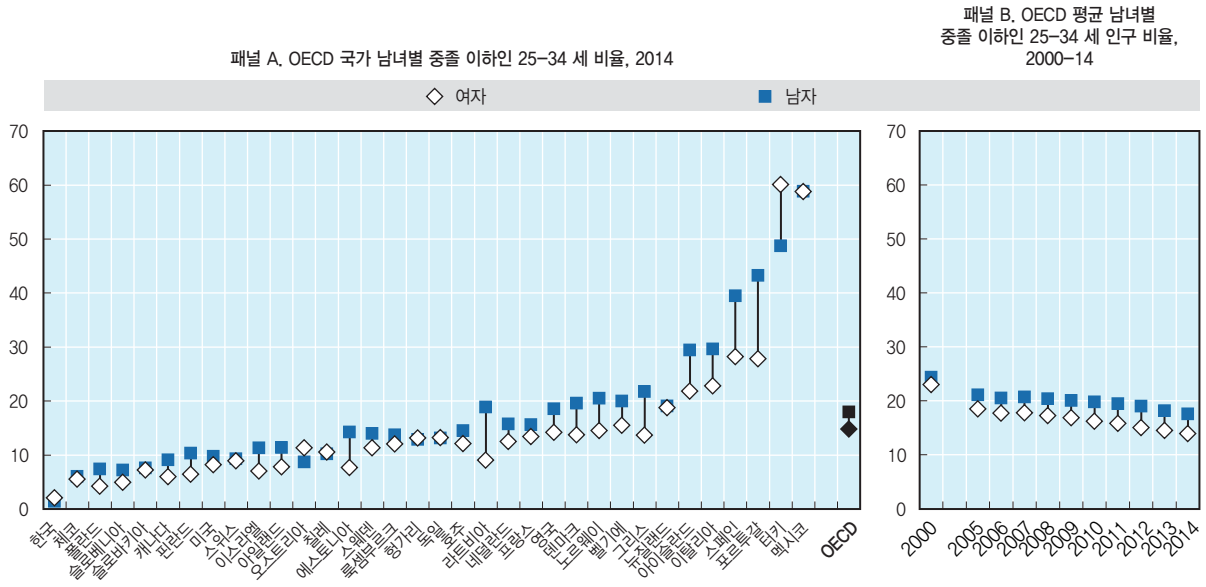
소득지원이 청년빈곤 자체를 퇴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청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을 달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렴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박스 1.3 참고). 그러나 섹션 2에서 보다시피 구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많다. 위기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특히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한번도 일해보지 못한 부문에서 고용주의 욕구를 충족할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러므로 모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을 통해 위기 상황의 청년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목표가 명확한 사회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니트족 문제를 다루고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조기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질 좋은 직업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니트족들을 노동시장이나 학교로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본다. 논의는 청년 프로그램 연구 및 현재 진행 중인 OECD 청년 투자(OECD Investing in Youth) 국가별 리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기 학업중단 방지는 니트족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

니트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모든 청년들이 최소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직업적 능력을 확보할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OECD 국가는 조기 학업 중단율,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년의 비율을 줄이는데 있어 지난 10년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그림 1.26). 그러나 고졸 미만은 여전히 25-34세 청년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며 그 비율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 남유럽 국가에서는 훨씬 더 높다.

그림 1.26. **조기 학업중단은 감소했으나 특히 남부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1. "중졸 이하"란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레벨 3C short 이하를 의미한다. ISCED 분류는 2014년에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2. 일본 자료는 없다. 패널 B의 OECD 평균에 2000-14년에는 호주와 칠레,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가 제외되어 있고, 2000년은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제외되어 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LFS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OECD National Educational Attainment Classification(NEAC) Database 2015,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58

고교 졸업 전 학업 중단 청년 비율을 더욱 줄이려면, 중단의 기미를 조기에 감지하고 중단 위험이 있는 이들이 학업을 마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 출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위기상황의 젊은이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기의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교육 참여에의 장애물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한다. 학교 중퇴는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탈이 길게 이어진 후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다(Lyche, 2010). 이는 여러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학습장애, 정신건강 문제, 가족문제,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또는 부정적인 학교생활 경험 등이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고 쌓이는 경향이 있다(OECD, 2012b). 학업의 조기 중단을 방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때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출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이해당사자들 - 학부모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 - 에게 알림으로써 문제의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민간기업에서 나온 웹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의 시간표, 출석, 성과, 숙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교사들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실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출석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 기간 중에는 표준적인 관행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 고등학교들이 법적으로 20세 미만의 중퇴자와 무단결석을 자주하는 학생들을 지역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소위 "활동 책임"의 일환으로 의무화해 놓았다. 보고를 받은 지방정부는 해당학생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후 고교 교육제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출석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교사와 학교, 지방정부가 결석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때로는 학교가 학생의 잦은 결석에 느리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자원부족이 원인일수도 있고 "힘든" 학생이 차라리 결석하는 게 교실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위험 상황으로 파악된 청소년의 상황과 이에 대한 개입현황을 6개월에 한번씩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출결현황 정보를 연 3회 교육청에 보내야 하며 결석한 학생에게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출결현황자료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및 학생 지원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재정이 재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면 자퇴생을 즉시 보고하는 것이 학교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집한 출결 정보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험 학생과 그 가족은 종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저조한 학교 성적과 잦은 결석이 가족문제, 건강문제 또는 약물 남용 등 교육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교육적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요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전문 지원인력은 문제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훈련된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학교에 이런 전문인력이 없다면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담 교사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학교가 교사에게 강의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문제 학생 및 결석생들을 돌볼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 해당 교사들은 집중력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한 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무단결석한 학생을 데리러 아침에 학생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다.

학교 밖 지원 네트워크 - 예: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공공고용서비스, 비 정부기구 - 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의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여타 지원인력이 가정 문제나 어려운 주거상황 등을 해결하거나 보건서비스에 연결하거나 경찰이나 법원과 청년 사이에 중재자로 활동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급여수급자라든지 하는 이유로 청년의 가족과 이전에 업무상 아는 관계일 수도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우선개입교육지역 (TEIP:the Educational Territories of Priority Intervention) 프로그램에서 소외 지역에 위치한 "우선순위" 학교와 보건센터, 자원봉사 협회, 지원기관 등 공공 및 민간기관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목표는 자퇴 위기의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등 전통 학교교육의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개선, 출석, 행동 및 자퇴위험 등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선 지역의 학교 미 수료율은 TEIP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며 두 번째 버전이 확산된 후 4년이 지난 2010년에는 국가 평균수준에 도달했다(Dias and Tomas, 2012).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돕는 데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OECD 지역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OECD, 2013),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 등의 발생률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더욱 증가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OECD, 2012a). 그러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증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이들 자신도 부끄럽고 창피해 아는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릴 수 있다. 학교의 심리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호주 국립 청소년 정신건강재단(Australian National Youth Mental Health Foundation) 헤드스페이스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부 보건센터는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접근방식이다. 헤드스페이스 센터에서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사회적, 교육적 환경을 벗어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된다. 헤드스페이스는 젊은이들에게 성교육과 피임약도 제공한다 (박스 1.4 참고).

유연한 학교환경이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적, 신체적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을 정규학교 제도 내에 두고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외를 완화하고자 한다(OECD, 2007).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고등학교까지 다른 학생들과 섞여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OECD, 2012c). 그러므로 정책을 통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위기상황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 유연하고 지지적인 교육환경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육성하고 별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하는 학생비율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며, 소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만큼의 자원을 학교가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

박스 1.4. **헤드스페이스: 호주의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국립청년정신건강재단인 헤드스페이스는 2006년 호주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일차적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12-25세 청년 중 경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을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통합된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은 건강과 사회적 안녕, 경제적 참여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95개의 헤드스페이스 센터가 있으며(2016년 7월 기준) 이곳에서 청년들이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알코올 및 기타 약물전문가와 GP, 그리고 진로상담사, 직업담당자, 청소년담당자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원은 크게 정신 건강, 신체건강, 알코올 및 여타 약물 사용, 그리고 근로 및 학업지원이라는 네 개 핵심 분야에 대해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청년 친화적이며 건강 상담과 치료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헤드스페이스 센터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으며 "오픈도어" 정책을 통해 젊은이와 그 가족들이 쉽게 방문하여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는 대개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되며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은 e헤드스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에 헤드스페이스 센터가 없거나 센터를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꺼리는 젊은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스 1.4. **헤드스페이스: 호주의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계속)**

헤드스페이스는 목표 집단에 성공적으로 다가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 독립적인 평가에서는 보건,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헤드스페이스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헤드스페이스가 커뮤니티 안에서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다고 결론짓고 있다(SPRC, 2009). OECD 리뷰 팀 역시 사실 조사 기간 중 헤드스페이스 서비스가 지역 사회에 잘 융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헤드스페이스는 노숙인, 토착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inter-sex) 청년들을 포함해 소외 집단 및 위기 집단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SPRC, 2015). 대부분의 청년들(72.7%)은 주로 불안, 우울증상, 괴롭힘 등 상황적 문제, 관계적 문제(13.4%) 등 정신건강 또는 행동 문제로 인해 헤드스페이스를 찾는다. 대다수는, 특히 인지행동치료 및 상담을 통해 일정 형태의 정신건강지원을 받았다(Rickwood et al., 2015a,b).

안타깝게도 지금 단계에서는 헤드스페이스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제한적이다. 첫 30개 센터에 관한 최근 연구를 보면 조율된 통합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임상적 조사를 실시한 센터는 거의 없다 (Rickwood et al., 2015c).

호주 정부는 2013-14년부터 5년간 이 프로그램 재정지원에 무려 411.7백만 호주달러를 약속했다. 헤드스페이스 센터 수는 2016년이면 100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출처: OECD (2015), Mental Health and Work: Australia,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6), Investing in Youth – Australia, OECD Publishing, Paris.

주류(mainstream) 학교 환경에서 공부하는 소외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개선을 위해 많은 방법이 모색되었다.

- 학급당 학생수가 적으면 가장 소외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단, 청소년들보다는 아동기의 학생들에게 좀더 효과적이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 실시된 한 실험에 따르면 아주 어린 학생들(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을 소규모 학급에서 교육했더니 긍정적인 성격상 변화가 있었으며, 이후 27세까지 측정한 결과 학습 성과 향상이 있었다.[18] 게다가 관찰된 개선효과는 다수집단 출신보다 소수집단 자녀들 사이에서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Dee and West, 2008; Chetty et al., 2011). 핵심 요소는 높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집중도, 근면성, 주도성 등 비인지적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Piketty and Valdenaire (2006)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Angrist and Lavy(1999)는 이스라엘 초등학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교수법과 프로그램 내용을 소외 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조정하는 것 역시 성취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차터스쿨(charter schools)”은 직원 관리, 교육과정 운영, 수업시간 운영 등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갖는 공립학교들이다. 이들은 사전 정의한 성과목표도 설정해두고 있으며 광범위한 성과지표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차터스쿨들은 인근에 질 좋은 공립학교가 없거나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일반학교 대비 더 좋은 자원(학급규모가 작고/또는 수업시간이 더 많음), 보완서비스, 더 잘 훈련된 교사 등을 위험상황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차터스쿨들이 교육적 성과와 이후의 고용에 유의미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bdulkadiroglu et al., 2009; Angrist et al., 2016; Dobbie et al., 2011).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부터 얻은 교훈 중 어느 정도를 일반적인 규모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학교마다 특징이 다르고 차터스쿨은 특히 방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Angrist et al.(2012)는 표본으로 뽑은 메사추세츠 주 학교들을 대상으로 추정된 "차터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경험에 따르면 특정 교수법은 가장 소외된 학생들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관행 중 어떤 것이 소외학생들의 교육 성취도 격차를 좁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는 파악이 필요하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특히 소외된 청년들에게 중요하다.

잘 설계된 방과후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교육적, 사회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악기를 배우고 공예 등 실질적인 활동에 관련된 매력적인 기회를 통해 사교능력과 직업능력을 확보하면서 고립 위험도 완화할 수 있다. 실증적 증거들이 과외 활동이 성적과 직업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주고 있다(OECD, 2012b,d; Carcillo et al., 2015).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소외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eckman, 2008). 하지만 사교육 참여는 부모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여유 있는 가정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OECD, 2011).

이상적으로는 방과후 활동은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됨으로써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면서 소외 청소년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 제도권과 연결하면 접근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과외 "흥미 교육"이라는 확대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많은 경우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활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수업이 흥미롭고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을 한다. 라트비아처럼 활동이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스포츠 클럽이나 뮤직 클럽 등 민간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학교와 민간 조직이 협력하여 학생들을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업료와 교재비 또는 장비료 등을 낼 수 있도록 일부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소외된 청소년들의 욕구를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익할 수도 있다. 문제 지역의 매력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숙제를 돕거나 전문화된 보건 또는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공한 여러 제도를 보면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을 멘토링과 결합하고 있다. 컨셉은 교사를 불신하고 가정에 권위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긍정적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는 BBBS(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은 템플릿에 따라 운영되며 이 템플릿에 대해서는 상세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멘토와 젊은 참가자들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공통 관심사에 따라 연결된다. 전문직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자세히 모니터링하며 멘토에게 커뮤니케이션 개선방법, 활동 다각화방법, 아동 발달 촉진 방법 및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평가결과를 보면 1년 이상 지속된 멘토링 관계에 속했던 청소년들은 폭력행동과 약물남용이 줄었으며, 학교 성적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출결상황은 좋아졌다 (Grossman and Rhodes, 2002).[19] BBBS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등 14 개국으로 확대되었다.[20]

최근 많은 활동들이 스포츠를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자들이 스포츠를 가르칠 뿐 아니라 숙련된 멘토로 활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BAM (Becoming a man)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불우한 환경의 문제 청소년들에게 학기 중 비 학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BAM은 인지행동치료법(CBT)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 훈련과 스포츠를 결합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를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Heller et al., 2015). 호주에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스포츠 찬스 프로그램(Sports Chance Programme)을 통해 호주 토착민 청소년들이 럭비를 하면서 경쟁심, 절제, 긍정적 사고방식을 함양하여 이를 다른 분야, 특히 학교생활로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토착민 출신의 개인 멘토를 배정받고,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내에서의 행동과 성과를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현재 평가 중이다.

위험상태의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은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러 장애물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면 다양한 이들이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젊은이의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특징과 환경을 360도로 관찰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해당 젊은이의 부모 및 학교와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찰, 사법기관 담당자, 심지어 과외 활동 제공자와도 조율해야 한다.

수많은 이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협업작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OECD, 2015e). 청년정책의 책임은 대개 수많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반면, 정책 이행은 정부 내 여러 단계(중앙정부, 시청, 구청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책은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조직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모든 단계의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담은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우려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는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 공유해야 하며 해당 청년이나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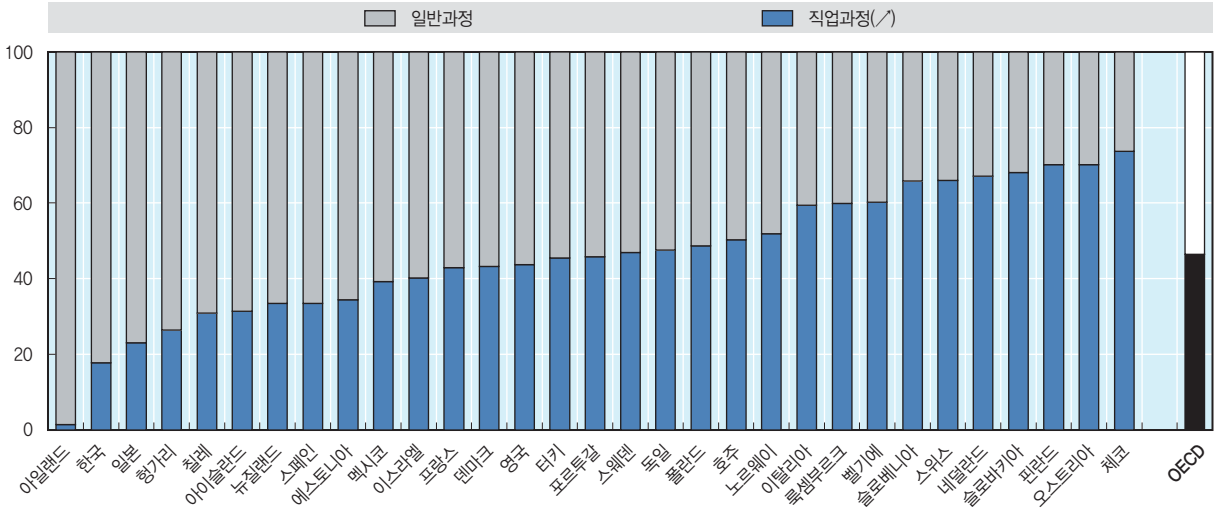
효과적인 제도적 구조는 관계자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긴밀한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백여 곳의 지역에 소위 "파트너십 브로커"를 배치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조율 개선 필요에 대응했다.[21] 파트너십 브로커는 학교와 기업, 커뮤니티 그룹, 가족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강화함으로써 교육적 성과, 사회적참여,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성공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의 주요 과제는, 지역환경에 따라 소외 젊은이들이 지역 내 지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청소년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다양한 관련자들의 협업 강화하기, 서비스 전달에 있어 격차를 파악하고 좁히기 등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및 고용서비스가 노동복지청(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밑으로 통합되었는데 노동복지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확산된 소위 "노동복지청 개혁"에 의해 만들어졌다. 노동복지청 산하 주 차원의 기관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자산조사적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질 좋은 직업교육훈련은 졸업 후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수 있다.

질 좋은 직업교육훈련(VET)은 필수적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젊은이들이 취업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노동시장의 기술 욕구에 대응한다. 직업교육훈련은 젊은이들이 일반적 능력과 직업적 능력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취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교실학습과 실전훈련의 조합은 매력적인 학습 경로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우수한 품질과 연관성을 확보하려면 직업교육훈련의 실용적 훈련 요소가 작업장을 기반으로 해야 이상적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고등학생들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의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단 그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그림 1.27).

그림 1.27. **직업교육훈련과정 참여율에는 국가간 차이가 크다.**

일반 프로그램 대 직업 프로그램에 등록된 고등학생 비율, 2013



주: 캐나다, 그리스, 미국의 결과값은 없다.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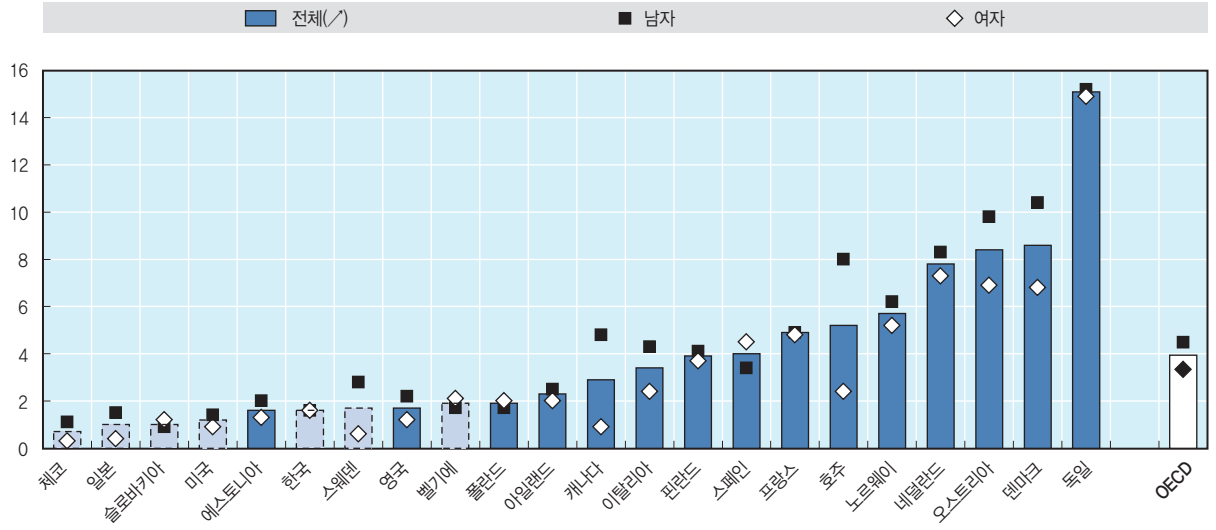
견습은 관련성 높은 실용적 훈련을 제공하는 이상적 방식이다.

견습 과정은 학생을 민간 또는 공공부문 고용주와 프로그램 초반에 매칭하는 것으로 대개 몇 년 간 이루어지며 모범적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현장직무교육훈련(OJT)과 교실 학습의 조합과, 학습과정에 사회복지 파트너가 관여하는 것은, 훈련이 고용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견습생들이 중요한 초기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상적으로, 성공적인 견습생-고용주 관계는 정규 고용 관계로 전환된다. 실제로 실증적 연구를 보면, 견습은 좋은 임금과 꾸준한 일자리의 형태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Carcillo et al., 2015). 견습은 또한 조기 학업 중단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교실 학습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실용적 사고방식의 젊은이들과 돈을 벌고자 학업을 일찍 중단하려는 이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다.

견습 프로그램의 긍정적 결과 -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처럼 강력한 견습 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의 유리한 청소년 노동시장 성과 - 는 견습 훈련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다. 많은 국가에서는 직업교육훈련보다는 학문적 교육이 질 좋은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오랫동안 후자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어필하지 못했고(European Commission, 2011) 학문적 환경에서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졌다. 견습 훈련 참여도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28). 그러나 여러 국가의 정부가 참여를 촉진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매력과 중요성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의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혁을 위해 독일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독일, 영국, 호주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 2014년 견습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가장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은 교육적 자격요건이나 기본 능력의 부족, 더 능력 있는 또래들과 경쟁, 또는 고용주들이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는 것 때문에 견습제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림 1.28. **견습 프로그램 참여율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2012년 견습과정을 이수한 16-29세 청년 비율



주: 하늘색 막대는 전체에 대해서는 관찰값 30 미만, 남녀는 15미만인 경우이다. 이 추정치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벨기에와 영국의 결과값은 각각 플랜더스 지역과 잉글랜드와 북 아일랜드의 값이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 20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75

견습제도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인정된 경로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질 좋은 훈련 시설의 제공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서 제공하는 견습생 자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임금과 비 임금 비용 측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일부 회사들은 견습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OECD 국가에서는 고용주들이 더 많은 견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박스 1.5).

예비견습(Pre-apprenticeship)제도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

예비견습 프로그램은 더욱 소외된 청년들이 부족한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개선하도록 돕고 동기를 부여하며 작업 순서를 익히게 하고 단기간의 업무 경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준비시킬 수 있다.

독일에서는 낮은 학교성적, 학습장애나 기타 불리한 조건 때문에 견습생이 될 수 없는 청년들이 예비 직업훈련(pre-vocational training)에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다양한 직무분야를 소개하고 정부 보조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업에 배치된다. 여기에서는 직업 훈련 1년차의 교과과정을 가르친다. 예비직업훈련 과정은 또한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과정 중에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출석하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수료 후 정규 견습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OECD, 2012e). 독일 예비 직업훈련과정의 고용 성과는 대체로 괜찮았으나, 가장 소외된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Caliendo et al., 2011).

예비견습은 호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특정 직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실 기반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업무 배치를 병행한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호주의 예비견습은 젊은이들이 비즈니스를 접하도록 하고 견습을 결심하기 전에 동기를 강화하며 기본 능력을 구축하고 기술적 지식을 제고함으로써 견습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22]

견습 스타일 프로그램을 정규 중등 교육과정에 집어넣어 소외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갈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5천개 가량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리어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고교 졸업 이후 및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커리어 주제와 관련된 학문교육과 기술훈련을 결합시키고 지역 내 고용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커리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에게 업무 중심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커리어 아카데미는 소규모 학습 커뮤니티는 9, 10학년 학생부터 대규모 학교는 12학년까지 150-200명 가량으로 운영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리어 아카데미 졸업자들은 이후 8년간 연 2천 달러 정도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린다. 프로그램은 또한 자녀 및 파트너 또는 배우자와 독립적으로 생활할 확률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Kemple, 2008).

박스 1.5. **견습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 지원**

직접 보조금

몇 개 국가에서는 견습생을 받는 고용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국의 경우 NAS(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에서 16-24세 직원을 모집하는 종업원 최대 천명 규모의 고용주에 1,5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건은 과거 견습생을 채용한적이 없어야 하며 직전 12개월간 모집한 적이 없어야 한다. 고용주 한 명은 최대 10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년도 고용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는 견습생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받는다. 또한 중단 후 견습생 고용을 재개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는다.

호주 견습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은 자사가 채용한 견습생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수료하면 총 4천 호주달러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훈련과 고용에 있어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견습생과 훈련생을 채용한 고용주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금은 초반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Deloitte Access Economics, 2012).

세금공제와 사회보장 리베이트

견습제도 활성화를 보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세금공제 및/또는 사회보장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기업들이 견습생 한 명당 1,600유로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견습생이 장애가 있거나 소외계층 출신인 경우 공제액을 2,200유로로 올렸다. 기업은 또한 채용한 견습생에 대해 사회보장 기여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세금 공제 외에 각 지역에서는 견습생 채용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캐나다에서는 견습 일자리 창출 세금공제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견습생 한 명당 연 2천 캐나다 달러까지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박스 1.5. **견습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 지원(계속)**

최저임금

견습생 채용 비용은 최저임금 미만의 특별임금에 합의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몇몇 국가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견습생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들의 연령 및 훈련 몇 년 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18세이자 훈련 1년차인 경우 국가 최저임금의 25%에서 시작해 20세 이상이고 4년차인 경우 93%까지 올라간다. 독일의 경우 "훈련 수당"이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합의되었는데, 견습생의 연령과 해당 회사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을 통한 지원

견습생을 받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흥미로운 간접적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이들이 특별 훈련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견습생을 받는 기업들만이 이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모든 기업은 AER(Employers' Refunds for Apprentices Fund)에 직원당 거의 400유로를 연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면 AER은 24개월에 한 명씩 각 견습생에 대해 기업에 보상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기업이 납부한 견습세를 통해 작업장 훈련의 재정을 충당한다. 종업원 250명 미만 사업장은 급여의 0.05%, 250명 이상 사업장은 0.06%로 설정되어 있다. 기업이 일정 수의 견습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경우 이 세금을 면제받기도 한다.

출처: OECD(2014), Investing in Youth: Brazi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988-en.

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관련 직종을 체험해보고 처음으로 업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고용주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특히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여유있는 가정 출신의 또래들에 비해 여름방학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턴십은 젊은이들이 의미있는 업무 경험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방학 중 발생하는 지식의 손실을 상쇄하고 젊은이들이 불법적인 활동에 열중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질 좋은 인턴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부모의 인맥이 없는 젊은이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지원이 가능한 인턴십은 그 훈련 요소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거나 무급이어서 저소득층 젊은이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대상이 명확한 공공 프로그램이 해법이 되기도 한다. 뉴욕 시는 미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Summer Youth Program)을 통해 1960년대부터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업무 경험과 훈련을 조합하여 젊은이들이 학문적 성공이나 정규직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저소득가정 또는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14-24세 청소년이다. 2015년에는 지원자가 13만 명이었으며 그 중 5만4천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빈곤, 범죄, 사망률은 비 참가자에 비해 낮았다 (Gelber et al., 2016).[23] 이 프로그램 및 유사 이니셔티브의 긍정적 결과에 힘입어 미 노동부는 현재 재계와 연합하여 여름 기회 프로젝트(Summer Opportunity Project)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고용 기회와 수업 중심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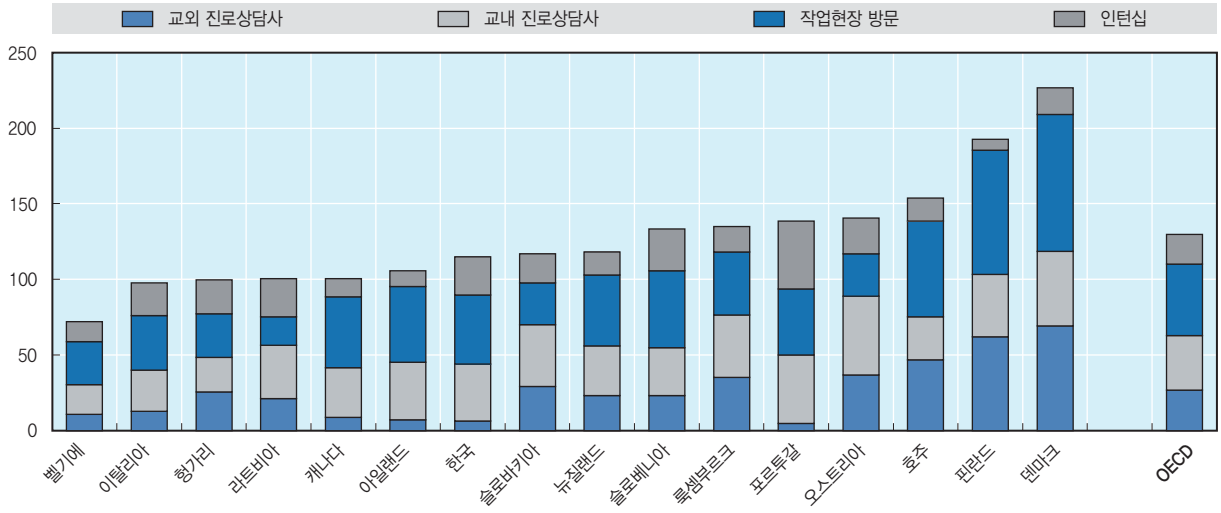
질 좋은 진로지도는 젊은이들이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훈련 이수율을 높일 수 있다. 젊은이들의 가족과 사회적 인맥에서 제안하기 어려운 진로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안정된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진로를 선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을 강화할 수 있다. 진로지도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견습 포함 - 을 고려 중인 젊은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부차적 프로그램보다 학생들의 취업 전망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진로지도 참여는 학교 중심의 진로 상담의 경우 가장 실현하기 쉽다. 한가지 단점은 교내의 상담사들은 직업교육훈련보다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학문 중심의 편견을 보이거나(OECD, 2014a) 외부의 대안보다는 교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Watts, 2009). 진로지도에 고용주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좀더 종합적이고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Sweet, 2009).

덴마크에서는 교육부가 국가 지도 포털, 콜센터 등의 서비스 및 지역 지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도 센터는 공업 및 상업계,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 세미나, 취업박람회, 1대1 상담 등). 센터는 교육 및 노동시장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로지도가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 내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성이 높게 만들고(Field et al., 2012)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 참여도를 높인다(그림 1.29).

그림 1.29. **일정 형태의 진로지도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각종 유형의 진로지도를 받은 바 있다고 응답한 15세 청소년 비율, 일부 OECD 국가, 2012



주: 네 유형의 진로지도를 모두 받은 학생 비율의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배열했다.

출처: OECD PISA 2012, www.oecd.org/pisa/pisaproducts/pisa2012database-downloadabledata.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84

니트족들이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다시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력 초반의 실업 및 비 활동이 젊은이들의 진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취업이나 적절한 교육적 옵션을 찾기 어려운 모든 니트족들이 자신들이 가진 교육적, 비교육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소위 "청년보장제도"를 통해 모든 청년 니트족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2013년에 도입된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이다.[24] 이 제도는 25세 미만의 모든 젊은이들이 - 고용 서비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 공식적인 교육제도 수료 또는 실업 이후 4개월 이내에 질 좋은 취업 제안, 평생교육, 견습 또는 연수(traineeship)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젊은 구직자들의 고용 전망을 개선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비 활동 상태의 단절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제공된 옵션의 품질이 중요하며 해법은 젊은 구직자들의 개인적 욕구에 맞춤화된 것이어야 한다.

구직자로 등록되지 않은 니트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니트족들이 장기적 비 활동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있어서 현금 급여이건 주택과 보건 서비스 등 현물 지원이건 간에 혜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또는 고용 서비스기관에 접촉하고 실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 그러나 일부 니트족들은 정부 기관에 급여를 신청하기를 주저하고, 당분간 혼자 감당해보려고 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데, 학교를 마치거나 직장을 떠나면서 동시에 부모와 살던 집에서 독립해 나가거나 일부는 심지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부 상심한 젊은이들은 한동안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을 끊기도 한다. 학교나 직장생활로의 복귀는 비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더 어려워진다.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고 더 이상 아침에 기상하거나 체계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공고용서비스(PES)간의 협업은 성공적인 아웃리치 전략의 주요 요소인 경우가 많다. 학교 운영진 및 교사들과 함께 공공고용서비스 (PES)는 조기 경력 조언을 제공하고 PES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며 위험 상태의 젊은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졸업 후 비 활동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PES와 학교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과 노르웨이는 다음 사항을 약속하는 긴밀한 협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 일본 PES인 "헬로우 워크(Hello Work)"는 전문화된 청년서비스("Hello Work for New Graduates")를 통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상담, 구직지원(예: 면접 훈련 및 준비, 세미나, 학생 취업박람회), 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교에 구인소식을 알리고 교내에 정기적으로 현장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진로지도 상담사들을 지원한다. 학교와 PES간 협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일본 학생들 거의 전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제안을 받았다.
- 노르웨이는 현재 국립 복지 고용 기관인 노동복지청의 청소년 전문가들을 주당 4시간씩 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진로지도를 통해 자퇴를 막고 학생들이 업무 경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것이다.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젊은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냉담한 젊은이들에게 손길을 뻗치는데 있어 비 정부기구 관계자들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은사, 지역 청소년 전문가, 여타 공공기관에서 이들을 찾아 재 참여를 유도하고자 애쓰고 있을 수도 있고 단절된 젊은이들이 여전히 지역청년 센터나 스포츠 클럽에 출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 정부 청소년 활동 제공자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의 완전한 소외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청소년의 사회 및 교육적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이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OECD-LEED, 2014).

많은 국가에서 비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전 유스 커넥션(Youth Connection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커먼웰스(Commonwealth of Australia)는 민간 공급업체에 - 이들 중 상당수는 비영리 기관 - 교육이나 훈련에서 소외되고 취업에 실패할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도록 대금을 지급했다.[25] 유스커넥션(Youth Connections)은 상담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대1 사례관리 접근방식을 이용했다. 공급업체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방문하여 이들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활동도 수행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즉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집밖을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이 각 현·청의 재정지원을 받은 비 정부 지역사회 히키코모리 지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매우 유망한 접근방식은, 단일 활동가가 모든 청년들을 심사하여 이탈 위험의 청년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카운티 차원의 후속 서비스(Follow-up Services) 기관에서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를 떠나는 모든 21세 미만 청년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활동 현황을 평가할 책임을 가진다. 이 기관에서 추적한 청년들 중 재학 중이거나 고용상태가 아닌 이들에게는 상담이나 훈련이 제공되거나 사회지원서비스 기관 또는 지역고용 사무소와 접촉하게 된다. 스웨덴 지방정부는 "활동성 책임"의 일환으로 20세 미만의 조기 학업 중단자들에게 연락하여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고등학교로 돌아오도록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후속 서비스에 관련한 문제는 학생이 학업을 조기에 중단하는 사유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원래 살던 지역의 관청에 알리지 않았을 뿐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들까지 추적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기도 한다.

니트족 프로파일 작성은 적절한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비용도 절감해준다.

청년 구직자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 등록을 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유형과 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파일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파일 작성은 해당 구직자가 근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기술과 훈련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사례 담당자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거처가 없거나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사회성문제 및 신체 또는 정신건강문제 등 구직자가 프로그램이나 근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호주에서는 모든 급여신청자에 대해 이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의 수준 및 구직과 고용 유지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평가한다. 이 절차에는 보건전문가, 대개 정신과의사나 간호사의 심사가 포함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구직자는 지원 강도에 따라 세가지 "스트림(streams)" 중 하나에 배정된다.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공공 고용복지청인 NAV에서는 모든 고객을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네 개의 구직자 카테고리 중 하나에 배정한다.

신중한 프로파일링은 비용 통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비용의 개입을 가장 필요로 하며 그로 인해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구직자들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비 정부 고용서비스 공급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스트림(stream)에 따라 차이가 상당하며 자원을

더 많이 받는 공급업자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구조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복지청(NVA)을 통한 지원은 일차적으로 욕구가 가장 큰 두 개 범주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공공고용센터에 등록하자마자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개 범주의 구직자들은 대개 단기구직 세미나에 참석한 후 3개월 이내에 별 지원없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엄격한 지침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동기는 크지만 구직을 하는데 굳이 고비용의 개입이 필요하지는 않은, 덜 불우한 구직자들에게 사례 담당자들의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위험도 완화한다.

니트족을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OECD 국가에서 니트족의 교육적, 고용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입의 효과는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개선과 사회적성과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가장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의 경우 더욱 그렇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 공공고용복지서비스의 수용 한계와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확대하거나 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젊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개입의 유형은 교육관련 장애물인가 비 관련 장애물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 "교육이 우선"이라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조기 학업 중단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방식이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고용서비스는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주류 학교 교육에서 이들을 다시 포용하고자 한다. 일부 국가는 심지어 복학을 소득지원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해두기도 한다. 좋은 예가 호주로, "학업 의무화(learn or earn)" 요건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도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다.
- 포괄적인 전일제 두 번째 기회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거나, 가정문제 또는 정신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정규교육제도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지가 없는 조기 학업 중단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본기술을 가르치는 보충 과정과 직업교육, 상담, 진로지도를 결합한 형태이며 참가자들이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박스 1.6). 또한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도 적합하다.
- 실용적 요소가 강한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또는 단기 훈련과정은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했거나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교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싫은 니트족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소외된 청년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근로 습관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후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 하지만 근로 경험 제공은 항상 가장 소외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기 공공부문고용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확률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국제적 자료가 넘쳐나는 상황이다(Card et al., 2010, 2015; Kluve, 2010). 이유를 꼽자면 많은 제도가 약한 훈련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고 민간 부문 고용주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심지어 참가자들이 훈련기간 중 구직활동에 느슨해지는 소위 "잠금효과(lock-in)"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급으로 일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인해 정규 근로자들이 대체되거나 "밀려날" 위험도 있다.

- 구직자들을 고용하는 민간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직자들의 고용 전망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젊을 경우 특히 그렇다. 하지만 보조금은 저숙련 구직자와 장기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고용주들이 어차피 채용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보조금을 챙기는 일 - "사중손실 효과(deadweight effect)" - 을 방지할 수 있다(Cahuc et al., 2014).
-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이들에게는 구직지원, 상담, 단기훈련과정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법에 대한 훈련) 등 저비용, 저강도 개입으로 충분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젊은이가 좀더 강도 높은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는 구직자로 등록하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구직자의 계속적인 의지를 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호의무 접근방식(mutual obligation approach)을 채택하는 것인데, 이는 구직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26]

박스 1.6. **조기 학업중단자를 위한 두 번째 기회 학습 옵션: 기회와 과제**

조기 학업중단자들은 대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어렵게 여긴다. 당초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교육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거나 장애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최종학력 및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거나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조기 학업 중단자의 욕구에 부합하며 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숙소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많음). 대부분 문해력과 수리력을 가르치는 보충수업과 직업교육수업, 심화상담, 보건지원 및 진로지도가 합쳐져 있다. 간단한 업무 경험이나 지역사회 작업 요소 - 예를 들면 식사제공이나 노인돌봄 등 - 는 참가자들이 근로 리듬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1964년에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US Job Corps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불우한 환경의 16-24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교과목 과외, 직업훈련, 상담, 사교능력 훈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하며 취업도 알선한다. 또 다른 주요 프로그램 - 미국에서 시작해 해외로 확대된 프로그램 - 은 YouthBuild로 건설 부문의 기술과 근로 경험을 제공한다. 두 제도 모두 현지 고용주들과의 강력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둘 다 강력한 비인지적 훈련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동기강화, 성실성함양, 대인관계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US Job Corps와 YouthBuild가 종합적인 사전 견습제도로, 일부에게는 상급학교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École de la Deuxième Chance이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스웨덴의 포크 고등학교는 18세 이상 청년들에게 심화 진로, 사교기술 및 생활기술 코칭, 공식교육을 혼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등급시스템을 만들어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공립 대학교에서는 포크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쿼터를 따로 두고 있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은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이 소위 "청년 휴게실"에서 제공되는데, 여기에서는 청년 노숙자들에게 교육과 숙소,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직업훈련시설 인근에 위치해있는 경우가 많다.

박스 1.6. **조기 학업중단자를 위한 두 번째 기회 학습 옵션: 기회와 과제(계속)**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확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잘 훈련되고 동기부여가 잘된 직원들이 있어야 강도 높은 지원과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 인프라 요건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훈련시설, 숙소, 레저활동, 심지어 보건의료시설까지 한 곳에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의존도와 범죄 활동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Schochet et al., 2008; Cohen and Piquero, 2010, 2015).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의 수용능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적합하고 동기부여도 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주

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청년"이나 "젊은이"는 15-29세 또는 16-29세를 의미한다.

2. "낙인효과(Scarring effect)"에 일조하는 요인은 실직기간 중의 인적자원 감가상각(human capital depreciation) 및 직업적 인맥의 손실이다. 또한 사회생활 초반의 실직은 동기부여가 덜 되어 있거나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고용주에게 인식될 수 있다. 낙인은 심지어 젊은이들의 근로 선호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ckman and Borjas, 1980; Ellwood, 1982).

3. 몇몇 OECD 국가에서 청년인구는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아일랜드(-22%), 라트비아(-20%), 스페인(-19%), 체코와 슬로베니아(-16%)이다.

4. 이러한 가중평균은 터키와 멕시코 등 청년 인구가 많은 국가에는 큰 가중치를 준다. 반면 OECD 평균은 각국의 니트족 비율을 산출한 후 평균을 계산한다.

5. 니트족은 다음과 같은 청년으로 정의된다.
   - "고용상태가 아닌": "실업상태"이거나 "노동시장에 있지 않거나 비 활동상태"라고 표시한 청년
   - "재학 또는 훈련 중이 아닌": 학교, 대학 또는 견습 프로그램 등 공식적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년. 비 공식 교육과정 중의 청년은 이 정의상으로는 재학 또는 훈련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urostat은 비 공식 교육과정 중의 청년을 비 니트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 니트족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2013년 스페인 (5% 포인트 하락), 덴마크(4% 포인트 하락), 스웨덴(3% 포인트 하락) 등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의 정의를 공식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취미과정 등 비 공식 교육 간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비 공식 교육에 관한 정보가 비 유럽 국가의 경우 나와있지 않아 OECD 내 국가간 비교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추정에 청년고용률 증가의 가능한 일반적 평형효과는 간과되어 있는데, 특히 니트족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그러하다. 이들 국가의 경우 니트족의 상당비율이 고용으로 전환되면 전반적인 노동력 공급이 크게 늘어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 증가는 수요를 자극하고 전체적인 물가와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이 추정치는 높은 임금을 제안 받는 청년들은 근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연령, 업무경력, 성별, 가구특징 등 관찰 가능한 특징을 고려해 니트족의 임금을 추산한다. 임금은 선택효과(selection effects)를 고용으로 보정하는 헤크먼 교정(Heckman correction)을 이용해 산출된다. 임금은 고용된 청년에 대해서만 관찰되며 고용된 청년은 비 근로 청년에 비해 더 높은 소득 잠재력 및/또는 더 낮은 근로 비용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근로하는 청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 근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예측하면 왜곡될 수 있다. 헤크먼 교정은 각 청년의 근로 확률을 직접 계산하고 임금 등식의 추정치 조정을 위해 이 확률을 이용함으로써 수정을 가한다. 이 모델에서는 EU-SILC, HILDA(호주), SLID(캐나다), CASEN(칠레), SOEP(독일), ENIGH(멕시코), SILC(터키), CPS(미국)로부터 나온 거시 자료를 이용해 니트족의 시급을 추산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표본크기를 늘리기 위해 몇 년간의 자료를 모아 두었다.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는 교육(고졸 미만, 고졸 및 비 고등 고교 후 교육(post upper-secondary and non tertiary), 고등 교육), 잠재적 근로경험(과 이차항(quadratic term)), 성별, 지역, 청년이 배우자나 동거파트너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연도 통제가 적용 가능했다. 잠재적 근로 경험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국가의 경우 연령과 이차항(quadratic term)을 사용한다. 다양한 가구 특성에 대한 선별 방정식 조정(equation controls): 5세 미만의 자녀 있음, 부모와 동거, 가구 내 타 가구원이 수급하는 소득. 자녀와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있는 경우의 영향은 남녀를 구분하여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문제 유무 역시 고용 선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모델은 국가별로 따로따로 산출되었다. 추정임금 및 비용(Imputed wages and costs)은 고용소득과 관련이 있는데, 해당 연도에 근로한 개월 수에 관한 정보가 고용 및 자영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터키는 예외이다. 칠레와 스위스 (2013), 터키 (2012), 캐나다 (2011)를 제외하고는 2014년 자료이며, 값은 2014년 미 달러 기준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는 나와 있지 않았다.

8. 평균 연 임금 비용(즉, 평균 총 연간 고용소득 +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은 15-19세, 20-24세, 25-29세 연령 집단에 대해 국가별로 산출되었으며 남녀별로 구분했다.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니트족 수를 곱하여 상위 추정치(upper bound estimate)를 산출했다. 하위 추정치(Lower bound estimat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성별 및 연령집단 별 니트족 숫자를 해당 집단 중위소득의 67% 임금에 할당했다.

9. 이들 추정 값은 2011년 EU 국가에 대한 최근 추정 값과 맥을 같이 한다(Eurofound, 2012).

10. 이들 통계적 계산의 중요 한계는 부모 학력은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한다는 결정이 부모의 학력수준과 관련있고 (예: 부모의 학력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니트족과 비 니트족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11. 학력과 빈곤의 대물림은 널리 연구되어 왔으며 이혼의 대물림 (예: Diekman and Schmidheiny(2008))과 가치의 대물림(예: Min et al. (2012))에 관련한 다양한 신념과 행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12. 1962년에서 1967년 사이에 운영된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Perry Preschool Program)은 3세 당시 초기 지능지수가 85인 저소득 흑인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주중 매일 아침 2.5시간동안 제공되었다. 평균 아동 대 교사 비는 6대 1이었다. 교육과정은 사회성과 적극적 학습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아동들은 (1)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관련 활동, (2) 아동 본인이 성인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고 수행하고 검토하는 활동, (3) 문제 발생 시 타인과 협력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가정방문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2년 후 종료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40여년간 추적 연구했다.

13. 분석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5-29세 청년을 추적하여 실시했다. 4년간 청년들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자료 및 분석에 관해 좀더 상세한 정보는 이 장의 부록 참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OECD 16 개국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14. 한가지 예외는 호주의 청년수당(Youth Allowance)으로 16-21세 청년 구직자들의 주된 소득지원급여이다.

15. 실업급여는 실업보험급여를 포함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관대성이 덜한 실업보조금도 포함한다.

16. 공적연금(그러므로 노인들이 대상)은 본 분석에 제외되어 있다. 왜냐하면 연금은 당연히 노인의 상당수를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공적 연금과 자본 기반 연금 제도의 국가간 비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17. 빈곤율이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은퇴자들은 이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빈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18. 소위 STAR(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학생/교사 성취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평균 15-22명 규모의 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실험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테네시 주 79개 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27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었다.

19. 청소년(older adolescents)들 및 감정적, 성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던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조기에 종료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

20.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은 카리스마있고 신뢰할만한 멘토의 참여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멘토는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야 하며 멘티와의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신뢰가 형성되고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DuBois et al., 2002; Rhodes, 2008). 이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의 주된 장애요인은 적합한 자원봉사 멘토를 모집하는 것이다. 한가지 유망한 접근방식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멘토를 찾는 것이었다. 멘티와의 만남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면 멘토가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학교와의 파트너십 역시 대안적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호주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BIG Futures는 BBBS 멘토링을 호주 학교에 직접 도입할 예정이다. Australian iTrack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에게 18주간 멘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학교-기업-지역사회 파트너십 브로커(School Business Community Partnership Broker) 프로그램은 2009년 정부가 교육적 성과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합의한 일련의 이니셔티브인 청소년 성과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for Youth Attainment and Transitions)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였다. 성과이행 파트너십은 2013년에 종료되었으며 파트너십 브로커 프로그램은 1년 더 연장된 후 2014년에 종료되었다.

22. 2010년, 전체 견습생의 약 28%가 예비 견습제도를 수료했다.

23. 모든 고용 가능성이 민간 부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24.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s)는 1980년대 후반 북유럽 국가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25. 유스 커넥션(Youth Connections)은 학교-기업-지역사회 파트너십 브로커 프로그램(School Business Community Partnership Broker Program)처럼 2014년에 종료된 청년 성과이행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for Youth Attainment and Transitions)의 일부였다. 원칙적으로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호주 주 정부의 책임이다.

26. 실제로 "상호의무" 개념은 고용 가능한 청년 구직자들에 대해 호주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자리, 자원봉사 또는 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개념이다(OECD, 2012f).

참고문헌

Abdulkadiroglu, A. et al. (2009), "Accountability and Flexibility in Public Schools: Evidence from Boston's Charters and Pilots", *NBERWorking Paper, No. 15549, www.nber.org/papers/w15549*.

Almlund, M., Duckworth A.L., Heckman J. and Kautz T. (2011), "Personality Psychology and Economic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Vol. 4.

Angrist, J.D. and V. Lavy (1999), "Using Maimonides' Rule to Estimate the Effect of Class Size on Scholastic Achieve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4, No. 2, pp. 533-575.

Angrist, J.D. et al. (2016), "Stand and Deliver: Effects of Boston's Charter High Schools on College Preparation, Entry, and Choi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Summer 2014, Vol. 49, No. 3, pp. 572-610.

Angrist, J.D. et al. (2012), "Who Benefits from KIPP?",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31, No. 4, pp. 837-860.

Báron, J.D. and D.A. Cobb-Clark (2010), "Are Young People's Educational Outcomes Linked to Their Sense of Control?, *IZA Discussion Paper*, No. 4907, Bonn.

Brunello, G. and M. Schlotter (2011), "Non Cognitive Skills and Personality Traits: Labour Market Relevance and their Development in Education &Training Systems", *IZA Discussion Paper*, No. 5743, Bonn.

Budig, M. and P. England, (2001), "The Wage Penalty for Mother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2, pp. 204-225, April.

Cahuc, P., S. Carcillo, and K.F. Zimmermann (2013), "The Employment of the Low-Skilled Youth in France", *Les notes du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No. 4, April.

Cahuc, P., S. Carcillo and A. Zylberberg (2014), *Labor Economics*, 2nd edition, MIT Press, Boston.

Caliendo, M., S. Ku nn, and R. Schmidl (2011), "Fighting Youth Unemployment: The Effects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ZA Discussion Paper*, Bonn, *http://ftp.iza.org/dp6222.pdf*.

Carcillo, S. et al. (2015), "Investing in Youth – Policies and Challeng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3503f6-en*.

Card, D., J. Kluve and A. Weber (2015), "What Works? A Meta Analysis of Recent Active Labor Market Program Evaluations", *IZA Discussion Paper*, No. 9236, Bonn.

Card, D., J. Kluve and A. Weber (2010),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Analysis", *Economic Journal*, Vol. 120, No. 548, pp. F452-F477

Chetty, R. et al. (2011), "How Does Your Kindergarten Classroom Affect Your Earnings? Evidence from Project Sta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6, No. 4, pp. 1593-1660.

Clark, G. (2014), *The Son Also Rises: Surnames and the History of Social Mobi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hen, M.A. and A.R. Piquero (2015), "Benefits and Costs of a Targeted Intervention Program for Youthful Offenders: The YouthBuild USA Offender Project",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Vol. 6, No. 3, pp. 603-624.

Cohen, M.A. and A.R. Piquero (2010), "An Outcome Evaluation of theYouthBuild USA Offender Project",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 8, No. 4, pp. 373-385.

Cunha, F. and J.J. Heckman (2007), "The Technology of Skill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 No. 2, pp. 31-47.

Cunha, F. et al. (2006),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in E.A. Hanushek and F.Welch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Chapter 12, pp. 697-812, Amsterdam.

Dee, T. and M.West (2008), "The Non-Cognitive Returns to Class Size", *NBER Working Paper*, No. 13994, Cambridge, United States, *www.nber.org/papers/w13994*.

Deloitte Access Economics (2012), "Econometric Analysis of the Australian Apprenticeships Incentives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sites/prod.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files/publication documents/EconometricAnalysisAAIP.pdf*.

Dias, M. and C. Tomas (2012), "Education and Equity in Semi-peripheral Countries: Current Trends in the Field of Priority Education in Portugal",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47, pp.1092-1096.

Diekman, A. and K. Schmidheiny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A Fifteen-Country Study with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 *Comparative Sociology*, Vol. 12, No. 2.

Dobbie,W., Jr. Fryer and G. Roland (2011), "Are High Quality Schools Enough to Close the Achievement Gap? Evidence from a Social Experiment in Harlem",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3, No. 3.

DuBois, D.L. et al. (2002),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s for youth: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No. 2, pp. 157-197.

Ellwood, D. (198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R.B. Freeman and D.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49-390.

Eurofound (2012), *NEETs –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 the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2011), "Attitudes Toward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pecial Eurobarometer*, No. 369, *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369_en.pdf*.

Field, S. et al. (2012), *A Skills beyond School Review of Denmar*k,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3668-en*.

Gelber, A., A. Isen, and J.B. Kessler (2016), "The Effects of Youth Employment: Evidence from NewYork City Lotte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1, No. 1, pp. 423-460.

Goldberg, L.R et al. (1998), "Demographic Variables and Personality: The Effects of Gender, Age, Education, and Ethnic/Racial Status on Self-Descriptions of Personality Attribu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4, No. 3, pp. 393-403.

Grossman, J.B. and J.E. Rhodes (2002), "The Test of Time: Predictors and Effects of Duration in Youth Mentoring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No. 2, pp. 199-206.

Heckman, J. (2008),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Children", *CESifo DICE*, Vol. 6, No. 2.

Heckman, J.J. and G.J. Borjas (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Definitions, Questions and Answers from a Continuous Time Model of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Economica*, Vol. 42, No. 187, pp. 247-283.

Heckman, J.J., J. Stixrud and S. Urzua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4, No. 3, pp. 411-482.

Heckman, J.J. et al. (2009), "The Rate of Return to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4, No. 1-2, pp. 114-128.

Heller, S.B. et al. (2015), "Thinking, Fast and Slow? Some Field Experiments to Reduce Crime and Dropout in Chicago", *NBER Working Paper*, No. 21178, Cambridge, United States, *www.nber.org/papers/w21178*.

Jorm, A.F. (2015), "How Effective Are 'Headspace' Youth Mental Health Servic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 49, No. 10, pp. 861-862.

Kautz,T. et al. (2015), "Fostering and Measuring Skills: Improving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to Promote Lifetime Success", *OECD EducationWorking Paper*s, No. 11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sr7vr78f7-en*.

Kemple, J.J. (2008), "Career Academies – Long-term Impacts on Labor Market Outcom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MDRC, *www.mdrc.org/sites/default/files/full_50.pdf*.

Kluve, J. (2010),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Active Labour Market Programs", *Labour Economics*, Vol. 17, pp. 904-918.

Kramarz, F. and O.N. Skans (2013), "When Strong Ties Are Strong: Family Networks and Youth Labour Market Entry", *CEPR Discussion Paper*, No. 9620, forthcoming in Review of Economic Studies.

Lee, K. (2008), "The Effects of Children's Age at Entering Head Start on their Short- and Long-term Developmental Outcomes", *Social Service Review*, Vol. 82, No. 4, pp. 663-702.

Lyche, C. (2010), "Taking on the Completion Challenge: A Literature Review on Policies to Prevent Dropout and Early School Leaving",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5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m4m2t59cmr-en*.

McIntosh, S. (2004), "The Impact of Vocational Qualifications on the Labour Market Outcomes of Low-Achieving School-Leavers", *CEP Discussion Paper*, No. 621,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http://eprints.lse.ac.uk/19982/*.

Min, J., M. Silverstein and J. Lendon (201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alues Over the Family Life Cours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 17, No. 3.

Möller, J. and M. Umkehrer (2014), "Are There Long-Term Earnings Scars from Youth Unemployment in Germany?", *ZEW Discussion Paper*, No. 14-089,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Mannheim.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2014), *Report of the National Review of Mental Health Programmes and Services – Vol. 1*, NMHC, Sydney.

OECD (2016), *Investing in Youth:Australi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7498-en*.

OECD (2015a),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OECD (2015b),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178-en*.

OECD (2015c) *Fit Mind, Fit Job*,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8283-en*.

OECD (2015d), *Mental Health and Work: Australi*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6591-en*.

OECD (2015e), *Integrating the Delivery of Social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3775-en*.

OECD (2015f),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5-en*.

OECD (2014), *Skills Beyond School: Synthesis Report,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82-en*.

OECD (2013). *PISA 2012 Results: Ready to Learn: Students' Engagement, Drive and Self-Beliefs (Vol. III)*,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170-en*.

OECD (2012a). *Sick on the Job? Myths and Realities about Mental Health and Wor*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mental-health-and-work-9789264124523-en.htm*.

OECD (2012b), *Education at a Glance 2012: Highlight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_highlights-2012-en*.

OECD (2012c),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Supporting Disadvantaged Students and School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30852-en*.

OECD (2012d), "PISA in Focus 2012/07 (July)",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edu/pisa%20in%20focus%20n18%20(eng)–v05.pdf*.

OECD (2012e), "OECD Note on 'Quality Apprenticeships' for the G20 Task Force on Employment", 26 September 2016, *www.oecd.org/els/emp/OECD%20Apprenticeship%20Note%2026%20Sept.pdf*.

OECD (2012f), *Activating Jobseekers – How Australia Does I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5920-en*.

OECD (2011), *Quality Time for Students: Learning In and Out of Schoo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7057-en*.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8856-en*.

OECD (2007),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arning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s: Policies, Statistics an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du/school/studentswithdisabilitieslearningdifficultiesanddisadvantagespoliciesstatisticsandindicators-2007edition.htm*.

OECD-LEED (2014), *Local Implementations of Youth Guarantee: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cfe/leed/THE%20LOCAL%20IMPLEMENTATION%20OF%20YOUTH%20GUARANTEES_FINAL2015.pdf*.

Pellizzari, M. (2010), "Do Friends and Relatives Really Help in Getting a Good Job?", *Th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63, pp. 494-510.

Piketty, T. and M. Valdenaire (2006), "L'impact de la taille des classes sur la réussite scolaire dans les écoles, collèges et lycées français", *Les dossiers évaluations et statistiques*, No. 173,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March.

Poropat, A.E. (2009), "A Meta-Analysi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5, No. 2, pp. 322-338.

Quintini, G. and S. Martin (2014), "Same Same but Different: School-to-work Transitions in Emerging and Advanced Econom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b2t1rcwc-en.

Rhodes, J.E. (2008), "Improving Youth Mentoring Interventions Through: Research-base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1, pp. 35-42.

Rickwood, D.J. et al. (2015a), "The Services Provided toYoung People by Headspace Centres in Australia",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 202, No. 10, pp. 533-537.

Rickwood, D.J. et al. (2015b), "Chang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Young People Visiting Headspace Centres for Mental Health Problem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 202, No. 10, pp. 537-542.

Rickwood, D. et al. (2015c), "Innovation in Youth Mental Health Services in Australia: Common Characteristics Across the First Headspace Centres",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Vol. 9, No. 1, pp 29-37.

Schmillen, A. and M. Umkehrer (2013), "The Scars of Youth: Effects of Early-career Unemployment on Future Unemployment Experience", *IAB Discussion Paper*, Vol. 6/2013,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Nuremburg.

Schochet, P.Z., J. Burghart and S. McConnell (2008), "Does Job Corps Work? Impact Findings from the National Job Corps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5, pp. 1864-1886, December.

SPRC –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2015), "Is Headspace Making a Difference to Young People's Lives? Final Report of the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Headspace Program", *SPRC Report*, Vol. 08/2015,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Sydney.

SPRC (2009), "Headspace Evaluation Report – Independent Evaluation of Headspace: The National Youth Mental Health Foundation", *SPRC Report*, Vol. 09/2009,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Sydney.

Sweet, R. (2009), "Apprenticeship, Pathways and Career Guidance: A Cautionary Tale", in F. Rauner et al. (eds.), *Innovative Apprenticeships*. Promoting Successful School-to-Work Transitions, Conference Proceedings, InAp Conference, Turin.

Umkehrer, M. (2015), "The Impact of Changing Youth Employment Patterns on Future Wages", *IAB Discussion Paper,* Vol. 31/2015,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Nuremburg.

Van Eijck, K. and P.M. de Graaf (2004), "The Big Five at School: The Impact of Personality on Educational Attainment",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40, No. 1, pp. 24-40.

Watts, A.G. (2009), "The Relationship of Career Guidance to VET",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du/skills-beyond-school/44246616.pdf*.

부록 1.A1

종적분석의 자료 및 방법론

니트족 지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려면 상당량의 자료가 요구된다. 청년들의 니트족 궤적을 파악하려면 장기간 매년 월 1회씩 재학여부 및 노동시장 참여를 판단하는 개인차원의 종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분석의 초점이 구체적으로 실업 또는 비 활동 기간에 맞춰져 있으므로 표본에 속한 이들이 많아야 충분한 수의 니트족들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출처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된 2012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
- 2009-12년에 매년 실시된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조사

둘 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8개월간 매달 활동 상태에 관한 정보 - 실업 및 비 활동기간 포함 - 를 제공한다. 표본은 관찰 기간 초반 기준 15-29세 청년으로 제한되었으며 당시 이들의 활동 상태는 관계없었다. 48개월간 1개월 이상 노동시장 활동 정보가 빠져 있는 이는 탈락시켰다. 국가별로 모든 관찰된 궤적의 10% 이상이 미완성인 경우가 아니면 분석에 포함시켰다. HILDA는 2001년부터 매년 가구를 관찰한 기록인 반면 EU-SILC는 4년간에 대해서만 정보가 나와 있다. 그러므로 분석은 4년에 국한했다.

니트족 기간 연구는 청년 응답자가 고용, 학업 또는 훈련 상태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연속된 개월 수로 정의했다. 니트 상태가 이어지다가 한 달간 학업 또는 고용 상태로 바뀐 경우가 두 번 있었다면 니트 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니트 비 활동과 실업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부록 1.A2

소득지원 급여의 개요

표 1.A2.1. **고용기록이 없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적 급여제도가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고용기록 없는 20세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급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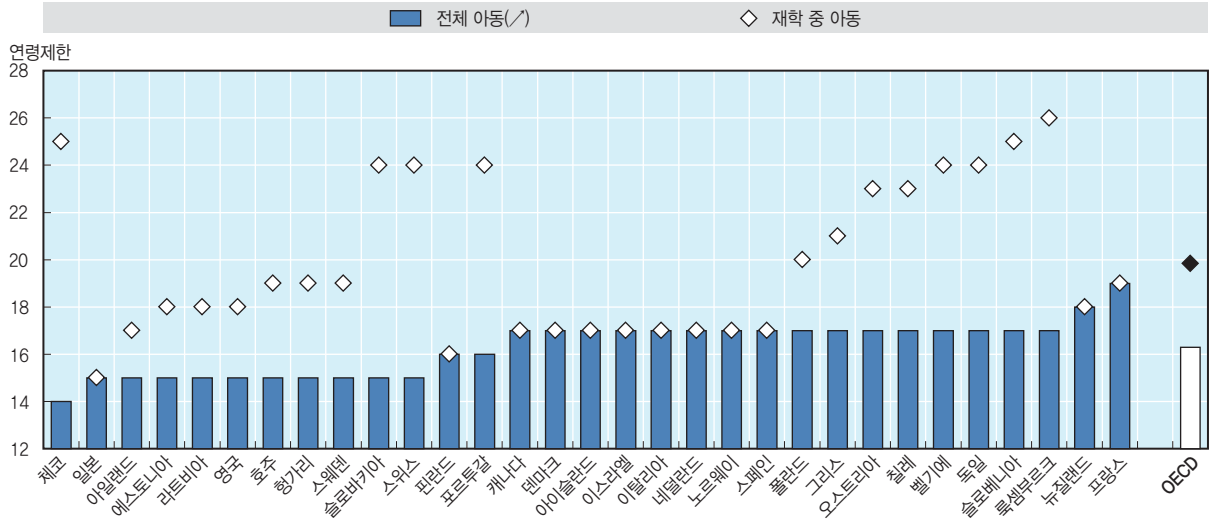
	실업급여		최저소득급여		부가적 자녀부양(child–contingent) 급여	
	UI	UA	SA	HB	FB	LP
호주		●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캐나다			●		●	●
칠레					●	
체코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독일			●	●	●	●
그리스		●			●	●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		●
일본			●		●	●
한국			●	●		●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스웨덴		●	●	●	●	
스위스			●	●	●	
터키						
영국		●	●	●	●	●
미국			●		●	

주: "UI"는 실업보험급여, "UA"는 실업지원급여, "SA"는 사회지원급여, "HB"는 주거급여, "FB"는 가족급여, "LP"는 한부모급여.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그림 1.A2.1. **가족급여는 일반적으로 16, 17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 및 재학 중인 청소년을 위한 가족현금급여 또는 비 환급형 세금공제의 연령 상한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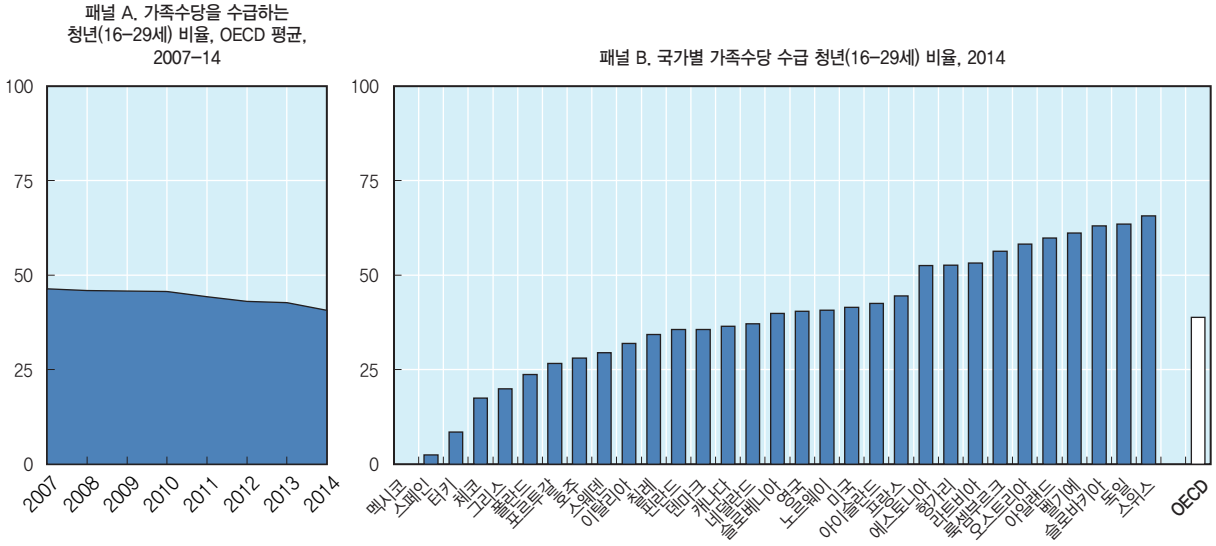


주: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 스위스는 취리히.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096

그림 1.A2.2.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급여를 수급한다.**



주: 청년은 전년도에 급여를 수급한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급여 수급자로 정의한다.

결과는 독일(17-29세), 미국(16-24세)을 제외하고는 16-29세를 대상으로 한다.

패널 B에서는 칠레와 스위스(2013), 터키(2012), 캐나다(2011)를 제외하고는 2014년 결과이다. 국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급여수급률 오름차순으로 배열했다.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Survey, Canada's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SLID), Chile's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ation Survey(CASE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Mexico'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ENIGH), and the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04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7

제2장

OECD 사회지표 해석

한 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은 OECD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흐름을 다루고 그 동안의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가지 목표는 현재 정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결과를 평가, 비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표는 사회적 대응의 개요와 정책 조치가 사회발전을 심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은 니트족(고용 상태도 아니면서 재학 또는 직업훈련 중이 아닌 상태) 문제에 대응할 정책적 조치를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 대한 지표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지표들은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사용되었던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New York] 여기에서는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분류했다.

- "사회적 영역": 일반적 지표를 의미한다. 물론 정책 목표가 항상 사회적 상황을 직접 이해하는데 관련 있는 정보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영역 지표의 예는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등이다.
- "사회적 상태":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한다. 이상적으로는 선별된 지표들이 쉽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국가가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한다"등이다.
- "사회적 대응":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도 예가 될 수 있으며 NGO와 가족, 범위를 넓히면 시민사회 활동도 그 예가 된다.

그리고 한 눈에 보는 사회에서 사용된 틀은 지표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자활(Self-Sufficiency)"
- "형평성(Equity)"
- "보건(Health Status)"
-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련 OECD 간행물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사회적 웰빙과 발전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자 일련의 웰빙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하여 ***How's Life***는 좀더 광범위한 성과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 지표는 제외하고 있다. 그 외에 한 눈에 보는 사회에서는 정책분석과 권고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사회지표의 수집과 발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표를 수집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7

- 국가간 지표 비교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각 영역별로 최고의 비교 정보를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기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 비교성이 있는 지표들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한편, 독자들은 사용된 자료의 성격과 비교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
-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는 최소한 몇 개 국가인가? 이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들만을 포함한다.
- 국가차원에서 어떠한 분류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사회적 지표는 국가차원에서 연령, 성별, 가족유형 등 사회적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택했는데, 즉, 제시된 분류는 해당 지표에 따라 다르며 이미 나와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고려해 결정했다.

제3장부터 7장까지는 주요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지표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OECD에서 간행된다(예: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그 외 지표들은 필요할 경우 수집했다. 일부 지표는 기존 지표를 약간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지표의 선정과 설명

일반 사회적 영역 지표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할 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성과가 낮거나 또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측면은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자, 가족구성, 인구추이 등 일반 지표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지표들에 대해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한다(제3장 참고).

표 2.1. **일반지표 목록**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가족
인구추이

자활 지표

자활은 기본적인 사회정책 목표이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 선정된 자활지표는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급 고용은 소득과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유급 고용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유급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실업상태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부양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기술 역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최근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경험에 따르면 운 나쁘게 경기 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청년들의 고용 및 소득 전망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된 사회적 대응은 교육에 대한 공공, 민간지출이다.

아래 표는 OECD 국가들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자활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선정해 열거한 것이다.

표 2.2. **자활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고용	
실업	교육비 지출
기술	
노동시장 진입	

형평성 지표

형평성은 또 다른 공통의 사회정책 목표이다. 형평성 성과는 주로 자원에 대한 접근성으로 측정된다.

형평성은 여러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제5장). 이것은 결과의 평등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무엇이 공정한 기회나 결과의 배분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평성 측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사회적 상태 형평성 지표는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으로 국한했다.

소득불평등은 사회 전체에 걸쳐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정책은 소득분포의 하위층에 위치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평등 외에 빈곤지표도 사용했다. 보장된 최저소득급여를 고려함으로써 저소득가정에 대한 재정적지원과 확보 가능한 생활수준을 보여준다. 급여수급 (Living on benefits) 지표는 좀더 일반적인 소득불평등과 빈곤지표를 보완한다. 모든 OECD 국가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비상사태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사회지출로 요약된다. 형평성 지표는 자활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합치면 국가의 사회적보호제도가 충분한 급부를 제공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자활 촉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생산연령 국민에 대한 현금이전이 주요 소득안전망이 된다 (실직급여 수급자).

표 2.3. **형평성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소득 불평등	사회적 지출
빈곤	
급여수급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지표

보건상태는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보건상태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건을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6장).

사회적여건과 보건상황 간의 연계는 잘 확립되어 있다. 실제로 교육적성과, 공중 보건 지표, 보건의료에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여명으로 측정되는 건강상태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여했다. 건강상의 초점은 객관적인 보건지표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인지하는 건강상태 등 좀더 주관적인 인구 기반 보건지표는 전반적인 웰빙을 평가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자살률은 보건과 사회적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지출은 보건상황 관련 우려에 대한 보건의료제도상 정책 대응의 좀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체 인구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보건지표는 흡연 및 음주로 둘 다 수많은 해로운 건강 및 사회적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상 문제는 때로는 보건정책의 범위를 벗어나 상호 연관된 사회적 상황 - 실업, 빈곤, 부적절한 주택 등 - 에 뿌리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상 개입의 효과성은 지출 수준 자체보다는 의료보험의 낮은 적용범위나 본인부담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다른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건상황과 개입에 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는 OECD 보건 통계(OECD Health Statistics)와 한 눈에 보는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4. **보건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기대수명	보건지출
인지하는 건강상태	
자살	
흡연 및 음주	

사회통합 지표

사회통합은 국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내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별로 없지만 광범위한 증상은 사회통합이 부재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서로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난다(제7장).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활 여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제도에 대해 갖는 신뢰의 정도와 투표 참여는 개인들의 통합과 사회적 생활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두가지 주요 측면이다. 범죄와 재소자(crime and prisoners)에 관한 일반적 지표를 보면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어느 정도 촉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교류는 웰빙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집단 행동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또 다른 주요 사회통합 지표로, 친지와 친구, 온라인 연결 또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사회통합 사안에 관해 관련성 있고 비교 가능한 대응 지표를 직접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정책의 다른 측면(자활, 형평성, 보건)과 관련된 정책 역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2.5. **사회통합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삶의 만족도	
신뢰	
투표	
범죄와 재소자	
사회적 네트워크	

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 보고서의 제3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는 다섯 개 영역에서는 선정된 다섯 개 지표 각각에 대해 한 페이지의 설명과 한 페이지의 차트를 제시하고 있다. 차트와 설명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패턴을 따른다. 대부분의 지표는 청년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기간 선정은 부분적으로는 자료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다음에 대해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1)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비교하기 위해 지난 세대에 걸친 변화, (2) 지난 경제 위기(일반적으로 2007-08년) 이후의 기간을 조사하여 최근 경제적 변동이 사회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의 및 측정" 섹션은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문제를 논하고 있다.

각 자료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OECD 웹사이트(http://oe.cd/sag) 또는 각 지표의 우측 하단에 있는 "StatLink"를 타이핑하거나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더 많은 국가의 자료가 나와 있다).

참고문헌

OECD (2015), *How's Life –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United Nations(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New York.

3. 일반 지표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가족

인구 추이

가처분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이는 물질적인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빈곤 및 불평등 측정에 사용된다.

2013년, 멕시코 인구의 절반은 소득이 구매력지수를 감안해 미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4,800달러 미만이었으나 룩셈부르크 인구의 절반은 소득이 그 여덟 배였다(그림 3.1). 중위 가구소득이 낮은 국가로는 남유럽 국가들, 터키, 동부유럽의 여러 국가, 라틴아메리카의 칠레와 멕시코가 있다. 가구소득이 높은 국가로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있다.

평균적으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실질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은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공적 현금 이전과 개인소득세의 영향 덕분이었다 (그림 3.2). 실질 중위 가처분소득은 그리스에서 연 8%가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도 3% 이상 하락했다. 반면 칠레에서는 가처분소득이 크게 상승했으며 정도는 덜하지만 이스라엘과 폴란드에서도 상승했다.

그림 3.2는 인구 상위 10%와 하위 10%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실질 중위가처분소득과 상위 10%의 소득은 2007-13년 기간 중 매년 거의 1% 하락했다.** 자료가 나와 있는 34개 국가 중 21개국에서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성과가 좋았다(제5장의 "소득 불평등" 지표도 참고). 이 패턴은 가구소득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 중 일부에서 특히 강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빈곤 가구의 소득이 매년 5% 이상 하락했으며 그리스에서는 10% 이상 하락했다.

가구소득 자료는 연령집단 별로도 나와 있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청년(18-25세)들은 가장 심각한 소득 손실을 겪은 반면, 노인(65세 이상)들은 대체로 위기가 소득에 미치는 최악의 영향은 피했다(그림 3.3).** OECD 전역에서 청년들의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은 실질기준으로 연 0.6% 정도 하락했다. 한편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은 안정적이었다. 청년층의 대규모 소득 손실은 그리스에서 특히 컸으나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도 나타났다. 칠레와 스웨덴에서는 약간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노인층보다 상황이 나았던 국가는 7개국(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그 정도는 1% 미만이었다.

정의와 측정

연간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자료는 OECD 소득분포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가처분소득은 공적현금이전 수급 및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후 시장소득(근로소득과 자본 소득)이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가구에 제공한 현물서비스, 소비세, 주택 소유로 인한 귀속임대료 소득 흐름은 배제했다. 가구소득은 가구 구성원수로 나누었다.

세금을 제하고 복지급여를 더하면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가구규모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눈 균등화 규모로 서로 규모가 다른 가구의 욕구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한 후 조정된 소득을 가구 내 각 구성원에게 배정했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각국 통화로 표시된 소득 지표를 민간소비환율을 위한 구매력지수를 사용해 미 달러로 변환했다. 이러한 구매력지수는 미국에서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각 국가에서 구입하는데 필요한 해당 국가 통화 금액을 나타낸다. 소득과 구매력지수 추정치 둘 다 통계적 오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차이가 5% 미만인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참고문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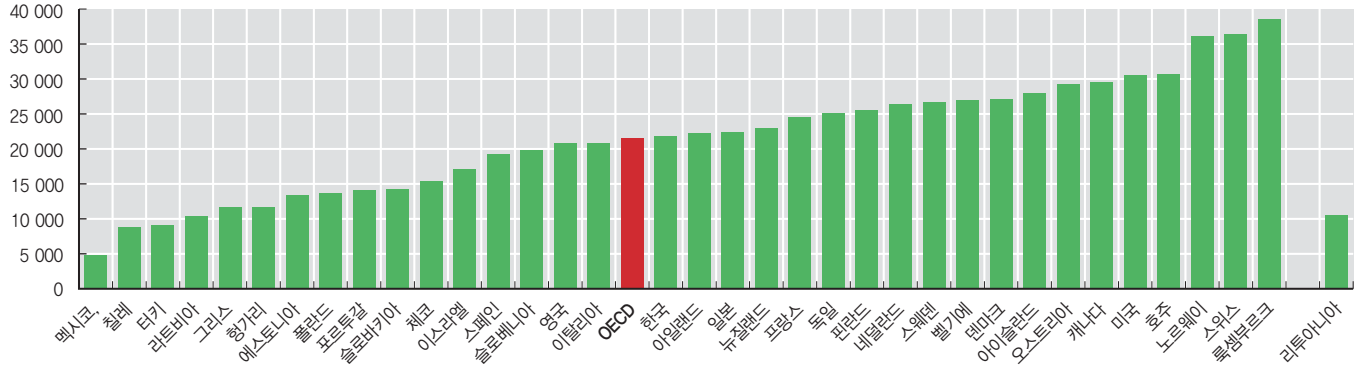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oe.cd/init2015.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3.2와 3.3: 2012년부터 가구 소득의 표준 방법론이 바뀌면서 자료가 조정되어 연속된 자료가 단절되었다. 스위스는 변화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3.1. 각국의 중위소득은 미화 4,800달러부터 38,500달러까지 분포하며 최대 8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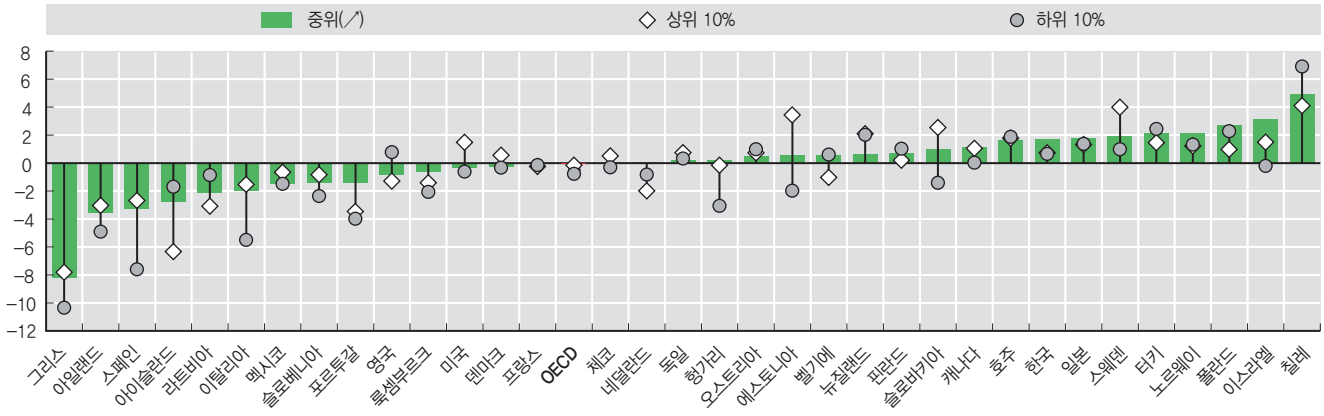
연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2013년, 미 달러 구매력지수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12

3.2. 2007에서 2013년 사이 빈곤 가구일수록 가처분 소득이 많이 하락하거나 적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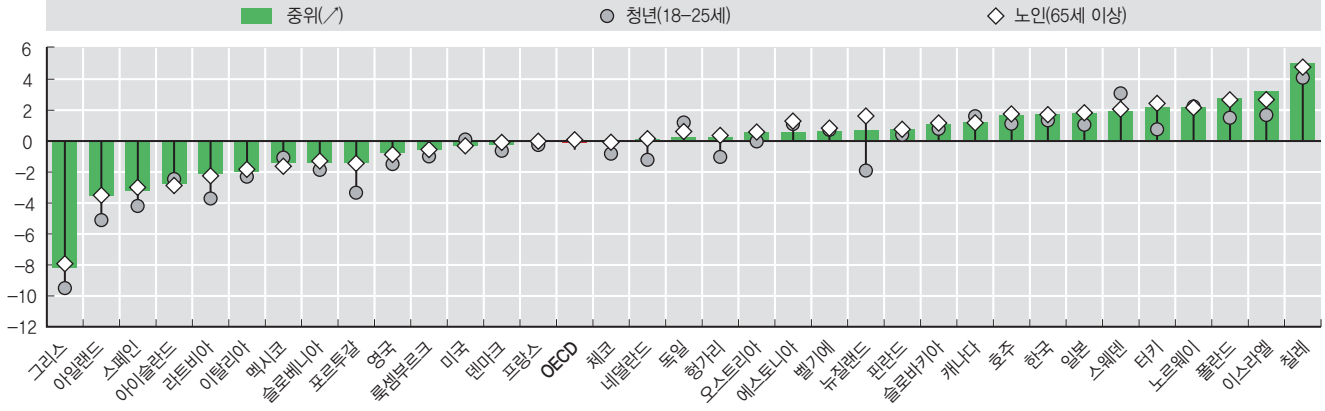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실질 가구 가처분소득의 연간 비율 변화, 소득집단 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23

3.3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청년층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실질 가처분소득의 연간 비율 변화, 연령집단 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30

합계출산율은 평균적으로 여성 한 사람이 평생동안 연령별 출산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갖게 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영아기와 아동기의 사망률을 감안했을 때, 인구는 합계출산율이 2를 약간 넘어야 유지된다.

지난 수십년 간 OECD 지역에서 출산율을 급격히 하락하여 1970년 가임기 여성 한 명 당 평균 2.7명에서 2014년 1.7명을 기록했다 (그림 3.4). 하락은 한국과 멕시코, 터키에서 특히 -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4명 이상 - 두드러졌다. 최근 위기 전인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평균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러한 회복세가 2009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단되었는데 위기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2014년,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수준을 훨씬 밑돌아 OECD 전역에서 평균 1.7이었다(그림 3.4, 막대 그래프).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율이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높은 멕시코와 터키 여성보다 거의 자녀 한 명을 더 두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대체율을 초과하는 곳은 이 세 개 국가뿐이었다(여성 한 명당 자녀 2.1명). 영어사용 국가 및 북유럽 국가가 대개 출산율이 높았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OECD에서는 네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일본과 남유럽이었다. 출산율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두드러지게 낮았는데, 두 명의 부모가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다.

출산율은 OECD 국가보다는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아르헨티나와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에서 출산율이 대체율을 웃돌았다. 1995년에서 2014년 사이 러시아에서 출산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 다른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했다.

여성의 교육 및 고용률 증가, 직장과 소득 확보 욕구, 증가하는 주택문제 및 일부 국가의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가족들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등이 모두 출산율 감소에 일조했다. 가족을 꾸리는 시기를 늦추는 현상이 그림 3.5의 OECD 연령별 출산율(여성 천명 당 출생아 수)의 최근 추세에 반영되어 있다. 2000년부터 30대 미만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상은 상승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30-34세의 평균 OECD 출산율은 25-29세 출산율을 앞질렀으며 35-39세의 출산율도 20-24세를 앞질렀다. 또한 40-44세 출산율이 청소년 출산율을 곧 앞지를 전망이다. 청소년 출산율은 덴마크, 일본, 한국,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 청소년 천명당 출생아 수 5명 미만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50명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 꾸리는 시기를 늦추는 현상은 여성의 초산 평균 연령 증가에도 나타난다. 이는 자료가 나와 있는 26개 OECD 국가 전체에 나타나 있다(그림 3.6). **1995년부터 2014년 사이 평균 초산 연령은 26.1세에서 28.7세로 거의 3년 증가했다**. 2014년, 평균 초산 연령은 미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27세 이하로 가장 낮았고, 일부 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유럽 (룩셈부르크, 스위스), 지중해 연안국가(이탈리아, 스페인)에서 30세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정의와 측정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 중 여성 한 사람이 갖는 예상 자녀 수이다 (즉, 각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한다고 가정). 출산율은 5년의 간격을 두고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산출된다. 순 이주는 없고 사망률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면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이 2.1명("대체수준")이면 인구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일정 연도의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 천명 당 출생아 수이다. 여기에서는 5년 단위의 연령집단으로 제시했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구 등록자료나 기타 행정기록을 참조한다. 이 자료는 UN과 Eurostat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Eurostat 인구 통계 및 각국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OECD(2016),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2016), "SF2.3 Age of mothers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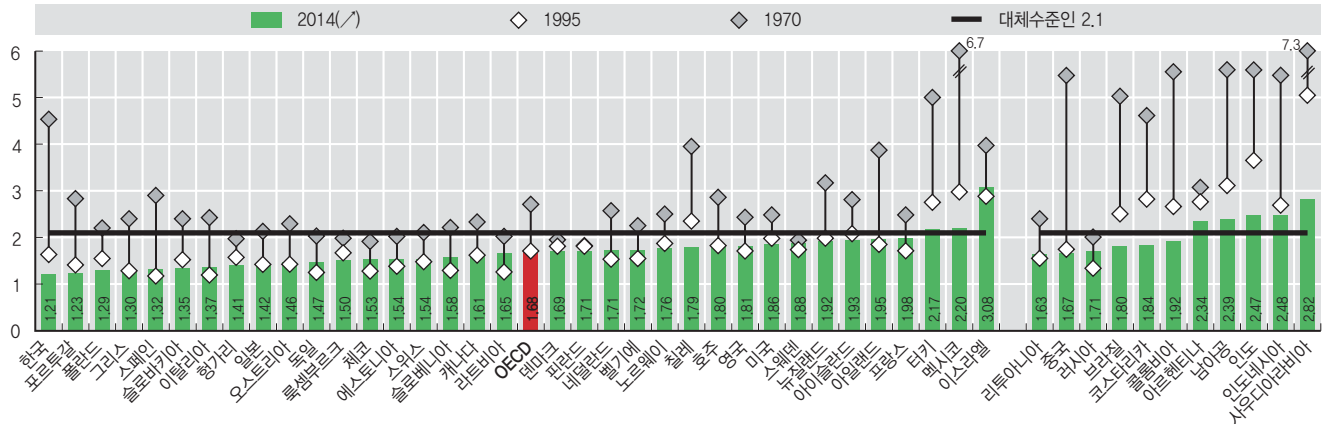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3.4: 캐나다는 2013년과 2014년이 아니라 2012년, 칠레와 비 EU, 비 OECD 국가는 2014년이 아니라 2013년이다.

그림 3.6: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국한된 자료이다. 캐나다는 2014년이 아니라 2011년, 프랑스와 스웨덴은 1995년이 아니라 1998년, 슬로바키아는 1995년이 아니라 1999년이다. 독일은 1995년 자료가 없다. 호주와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양쪽 연도 자료가 모두 없다.

3.4. OECD 전역의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대체율을 밑돈다.

15-49세 여성의 자녀 수, 1970년, 1995-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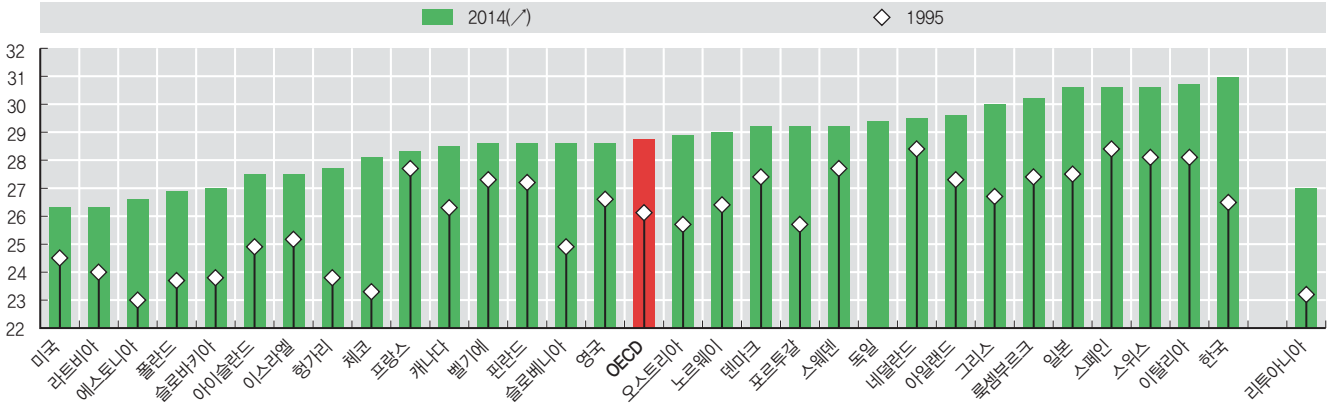
3.5. 30대 미만의 출산율 하락과 30대 이상의 출산율 상승

5년 단위 연령별 여성 천명당 출생아 수, 2000년에서 2014년, OECD 평균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55

3.6.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지난 20년간 거의 3년 상승했다.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 1995년과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SF2.3), based on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ec.europa.eu/eurostat/web/population-demographymigration-projections/population-data/database) and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61

유럽은 2015년, 망명 신청건수 최대 120만명으로 전례 없는 망명자 및 난민 건수를 기록했다 (그림 3.7). 약 25만명에서 35만명이 난민 혹은 유사 지위로 유입되는 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어떤 유럽 난민 위기 때보다 많은 수였다. 1990년대의 난민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은 몇 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OECD에서는 터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재 시리아인 190만 명이 들어와 있고 이라크로부터 비슷한 수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다. EU내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가 전면에 위치해있으나 난민들의 주된 종착국은, 절대적으로는 독일, 인구 대비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이다.

망명 신청자들은 이전 위기와 비교했을 때 출신 국가, 프로필, 망명 동기 등이 매우 다양하다. 시리아에서 탈출한 최근 난민들은 다른 집단 및, 예컨대 1990년대 유고 내전 당시 난민들과 비교했을 때 고 숙련 인력들이다. 과거에 비해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도 과거보다 많다. 난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가장 좋은 국가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취업시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OECD 평균적으로 인구의 13%가 외국 출생자였다.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은 호주와 캐나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생자였다 (그림 3.8). OECD 국가 중 거의 2/3가량은 이민자 비중이 인구의 열 명 중 한 명을 넘은 반면, 7개국에서는 이민자 비율이 5% 미만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이민 인구 비중이 2000년대에 인구의 9.5% 가량을 차지했다.

이민자 자녀가 15-34세 인구집단에서 4명 중 1명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청년층의 상당 비율에 해당한다. 최근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22개국에서, 2013년, 15-34세 청년 다섯 명에 거의 한 명꼴로 이민자 자녀 또는 아동기에 이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9% 는 성인이 되어 이민한 이들이었다 (그림 3.9).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부모 둘 다 외국 출생자인 자국 출생자녀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상대적 기준으로는 이민 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체 인구 중 상당비율이 이민자인 유럽 국가(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스위스)와 인구증가의 상당 비율이 이민으로 이루어진 호주와 캐나다였다. 반면 좀더 최근에 이민이 많이 이루어지는 남유럽과 핀란드의 경우는 청년의 1% 미만이 외국 출생자 부모에게서 출생했다.

정의와 측정

망명신청자와 난민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동된다. 망명 신청자는 국제적인 보호를 신청했지만 아직 그 신청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자이다. 각국은 국가 망명 제도를 두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가 실제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 서류 절차를 통해 난민도 아니고 어떤 형태이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모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망명 신청자에 관한 자료는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을 출처로 한다.

이민자는 우선 출생 당시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출생 인구가 외국 국적자보다 훨씬 많다. 이민 자녀는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즉, 부모 둘 다 외국 출생자이며 거주국에서 태어난 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생자이며 거주국에서 태어난 자, 외국에서 출생했으며 아동기에 이민 온 자,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으며 성인이 되어 이민 온 자이다.

참고문헌

OECD(2016),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5),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024-en*.

OECD(2015), "Is this Humanitarian Migration Crisis Different?", Migration Policy Debates, No. 7, OECD, Paris, September, *https://www.oecd.org/migration/Is-this-refugee-crisisdifferen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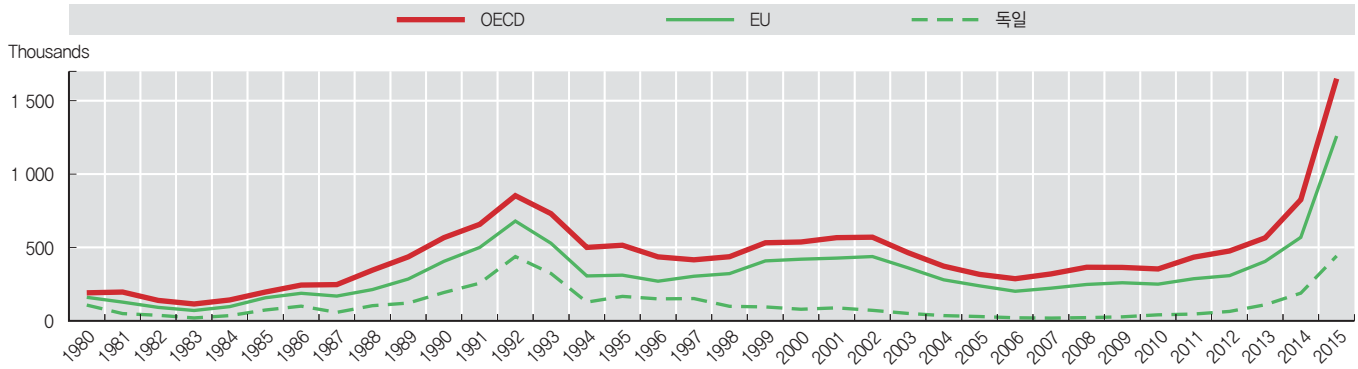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3.8: 그리스는 자료가 없다. 자료는 2000년 또는 자료가 나와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부터 2014년, 또는 자료가 나와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료이다. OECD 평균은 제시된 국가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일본과 한국의 자료는 외국 출생 인구가 아니라 외국인을 의미한다.

그림 3.9: 뉴질랜드는 15-34세 이민자 및 이민 자녀 카테고리에 따른 완전한 분류자료가 없다. 그리스는 전체 인구 중 외국 출생자 자료가 없다. OECD와 EU 평균은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을 의미한다.

3.7. 유럽은 전례 없는 망명 신청자수를 기록했다.

OECD, EU와 독일의 1980년대 이후 신규 망명신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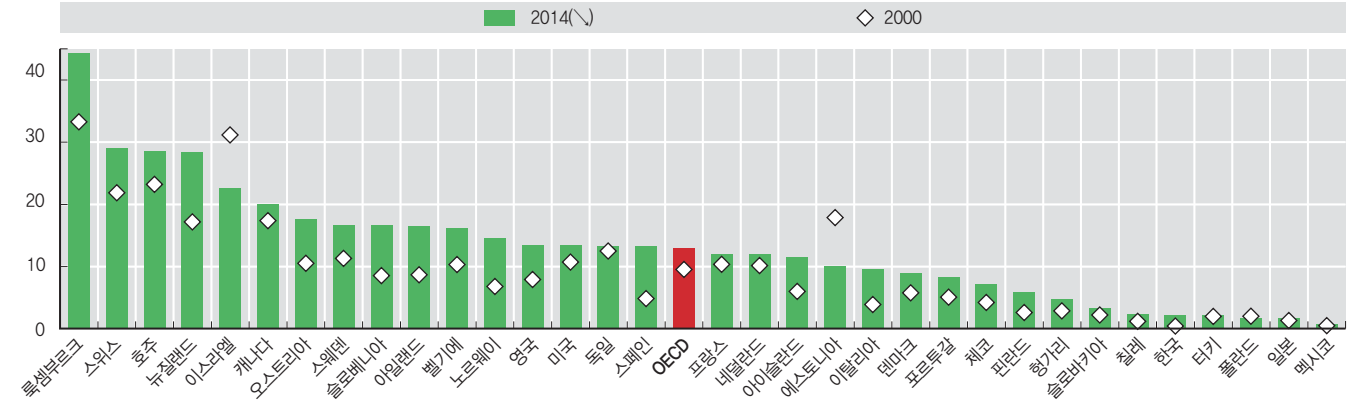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70

3.8. OECD 평균적으로 인구의 13%가 외국 출생자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 출생자 비율(%), 2000년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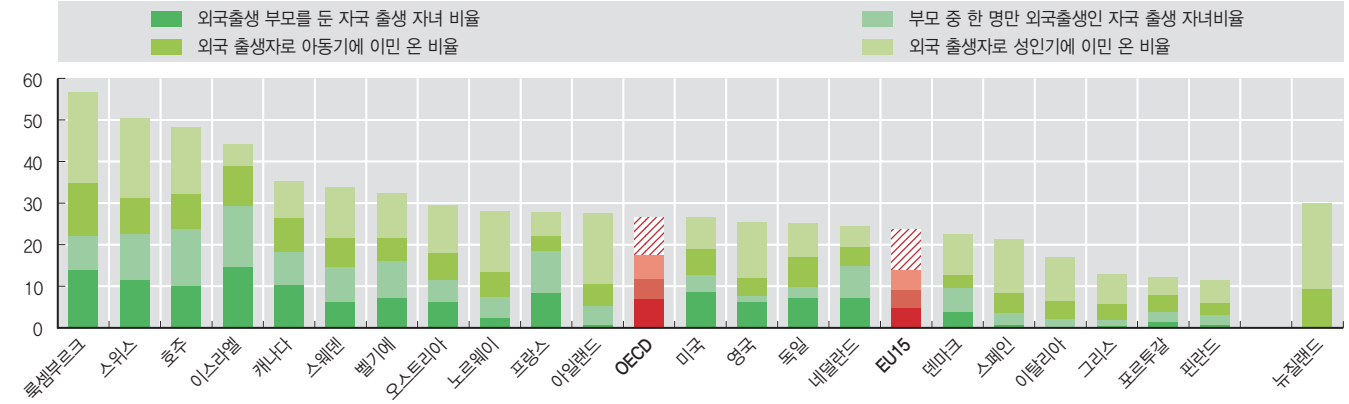


출처: OECD(2016),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and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81

3.9.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이민자 출신이다.

15-34세 이민자 및 이민 자녀 범주, 15-34세 인구 중 비율



출처: OECD(2015),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OECD Publishing, Paris and the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197

청년의 거주 형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중요하다.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그 이유가 동거이건 결혼이건 출산이건 간에 성인기로 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청년의 거주형태는 그들의 복지와 빈곤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좀더 의존할 수 있고 주택, 식료품 및 여타 일상생활의 비용을 전혀 또는 거의 감당하지 않을 수 있어 빈곤율이 낮을 수 있다.

OECD 국가별로 청소년의 거주 형태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15-29세 청년의 75% 이상이 부모와 동거한다(그림 3.10, 패널 A). 다른 국가들의 경우, 특히 캐나다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청년이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11%부터 핀란드의 41%까지 분포한다.

경기 침체는 OECD 전역에서 청년의 거주 형태에 전반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평균적인 변화의 이면에 더 큰 변화가 감춰져 있다**(그림 3.10, 패널 B).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이 12.5 % 포인트 상승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위기에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증가 폭이 작았지만 이들 국가는 위기 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이 높은 곳들이었다. OECD 전반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이 0.7% 포인트 상승했으며 파트너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은 1%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들이 부모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 전역에서 평균 결혼 연령은 크게 높아졌다(그림 3.11). 1990년대 초반, 평균 초혼연령은 OECD 국가에서 여자 24.9세, 남자 27.4세였다. 2014년, 이 연령은 여자 28-31세, 남자 31-34세로 높아졌다. 초혼연령 상승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 북유럽 국가는 평균연령이 매우 높다. 반면 터키와 이스라엘의 경우,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25세 미만, 남자는 28세 미만이다. 국가별 차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다양한 과도기적 여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의 경우 동거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중요한 형태가 되었으며 파트너십의 기준으로서 결혼을 미루거나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혼연령은 높아지고 결혼율은 감소하며 이혼율은 안정되었다. 2014년, 대략적인 결혼율(crude marriage rates)은 천명당 결혼 4 – 5.5건 사이로 OECD 평균은 4.6이었다(그림 3.12). 그러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과 슬로베니아는 매우 낮아 천명당 3.5건 미만을 기록한 반면, 이스라엘과 한국, 터키, 미국은 천명당 6건 이상으로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반면, 1990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결혼율이 천명당 5-7건이었다. 스웨덴과 터키만이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결혼율이 상승했다. 대략적인 이혼율(Crude divorce rates)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2014년, 칠레는 천명당 0.1건으로 낮고, 덴마크와 미국은 천명당 3건 이상이다. 1990년과 2014년 사이에는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다. OECD 21개국에서는 상승했으나, 14개국에서는 하락했다. 하락은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져 1992년 천명당 4.8건에서 2014년 3.2건을 기록했다.

정의와 측정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단독"은 청년 혼자 거주하는 경우이며, "한부모"는 청년이 최소 한 명의 피부양아동과 동거하며 파트너는 없는 경우, "파트너와 동거"는 청년이 배우자나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 (동일 가구 내에 아동이 있을 수 있음), "다른 청년/성인과 동거"는 청년이 최소 한 명의 다른 청년 또는 성인(30세 이상)과 동거하는 경우이며 동일 가구 내에 아동이 있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는 청년이 최소 한 명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초혼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정의된다. 이 측정지표는 남녀별로 나눔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평균값을 따로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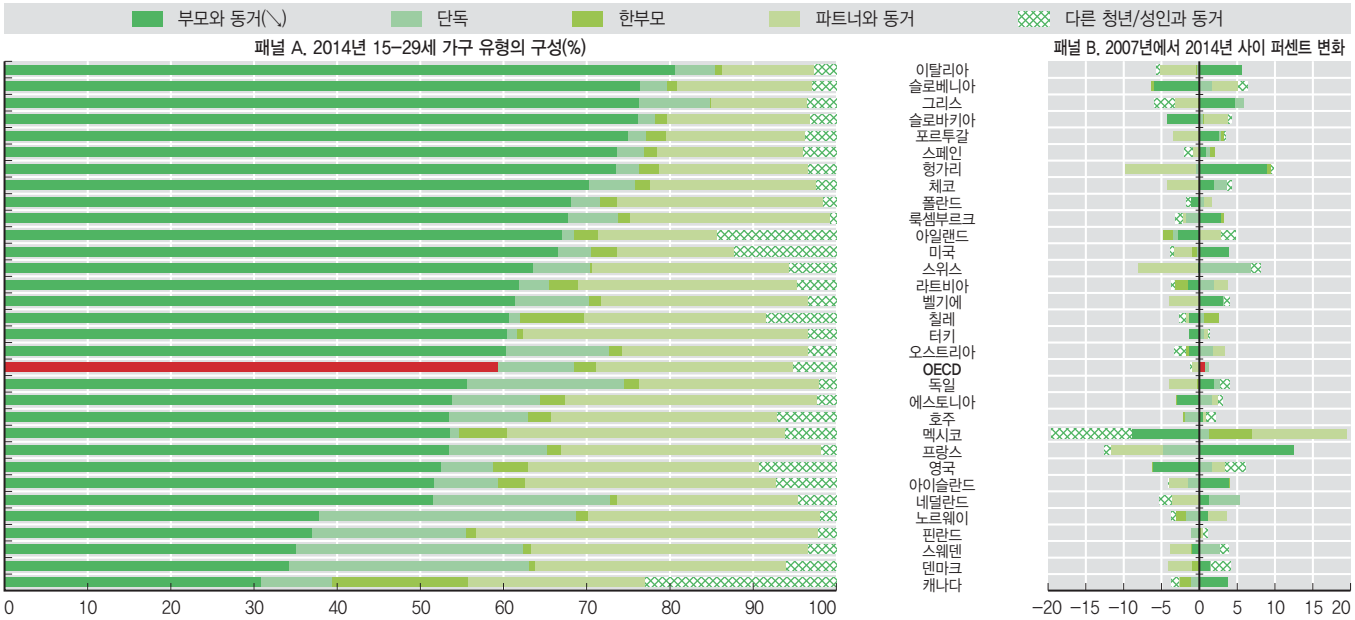
대략적인 결혼율(Crude marriage rate)은 천명당 연간 동성결혼(legal civil union) 또는 결혼 건수로 정의된다. 대략적인 이혼율(Crude divorce rate (CDR))은 천명당 연간 해제된 동성결혼 또는 결혼 건수로 정의된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3.10: 2014년 자료는 스위스는 2013년 자료, 터키는 2012년, 캐나다는 2011년 자료이다. 2007년 자료는 칠레는 2006년 자료, 스위스와 멕시코는 2008년 자료이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는 자료가 없다.

그림 3.11: 호주와 이스라엘, 뉴질랜드와 미국은 초혼 중위 연령. 뉴질랜드는 동성결혼이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 자료는 모든 결혼을 의미한다.

3.10. 대부분의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패턴이 침체 이후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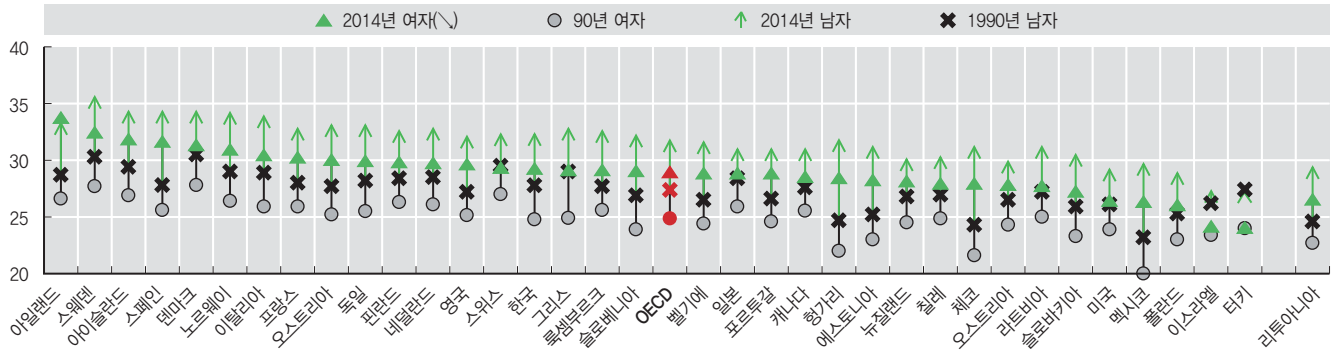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EU-SILC, HILDA(Australia), SLID(Canada), CASEN(Chile), HLFS(New Zealand) and CPS(United Stat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03

3.11. 1990년 이후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평균 4.6년 상승했다.

평균 초혼 연령, 남녀별, 1990년과 2014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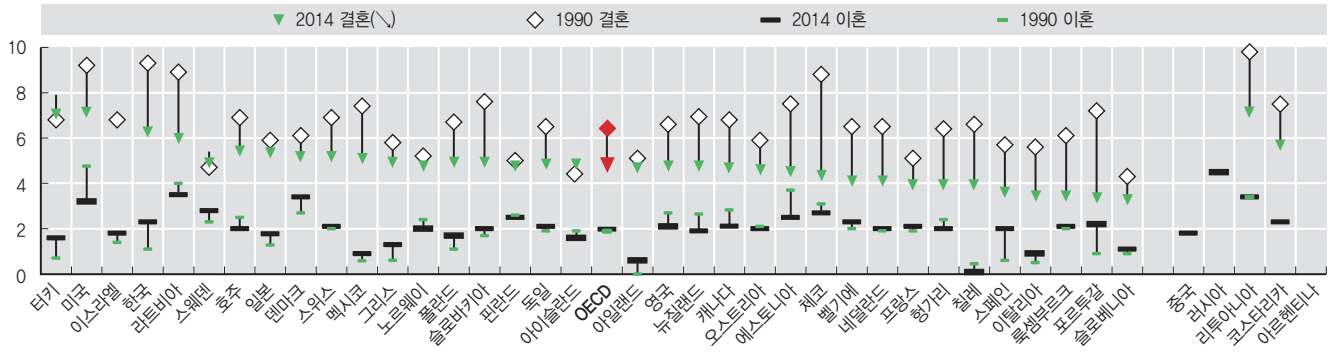


출처: OECD Family Database(Indicator SF3.1) based 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10

3.12. 199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결혼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안정되었다.

결혼율 및 이혼율, 천명당, 1990년과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Indicator SF3.1) based 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28

연령 부양비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과거 OECD 국가를 특징지었고 미래에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OECD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15년, OECD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20-64세 인구 백 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28명이 존재했으며, 1970년 18명에서 상승했다(그림 3.13). 국가간 차이는 크다. 2015년 멕시코와 터키의 15% 미만부터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의 35% 이상, 그리고 일본의 45% 이상까지 분포한다. 2060년이 되면 이 평균 부양비는 OECD 지역에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57%), 한국은 네 배가 된다. 2060년까지 노년부양비는 한국과 일본의 80%에 육박하며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는 45% 미만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보건, 장기요양,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청년부양비는 1970년에서 2015년 사이 감소했다. 2015년,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20-64세 인구 백 명 당 20세 미만 인구가 38명으로 1970년의 69% 에서 하락했다(그림 3.14). 2015년, 청년부양비는 독일의 29% 부터 이스라엘, 멕시코의 65% 이상까지 분포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 수치는 하락을 멈추게 되며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를 제외하고는 2060년 평균 40%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청년부양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교육 및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감소세는 노인에 대한 지출 증가세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신흥국의 경우 노년부양비는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보다 낮은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공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청년부양비는 더 높다.

그림 3.15는 15-29세 - 노동시장 진입 연령 - 청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1970년이 23% 에서 2015년 19% 로 감소했으며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 국가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평균 부양비는 2060년까지 전체인구의 16% 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칠레와 멕시코, 한국, 터키 등 향후 수십 년 간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 가장 큰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정의와 측정

연령 부양비(Age-dependency ratio)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 노인이건 청년이건 - 개인의 수를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개인의 수에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청년부양비는 20-64세 인구 대비 20세 미만 인구 수이다. 그 외에 전체 인구 대비 15-29세 청년 비율도 제시되어 있다.

2015년 이전 추정치와 2015년 이후 예측치는 UN 세계 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5년 개정판에서 가져왔다. 여기에 사용된 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중위 출산율(medium fertility variant)" 인구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각 인구 구성요소의 수천 건의 예측 궤적의 중위 값에 해당한다.

이 예측 값에 2015년 유럽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난민 위기는 독일, 터키, 일부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의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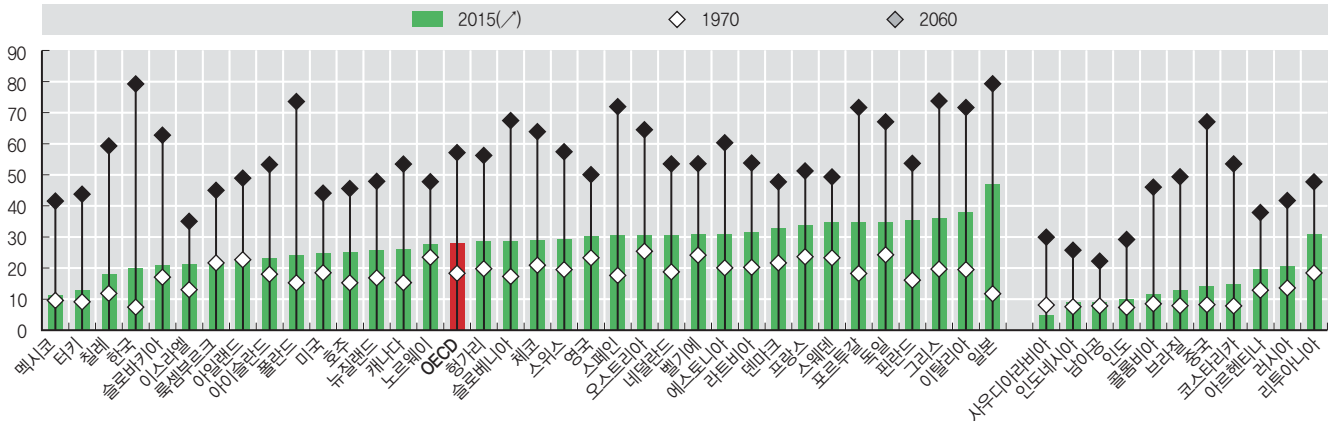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5-en*.

United Nations(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5 Revision,Washington DC, *http://esa.un.org/unpd/wpp*.

3.13. 노년부양비는 OECD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향후 45년간 두 배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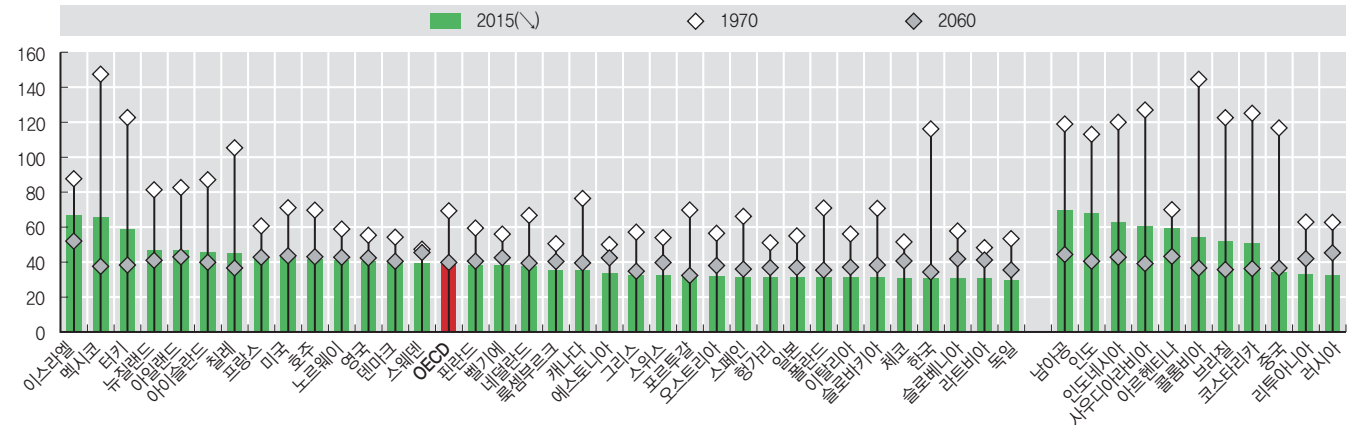
생산연령(20-64) 인구 백 명 당 연금수급연령(65세 이상) 수, 1970년, 2015년, 2060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31

3.14. 청년부양비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향후 45년간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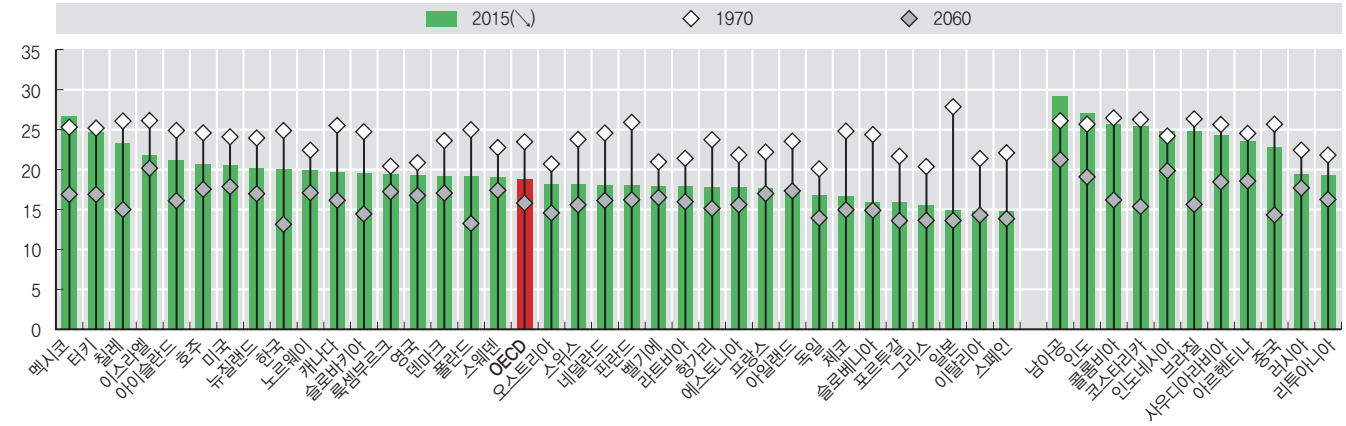
생산연령(20-64) 인구 백 명 당 청소년(20세 미만) 수, 1970년, 2015년, 2060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40

3.15.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 중 청년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청년(15-29세)의 수(%), 1970년과 2015년, 2060년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15 Revision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55

4. 자활 지표

고용

실업

기술

교육비 지출

노동시장 진입

고용

고용은 자립의 주요 요소이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는 생산연령 성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상태이다**(그림 4.1.A).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열명 중 여덟 명 이상이 고용상태인 반면 그리스와 터키는 두 명 중 한 명 꼴이다.

금융위기 발생 후 8년이 흐르면서 OECD 전역의 고용률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고용률은 2015년 위기 전 수준에 도달했으며 전체 국가의 절반 정도는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다(그림 4.1). 그러나 위기 자체가 그랬듯이 회복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침체의 타격이 가장 컸던 국가 중 일부는 이미 위기 전 고용률 수준에 도달했거나 돌파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2010년 이후 인상적으로 꾸준한 고용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역시 2007년 고용률 수준으로 회복했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대략 전체 하락폭의 절반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그리스의 고용률은 2년 전부터 겨우 회복되기 시작했다.

위기 발생 시점에 비교적 고용률이 낮았던 많은 국가에서 지난 수년간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헝가리의 고용률은 10%포인트, 터키는 7%포인트, 칠레와 체코는 6%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은 상당부분 여성 고용률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청년고용률도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를 따랐다. 다만 청년들의 고용 손실은 전체 생산연령 인구 대비 위기 중 더욱 두드러진 바 있다. 그 결과 OECD 차원의 고용상태인 15-29세 청년의 수는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8% 감소했다(제1장, 그림 1.1 참고).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많은 이들은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아일랜드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그림 4.2). 청년의 경우 이 비율이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15-29세 여성의 25% 가량이 이에 해당하며 호주도 비슷하다. 남자의 경우는 15% 정도로 여자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율이다.

OECD 평균적으로 이민자들은 자국 출생자와 비슷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생산연령의 외국 출생인구의 고용률은 66%였고 자국 출생한 동일 연령집단은 67%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값의 이면에는 국가별 차이가 숨어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벨기에 등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에서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자국 출생자는 고용될 확률이 외국 출생자보다 6-15%포인트 높다(그림 4.3). 이는 주로 여성 고용률 차이에 의한 것이다(OECD, 2015). 반면 칠레와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와 헝가리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이민자 고용률보다 실질적으로 높다. 이들 국가와 미국으로 이주하는 주된 사유가 구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 이민자들 역시 자국 출생 남자보다 고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15-29세의 청년 이민자들을 보면 고용률 격차가 반전된다. 이들은 자국 출생 또래들에 비해 고용되는 경우가 1% 더 많다. 청년 이민자들은 자국 출생 또래들보다 재학 중일 확률이 낮으므로 노동시장에 좀더 어린 나이에 진입하게 되며, 자국 출생 또래 대비 근로할 확률도 높지만 니트 상태로 있을 확률도 높다(제1장의 그림 1.16 참고).

정의와 측정

주당 최소 한 시간씩 급여, 수익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경우라면 질병, 휴가, 산업 분쟁으로 임시 휴업 중이라 해도 고용상태인 것으로 본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조사 자료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조사 기준 주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다. 고용의 기초 지표는 고용 상태인 15-64세 인구의 비율이다. 이러한 고용률은 성별과 이민 상태에 따라 제시된다. 이민자는 시민권 상태나 해당 국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거주국 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자로 정의된다.

비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시간제로 근무하는 이들을 의미한다(주당 30시간 미만 근무).

국가별 정의는 대체로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따르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www.oecd.org/employment/database를 참고한다.

참고문헌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6-en*.

OECD and EU(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024-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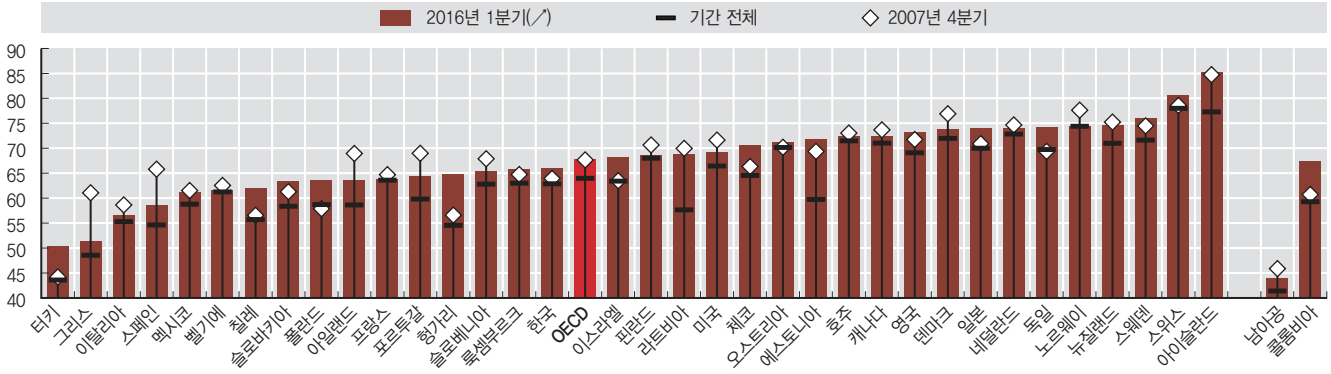
그림 4.1: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은 2016년 1분기, 아닌 경우 2015년 4분기, 스위스는 2007년 2분기, 남아공은 2008년 1분기.

그림 4.2: 2015년, 호주와 독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는 25-64세와 16-24세, 칠레는 2013년. 한국, 멕시코, 터키는 자료없음.

그림 4.3: 일본과 한국은 자료없음. 호주, 독일, 멕시코, 뉴질랜드는 청년에 대한 자료 없음. OECD 평균에 이들 6개국은 제외. 칠레는 2013년 자료, 이스라엘은 2015년 자료. 이스라엘의 청년 자료는 15-24세 자료임.

4.1.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회복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고용률,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 2007년 4분기 – 2016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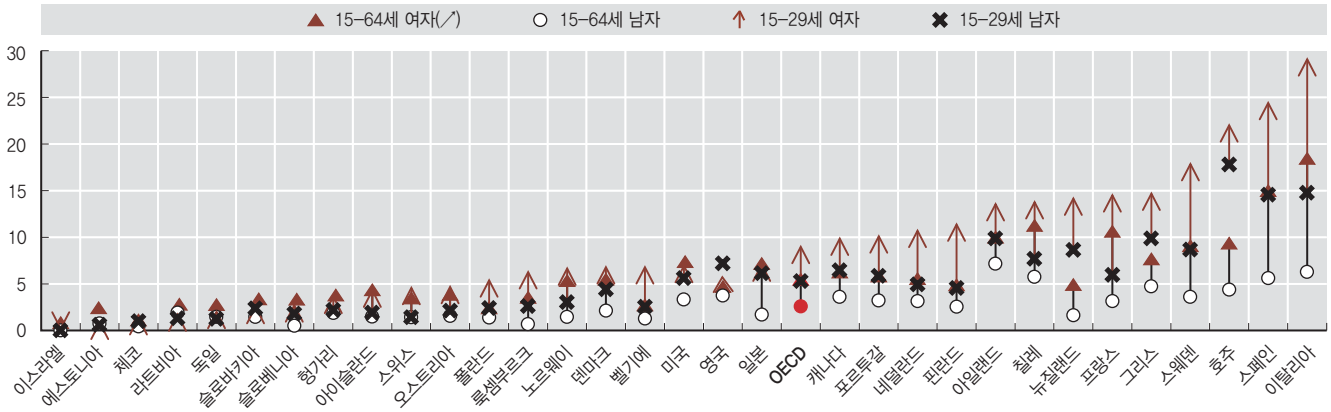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0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61

4.2. 일부 국가에서는 비 자발적 시간제 근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비 자발적 시간제 고용 발생률, 전체 고용 중 비율, 생산연령 인구 및 청년, 남녀별, 2015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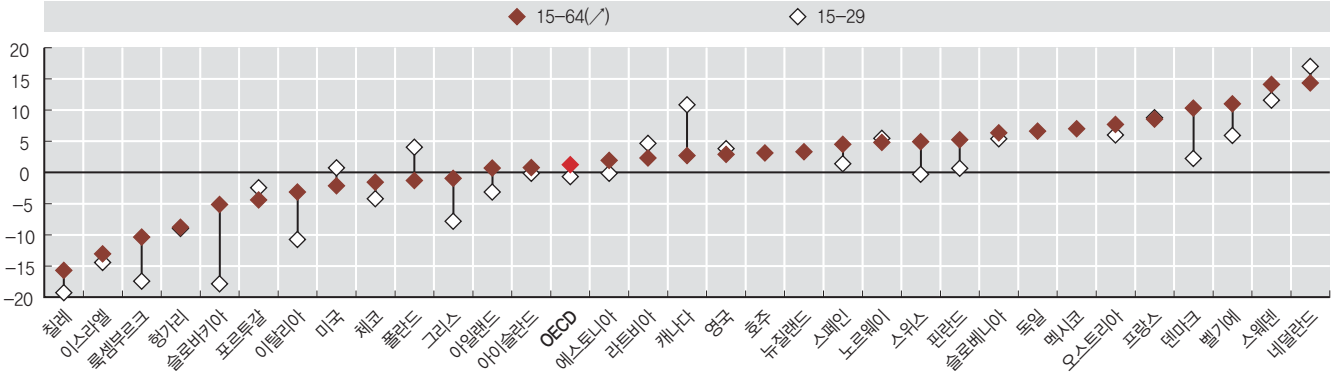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and OECD Employmen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77

4.3.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민자들의 고용확률이 비교적 낮다.

자국 출생자와 외국 출생자간 고용률 차이, 생산연령 인구 및 청년, 2014(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calculations from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84

실업

실업은 가계와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사기를 꺾고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침체는 OECD 전역에서 기록적인 실업률을 낳았다. 위기가 한창이던 때와 비교해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적극적 생산연령 인구의 평균 8% 는 2016년 초 기준 여전히 실업상태였으며, 평균 실업률은 2017년 말까지 위기 전 수준을 여전히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6) (그림 4.4). 국가별로 양상은 다양하다. 아이슬란드와 일본은 3% 로 낮은 반면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5% 근방에 몰려 있다. 한편 실업률은 위기에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남유럽 국가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그리스 (24%), 스페인 (20%),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12%)이다.

일부 국가는 위기 중 실업률이 정점에 달한 이후 인상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실업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헝가리도 5% 하락하면서 크게 떨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청년(15-24세) 실업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25세 이상) 실업률의 두 배 정도이다(그림 4.5). 이탈리아와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은 거의 4배이다. 청년들은 대 침체 기간 중의 대규모 일자리 손실에 더 많은 타격을 입었다 (제1장). 이유는 이들이 계약 종료가 쉬운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시장 진입 당시가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업무경험 부족 역시 청년들이 고 실업률 시대에 특히 취약한 요인이다. 그러나 15-24세 인구 중 많은 수가 여전히 학업 중이므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청년 실업률 인플레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제1장 박스 1.1). 즉,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50% 라고 해서 15-24세 청년의 50% 가 실업상태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청년 - 이 연령집단에 속하는 전체 그리스 청년 중 28% - 중 절반이 실업상태라는 의미이다. 이는 전체 15-24세 인구의 15% 정도이며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다.

실업은 대부분의 구직자에게 과도기적인 현상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지속되는데 특히 핵심생산연령 및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그러하다. OECD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55세 이상의 전체 실업자 중 약 40% 는 2014년 현재 1년 이상 실업상태였던 반면 15-24세 청년의 경우 20% 만이 1년 이상 실업상태였다(그림 4.6). 장기 실업은 특히 전반적인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리스 (15-24세 청년의 56%, 55세 이상 실업자의 85%)와 이탈리아 (청년의 56%, 55세 이상의 65%)가 그 예이다.

정의와 측정

실업률은 재직 중이거나 적극적 구직 상태인 생산연령 인구 대비 실직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이들의 비율 (15세 이상)이다. 자료는 각 회원국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조사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국제노동기구 (ILO)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 기준 주간 중 최소 한 시간도 근로하지 않았으나 현재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며 조사 이전 4주간 구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신체적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구직의 희망이 없어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용률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제시된다.

장기실업은 여기에서는 1년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로 정의된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www.oecd.org/employment/database를 참고한다.

참고문헌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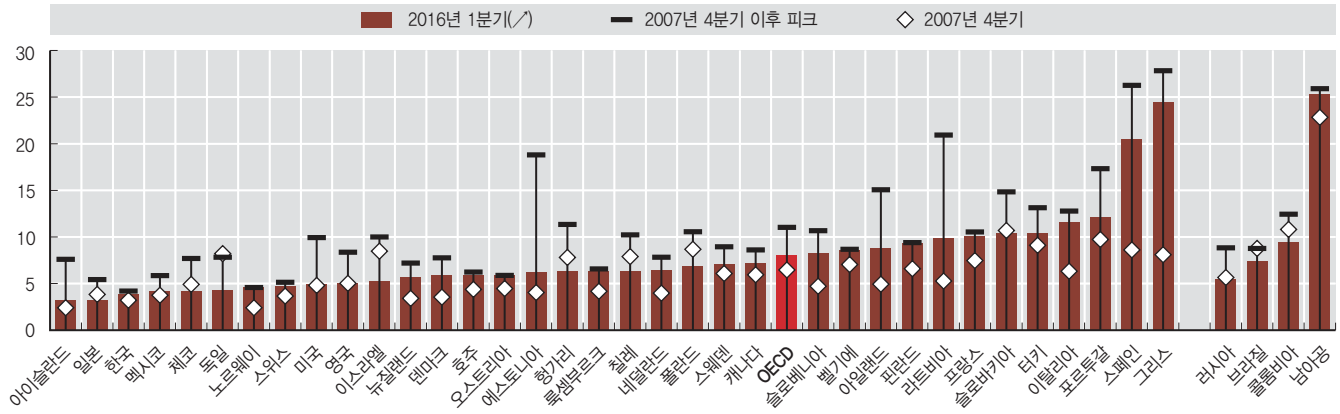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4: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은 2016년 1분기, 그 외는 2015년 4분기, 스위스는 2007년 2분기, 남아공은 2008년 1분기.

그림 4.5: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5년 4분기.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자료는 표본 크기 작음. 칠레와 라트비아, 스위스는 자료 없음.

4.4. 실업률은 하락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속도가 느리다.

실업률, 노동력 중 비율(15세 이상), 2007년 4분기 피크 및 2016년 1분기(또는 2015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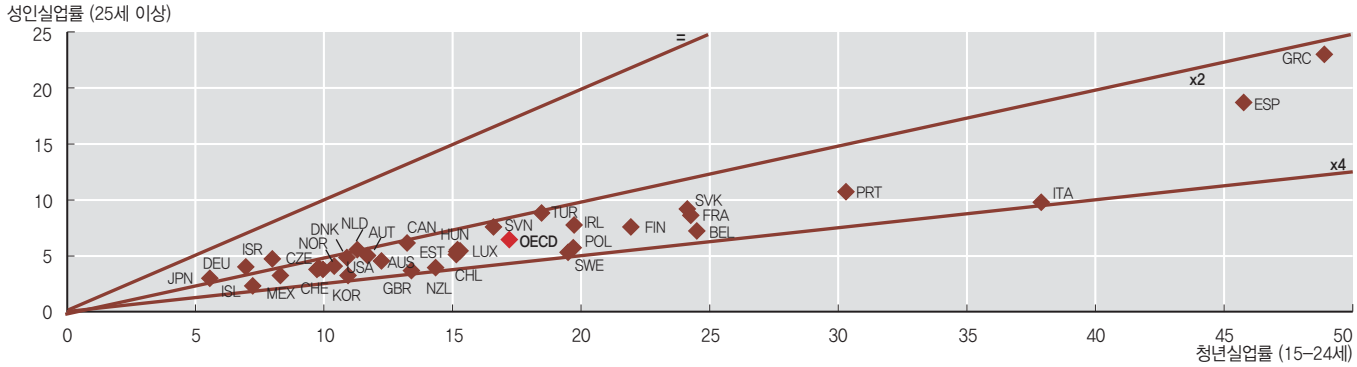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0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293

4.5.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이 성인실업률의 두 배에 달한다.

청년(15-24세) 및 성인(25세 이상) 실업률, 2016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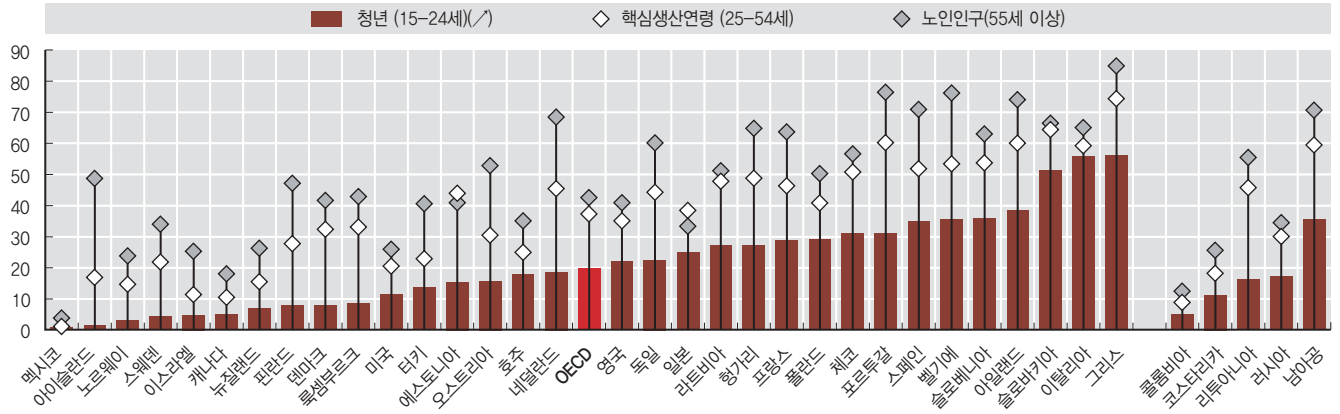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0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02

4.6. 장기실업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증가한다.

연령집단 별 전체 실업 중 장기실업(12개월 이상) 비율, 2015년



출처: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11

기술

기술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수십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일반 교육 수준이 상승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기술이 중요해졌다.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직장에 안착하기 특히 어려우며 뒤쳐질 수 있다. 기술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1장은 문해력과 수리력이 낮은 이들과 높은 이들의 니트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 수많은 고용 기회를 잡는데 있어 과거보다 중요성이 커졌다. 기술의 수준은 좀더 광범위하게는 학력과 관련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이들의 경우 문해력 수준이 낮을 확률이 두 배이다(OECD, 2015). 하지만 기술수준이 전적으로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최소한의 숙련도(proficiency level)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교육 제도의 질이 중요하다. 기술수준은 학력이 비슷한 개인간에도 차이가 클 수 있다(OECD, 2013).

OECD에서 평균적으로 30-54세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은 문해력 또는 수리력 수준이 낮거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 기술수준은 OECD 국가간에 차이가 크다(그림 4.7과 4.8). 일본,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 기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전체 인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30-54세 인구 중 문해력 수준이 낮은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미국은 동일 인구 집단 중 수리력이 낮은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국가와 영국의 경우 청년층 중 문해력과 수리력이 낮은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과 핀란드, 한국은 가장 낮다.

최근 수십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청년들의 학력이 윗 세대에 비해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기술 수준은 개선되었다. 그 결과 저숙련 30-54세 인구의 비율은 16-29세보다 높다. 세대간 격차는 특히 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두드러진다(그림 4.9). 일본은 OECD 중에서 문해력과 수리력 차이가 청년층과 그 윗 세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이는 30-54세 인구 중 많은 비율이 이미 높은 성과를 낸 세대였기 때문인 반면, 한국의 경우 세대간 차이가 상당히 컸다. 한편, 청년 세대와 윗 세대간 문해력과 수리력 성과가 오히려 악화된 국가들도 몇 곳 있었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30-54세 인구 대비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이 낮은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미국의 경우 문해력이 낮은 이들의 비율이 높았고 성과 수준은 청년집단과 윗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정의와 측정

OECD 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는 현재의 풍부한 기술 환경에서 16-65세 인구의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수준을 평가한다. 후자는 "정보처리능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툴, 네트워크를 사용해 정보를 습득, 평가하고 타인과 통신하며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PIAAC는 40여개국에서 실시되며 문화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해력과 수리력은 다섯 개 수준으로, 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은 세 개 수준으로 나뉜다. 여기 제시된 그래프는 능력 수준이 낮은 청년비율을 보여준다. 문해력의 경우, 비교적 단문을 읽고 질문이나 지시문에 주어진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이들로 정의된다. 수리력 수준이 낮은 이들은 수 세기, 분류, 기초적인 산수 등 한 단계 또는 간단한 수학 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단순한 비율을 이해하며 간단한 혹은 공통적인 그래프나 공간표현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다. 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이 낮은 이들은 정보접근이나 문제해결에 여러 단계의 검색이 전혀 또는 거의 요구되지 않는 이메일, 웹브라우저 등 널리 사용가능하고 친숙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참고문헌

OECD(2015),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17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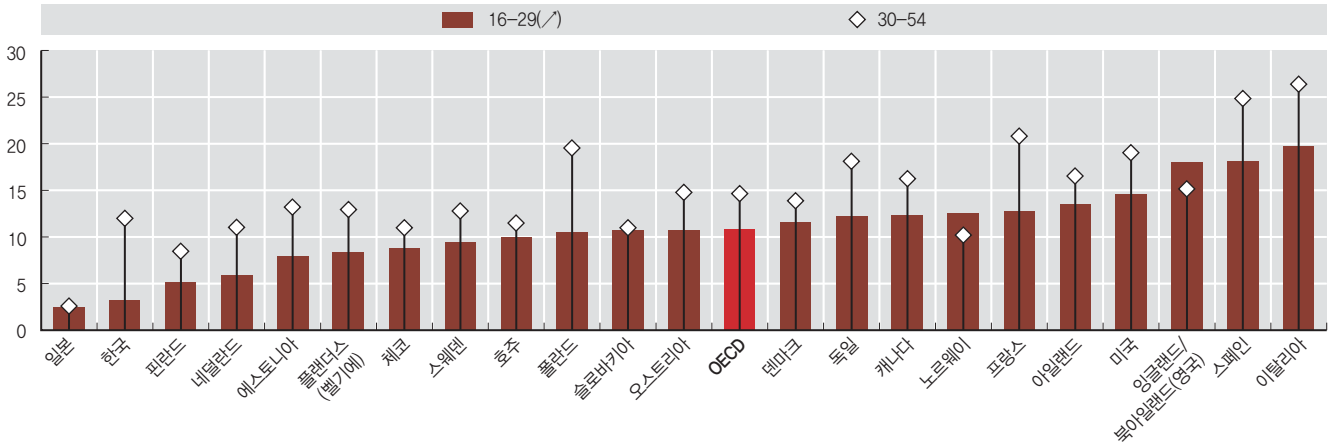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il i b rary.org/education/oecd-skills-outlook-2013_9789264204256-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3: 결과는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 2와 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 수준 1에 도달하지 못한 16-29세 집단과 30-54세 집단의 비율을 보여준다.

4.7. OECD 지역에서 청년층의 상당 비율은 문해력 수준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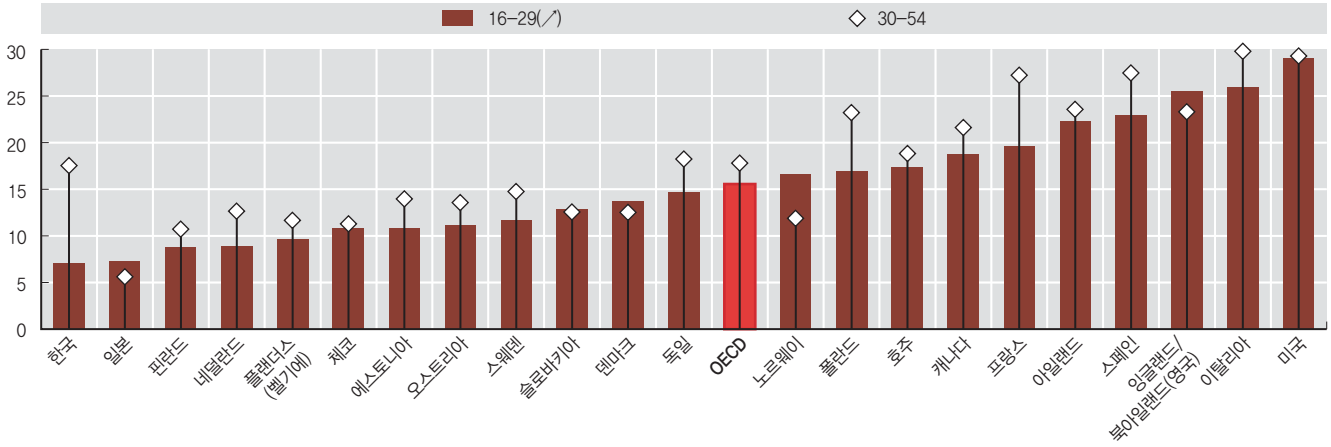
문해력 수준이 낮은 개인의 비율, 연령집단 별, 2012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21

4.8. 수리력 수준이 낮은 청년 비율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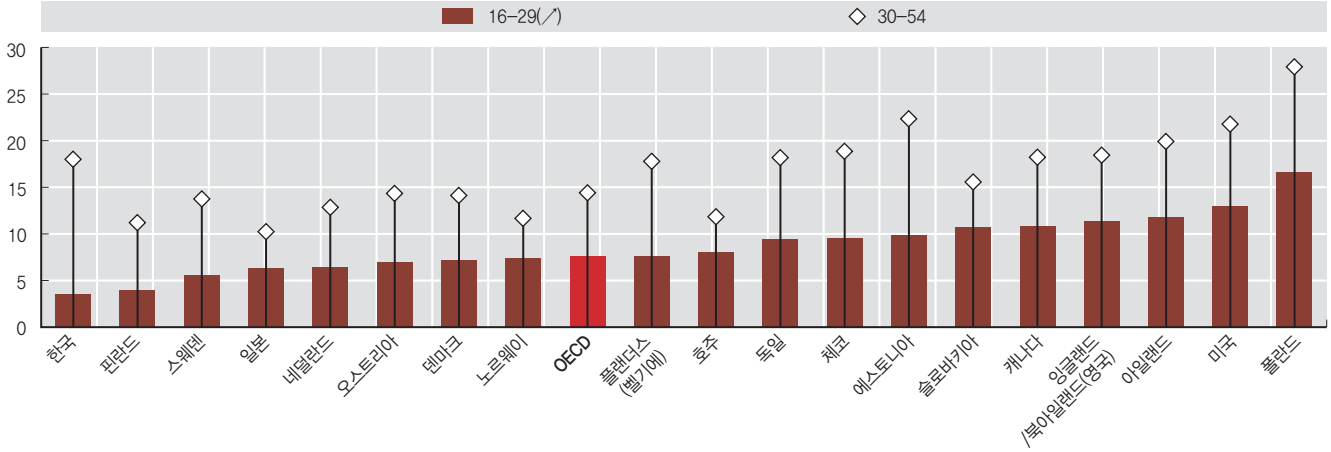
수리력 수준이 낮은 개인의 비율, 연령집단 별, 2012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30

4.9. 기술에 있어서는 청년이 윗 세대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이 낮은 개인의 비율, 연령집단 별, 2012



출처: OECD(2015),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178-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410

평균적으로 2012년 OECD 국가에서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간 학생 한 명 당 1만달러를 지출했다(그림 4.10). **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학생 한 명당 22,000달러를 약간 초과했으며 스위스와 노르웨이, 미국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지출액이 3,500달러에 불과했다. 일곱 개 동유럽 국가에서도 지출액이 비교적 낮은 편(4천 달러에서 8천 달러 사이)이었다.

자료가 나와 있는 모든 신흥국가의 경우 저 지출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400달러로 가장 낮았다.

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교육비 지출 증가 추세를 중단시켰다. GDP 중 공공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전역에서 2008-2010년 사이 모든 교육 단계에서 평균 6% 증가했으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는 3% 하락했다(그림 4.11).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국가 중 75% 에서 감소했으며 이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결과일 확률이 가장 높다. 8% 이상 감소한 곳은 호주와 에스토니아, 헝가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이었다. 호주에서는 2012년 중단된 인프라에 대한 경기부양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었다.

OECD 평균적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조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덜 이루어졌다. 조기 단계의 아동 한 명당 지출은 7,900달러였으며 "학사, 석사 또는 박사" 단계에는 15,100달러가 지출되었다(그림 4.12). 하지만 OECD 전역에서 교육 단계별 학생 한 명당 지출 수준에 차이가 크다. 상위 지출국가 대 하위 지출국가 비는 고등교육의 3부터 중등교육의 9까지 나타난다.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의 핵심이 되며 특히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평균적으로 중등 및 중등후 교육 단계에서는 일반 과정 대비 직업 과정 참여 학생 한 명당 330달러가 더 지출되고 있다. 예외는 호주와 벨기에, 칠레,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으로 일반 과정 재학생 한 명당 지출액이 직업 과정 학생보다 높다.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 있는 이중 견습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 (예: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일반 과정보다 직업 과정 학생들에 대한 지출액이 20% 에서 30%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중 직업 과정에 대한 민간 기업 지출의 과소평가는 부분적으로는 일부 국가간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다.

정의와 측정

교육 지출액 자료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총 연 지출액을 사용해 산출한다 (연구개발 활동 포함). 그림은 공공 지출액과 민간 지출액을 합한 것이며 개별 연도에 대한 구매력 지수를 바탕으로 미 달러로 보고된 것이다.

GDP 중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추이는 공공 부문에서 나온 지출액을 의미한다.

교육의 수준은 여섯 단계로 구분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취학 전(ISCED-0), 초등(ISCED-1), 중학교 (ISCED-2), 고등학교(ISCED-3), 중등 후 (ISCED-4), 단기 고등 (ISCED-5), 학사, 석사, 박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ISCED 6-7-8).

참고문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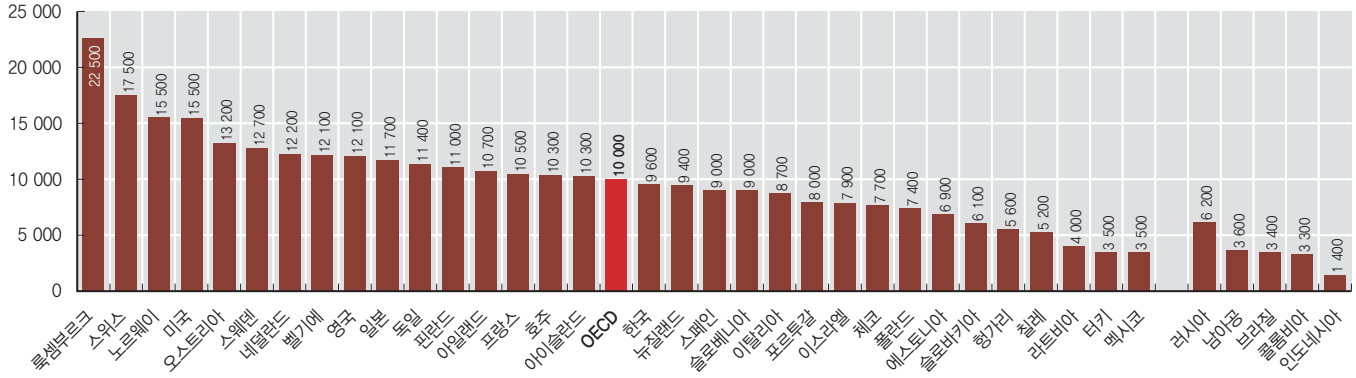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0: 칠레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는 2013년 자료. 캐나다와 덴마크, 그리스는 자료 없음.

그림 4.11: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은 자료없음.

4.10. OECD내 학생 한 명 당 교육비 지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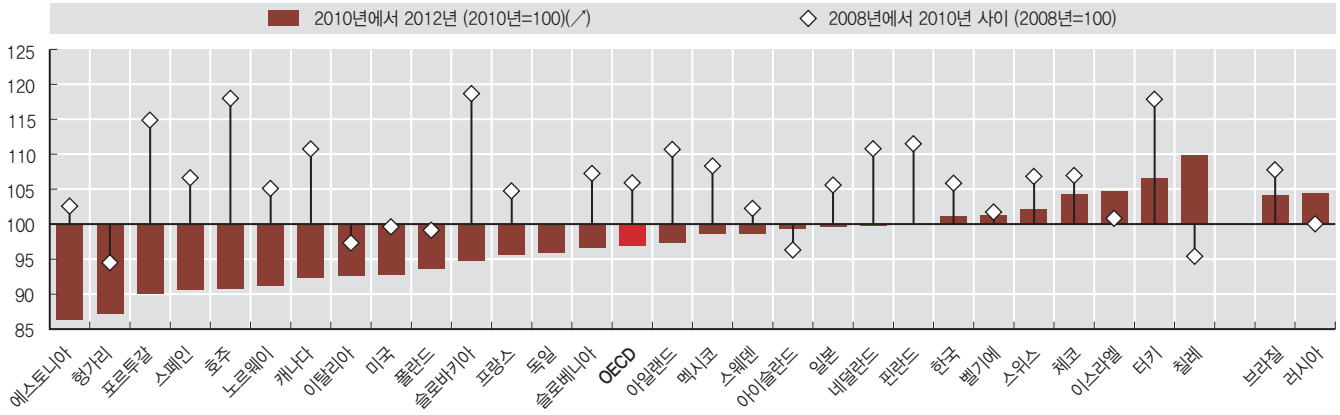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학생 한 명 당 연간 지출액, 2012년 현재 물가와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미 달러(100단위에서 반올림)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57

4.11. 2010년에서 2012년 GDP 중 공적 교육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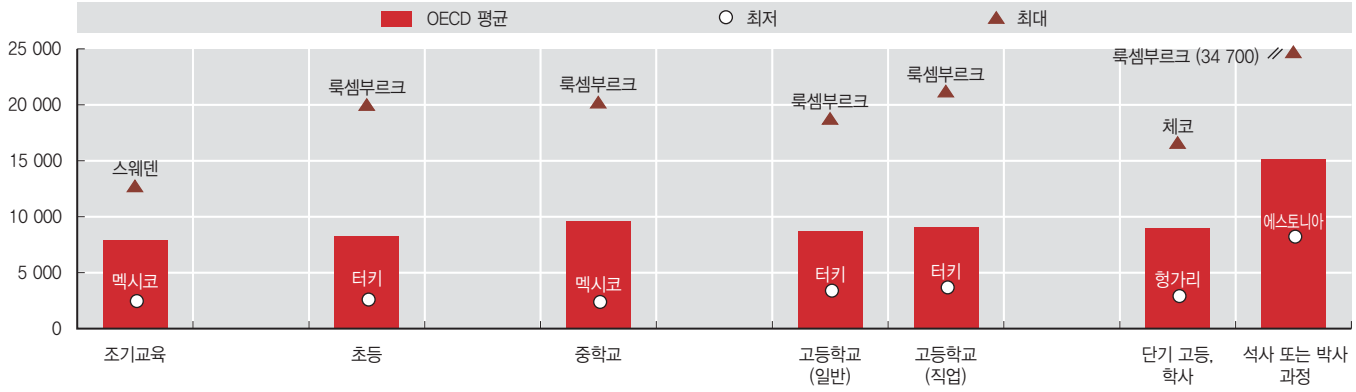
GDP 중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지출 변화 지수, 모든 교육 단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68

4.12. 학생 한 명 당 지출은 교육단계가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 단계별 학생 당 연간 지출액, 2012년 현재 물가와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미 달러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74

학교나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기나긴 과정으로 장애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사람은 한동안 학업을 중단했던 청년들보다 실업의 위험이 훨씬 크다(그림 4.13). 이들의 실업률은 학업을 중단한 모든 청년들의 두 배 이상이다(OECD 지역에서 33% 와 16% 로 나타남). 최근 학교를 벗어난 청년들은 위기의 여파로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국가의 경우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자 60% 이상이 구직 중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특히 어렵다. 나와 있는 일자리가 적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2009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이후 4년간의 고용률이 위기 이전인 2004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동일 집단에 비해 훨씬 낮았다(그림 4.14의 왼쪽 패널). 일을 시작한지 4년 후에도 - 각각 2008년과 2013년 - 위기 집단의 경우는 위기 전 집단에 비해 고용률이 크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5% 포인트, 여자는 10% 포인트 차이가 났다.

게다가 이전 경기침체 때의 상황을 보면, 일자리를 겨우 구한 사람들도 승진 및 교육 기회가 적어서 오랫동안 소득이 압박 받는 경향이 있다(예: Oreopoulous et al., 2012). 2009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은 또한 위기 전 집단에 비해 소득 성장률이 훨씬 더 빈약했다(그림 4.14의 오른쪽 패널). 여자의 경우 첫 4년간 소득이 연 3% 씩 증가했다. 남자는 노동시장 진입한 다음해에는 11% 급감하고 이후 3년간 겨우 회복되었다. 반면 위기 전 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노동시장 진입 이후 첫 수년간 소득이 연 6-7% 정도씩 상승했다.

소득은 조사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09년 노동시장 진입 집단의 경우 훨씬 더 천천히 상승했다(그림 4.15). 예를 들어,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제1장 참고), 2008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5년간 실질소득이 2% 줄어든 반면 2003년 졸업자의 경우 29% 상승했다. 소득성장의 하락 역시 위기에 크게 타격을 입은 국가들의 경우 그 폭이 특히 컸다. 스페인 (-56% 포인트), 에스토니아(-47% 포인트), 아일랜드 (-42% 포인트) 등이다.

정의와 측정

그림 4.13과 4.15에서 노동시장 진입자들은 기준연도에 공적 교육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전년도에는 재학 중이었던 15-29세 청년으로 정의된다. 그림 4.13은 모든 노동시장 진입자와 모든 비 재학 청년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그림 4.14와 4.15는(시간제 또는 전일제) 고용 상태인 청년의 비율과 2004년 (위기 전) 집단과 2009년 (위기) 집단이 노동시장 진입 후 첫 4년간 겪은 실질 월 소득 변화를 보여준다. 실질 소득은 노동시장 진입(2004년 또는 2009년) 후 첫 해 소득과 비교하여 표현했다. 에스토니아는 2008년 소득 자료가 없고 헝가리는 2005년과 2006년 자료, 아이슬란드는 2012년 자료, 멕시코는 2008년 자료, 스페인은 2013년 자료가 없다. 그래서 헝가리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아이슬란드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소득 변화를 삽입했고, 에스토니아와 멕시코는 2008년, 스페인은 2013년 (집단 추적 마지막 기간) 소득 변화를 추정했다.

참고문헌

Carcillo, S. et al.(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3503f6-en*.

Oreopoulos, P., T. von Wachter and A. Heisz(2012), "The Short- 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4, No. 1, pp. 1-29, *http://dx.doi.org/10.1257/app.4.1.1*.

Quintini, G. and S. Martin(2014), "Same Same but Different: School-to-work Transitions in Emerging and Advanced Econom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bb2t1rcwc-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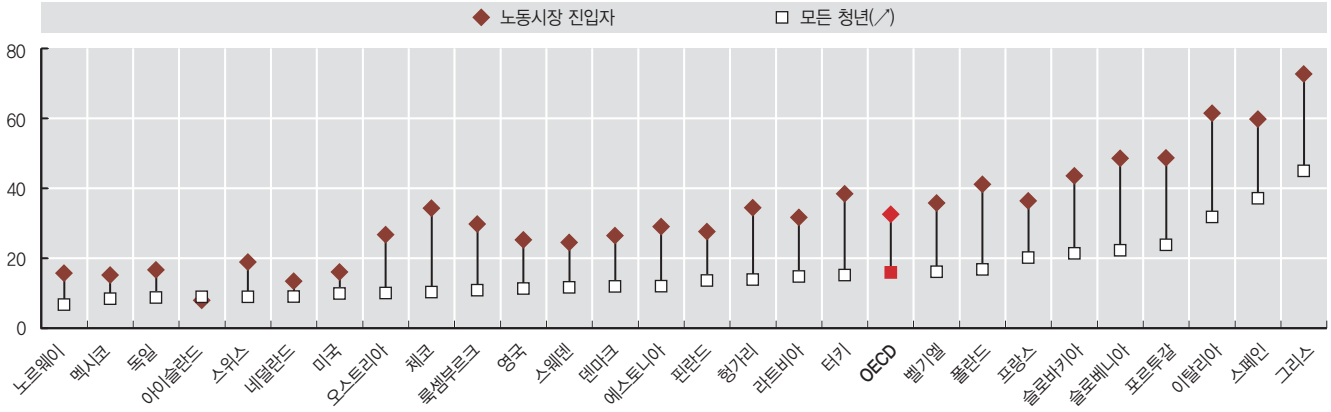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3: 독일과 터키는 2013년. 호주와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는 자료 없음.

그림 4.14와 4.15: OECD 평균은 자료가 나와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산출됨.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4.13. 노동시장 진입자들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 일자리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최근 노동시장 진입자와 재학 중이 아닌 모든 청년들의 실업률,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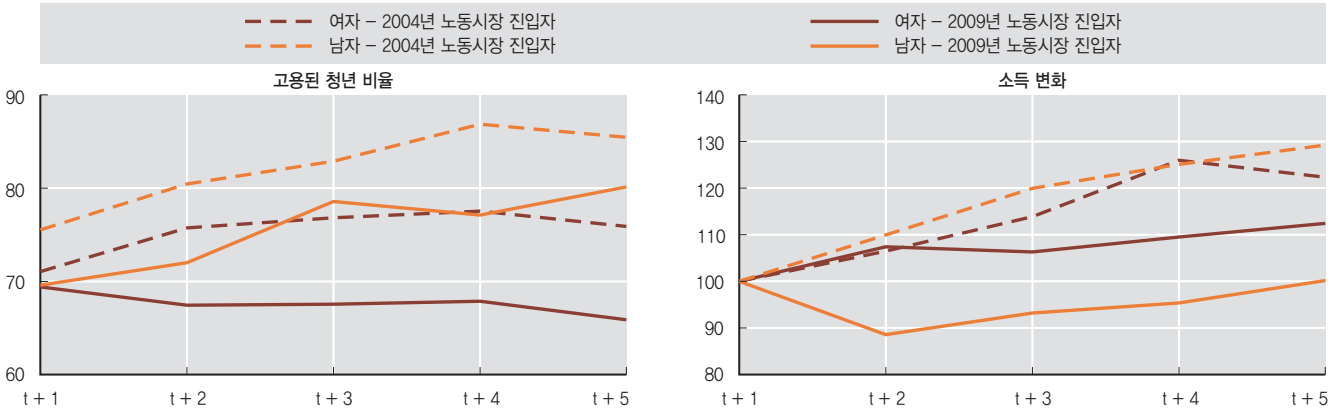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from EU-LFS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for the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Turke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81

4.14. 위기 중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고용률과 소득증가율이 낮다.

2004년과 2009년 노동시장 진입자 집단의 고용률(%)과 상대소득(초기 소득=100), OECD 평균, 남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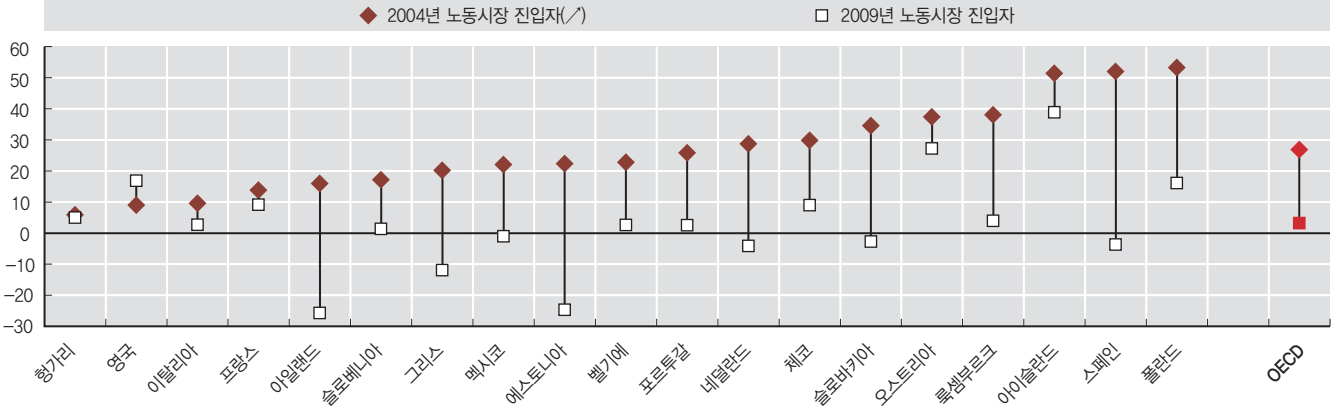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from EU-SILC and the Mexican National Occupation and Employment Survey(ENO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393

4.15. 노동시장 진입자의 소득세 하락폭은 위기에 심한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가장 컸다.

2004년과 2009년 노동시장 진입자 집단의 4년 소득 증가세, 초기 임금기준 비율, 국가별



출처: Calculations from EU-SILC and the Mexican National Occupation and Employment Survey(ENO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07

5. 형평성 지표

소득 불평등

빈곤

급여수급

사회지출

실업급여 수급자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물질적 자원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어떤 이들은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높으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어떤 이들은 소득 불평등이 사회통합에 해롭다고 여긴다.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라도 장기적 성장에 해로울 수 있으며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정책상의 관심은 불평등 수준 자체보다는 불평등의 변화 방향에 더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소득 불평등은 2014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OECD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5.1). 지니계수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의 0.25부터 거의 그 두 배에 달하는 칠레와 멕시코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와 중부유럽 국가는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성이 가장 낮은 반면, 칠레와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미국에서는 불평등성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성의 대안적 지표를 보아도 순위는 비슷하다. 인구 소득 상위 10% 와 하위 10% 의 평균 소득 격차는 2014년 OECD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9.4대 1로 나타났으며, 덴마크의 5대 1부터 칠레와 멕시코의 21대 1(4배 이상)까지 분포했다. 측정에 관련된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보자면 신흥국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았으며 브라질과 콜롬비아, 남아공이 특히 심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시장소득, 세금과 이전을 고려하기 전)의 분포는 경제 위기 중 벌어졌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시장 소득의 불평등성은 평균 1.6 증가했다**(그림 5.2의 막대 그래프). 특히 크게 증가한 곳이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이었다. 한편 시작소득 불평등성이 이스라엘과 터키에서는 감소했으며, 정도는 약하지만 칠레와 폴란드에서도 감소했다. 순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세금과 이전을 고려한 후) 분포는 현금 공공이전과 직접세의 영향으로 평균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그림 5.2의 표시된 부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포르투갈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는 증가했다.

가계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자산분포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가계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76% 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상위 10% 소득자는 전체 현금 소득의 25% 정도를 평균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으며 미국의 28% 부터 노르웨이의 20%까지 분포한다(그림 5.). 하지만 소득 불평등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해서 자산 집중도가 꼭 낮은 것은 아닌데,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가 그런 경우이다.

정의와 측정

사용된 소득분포의 주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 상태(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인 0부터 "완전한 불평등" 상태 (모든 소득이 인구 중 최고 소득층에게 집중)인 1사이에 분포한다.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가구가처분소득 - 세금과 사회적 이전을 고려한 소득 - 또는 가구 시장소득 - 세금과 이전을 고려하기 이전의 소득 - 에 기반하고 있다(좀더 상세한 설명은 제 3장 "가구 소득" 지표의 "정의 및 측정" 참고). 지니계수는 OECD 국가와 EU 국가,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의 경우 균등화 소득, 즉,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스케일로 규모가 서로 다른 가구의 욕구 차이를 반영한 소득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인당 소비가 사용되는(연한 색 막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낮은 불평등 지표를 보여주는 모든 핵심 파트너 국가들(어두운 색 막대)에 대해서는 일인당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안적 지표는 S90/S10 소득 십분위 비율로 인구 중 소득 상위 10% 와 하위 10%의 평균 소득 격차를 보여주며, 역시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자료는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 나와 있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을 출처로 한다.

자산 자료는 순 민간가계자산, 즉 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특정 시점의 전체 부채 가치를 뺀 것으로 여기에서는 2012년 전후가 기준이다. 자료는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at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을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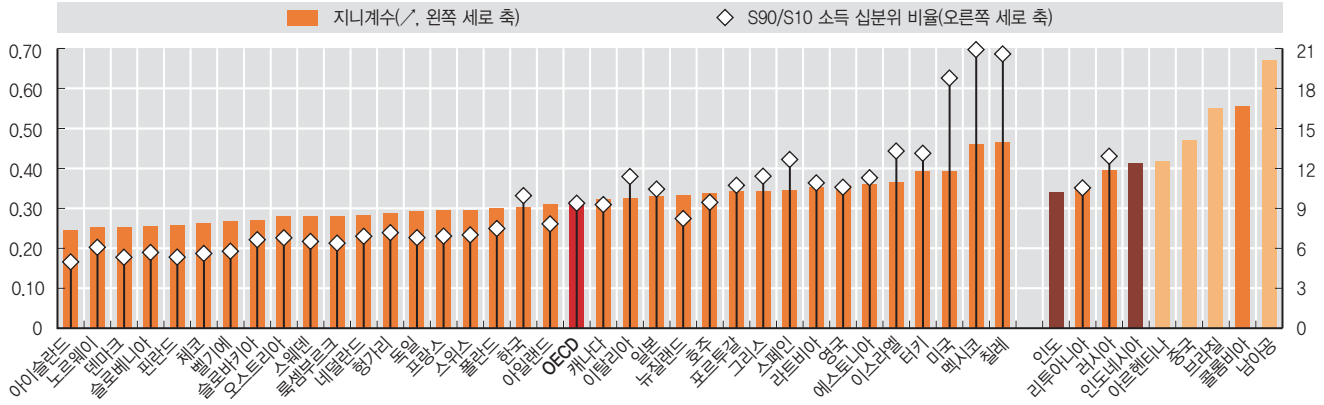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oe.cd/init2015*.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1과 5.2: 호주와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 중국은 2014년 자료. 일본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남아공은 2012년 자료, 브라질은 2011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는 2010년, 그 외 모든 국가는 2013년 자료이다. 2007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호주와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2008년 자료, 일본은 2006년 자료, 칠레는 2009년 자료이다. 스위스는 변화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5.1. 소득불평등 수준의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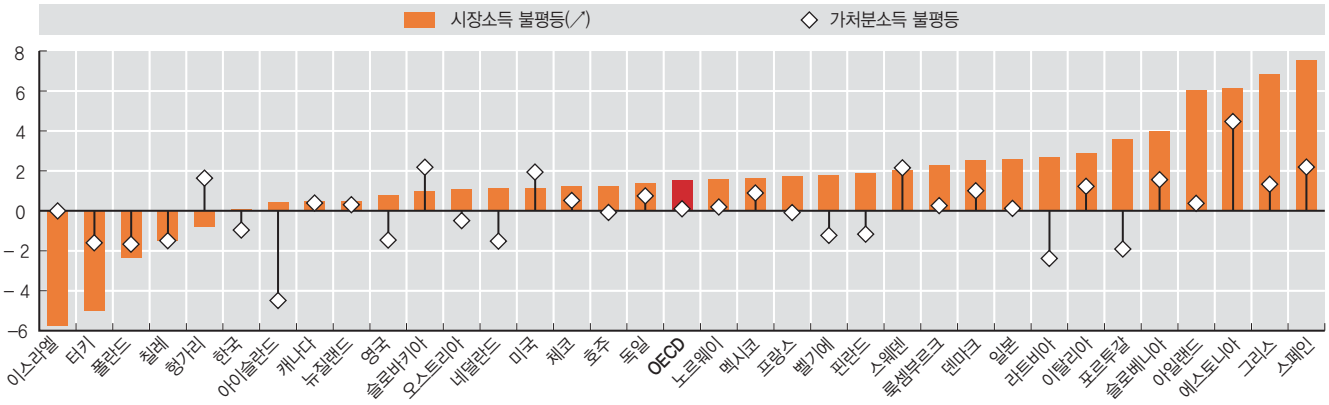
가구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및 상위 10% 와 하위 10% 간 격차,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18

5.2. 시장소득 불평등은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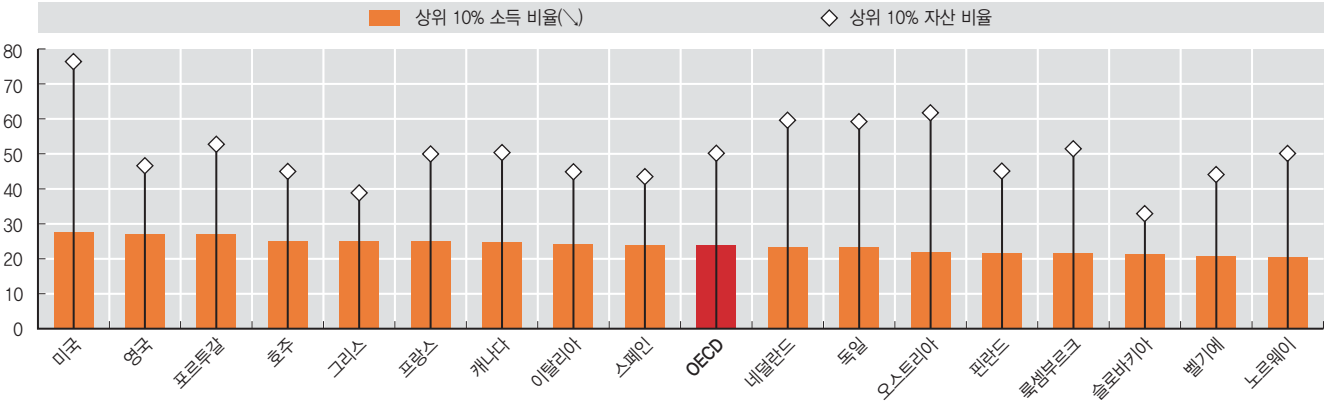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가구 시장 및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비율 변화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20

5.3. 자산은 상층부에 소득보다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가구가처분소득 상위 10%와 가구순자산 상위 10% 비율, 2012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odd) and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31

빈곤

소득빈곤율은 소득분포의 하단에 위치한 이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한 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불우한 이들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빈곤지표는 소득 불평등 지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인과 아동 등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나 기회가 제한된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더 커진다.

2014년 OECD 평균 상대적빈곤율은 11%였다(그림 5.4). 빈곤율은 이스라엘, 미국에서 18% 정도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와 덴마크는 20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했다. 지중해 연안 국가, 칠레, 일본, 한국, 미국은 비교적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위기는 상대적 소득빈곤(즉, 각국에서 연간 중위 가처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비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빈곤율은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에서만 2% 이상 증가했다(그림 5.5의 막대 그래프). 같은 기간 호주와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영국은 하락했으며 다른 OECD국가에서는 변화가 2% 미만이었다.

2005년 관찰된 중위 실질소득의 절반에 "고정"시킨 값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한 지표를 사용했을 때(즉, 2005년 빈곤선의 값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함) 소득 빈곤의 최근 증가는 "상대적" 소득빈곤보다 훨씬 컸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그림 5.5의 "심볼") 이들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하락했지만 **"기준선에 고정된" 빈곤 수준은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4% 혹은 그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빈곤가구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칠레와 한국에서만 "기준선에 고정된" 빈곤이 감소했다.

청년층이 노인층을 대신해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등극하면서 지난 수십년 간 빈곤의 연령별 양상에 점진적 변화가 발생했다(OECD, 2015). **2014년 평균 빈곤율이 14%에 육박하는 가운데 청년은 다른 집단대비 빈곤 위험이 높았다**(그림 5.6). 청년들의 빈곤율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젊은이들이 부모집에서 일찍 나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국가에서 특히 높았다(그림 1.25). 그러나 그리스도 비율이 높았고 정도는 덜하지만 위기 중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던 스페인도 마찬가지였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국가 중 3분의 2 국가에서 청년빈곤율을 밑돌았으며 절반의 국가에서는 26-65세 빈곤율보다도 낮았다. 노인빈곤율이 아주 높은 국가는 소수였는데 해당국의 연금제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데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곳이며, 호주와 스위스의 경우는 많은 연금수급자가 그간 누적한 연금을 나눠서 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했던 것이 부분적인 이유이다.

정의와 측정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빈곤 측정 역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 ("가구 소득" 또는 "소득 불평등" 지표의 "정의와 측정" 참고).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의 수이다. 개인의 균등화 가처분 가구 소득이 해당국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그 사람은 빈곤한 것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소득기준의 사용은 부유한 국가일 수록 빈곤 기준선이 높다는 의미이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빈곤 기준선이 높다는 것은 빈곤을 피한다는 것이 해당국에서 일반적인 것 또는 표준으로 간주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포착한다. 연령집단 별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현 중위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의 변화는 경기 침체기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류층보다 하류층의 소득이 덜 하락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 소득 빈곤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거 생활 수준과 연계된 좀더 "절대적"인 빈곤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빈곤의 변화는 2005년 관찰된 중위 실질 소득의 절반에 "고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빈곤을 측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그림 5.5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available at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 database.htm을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oe.cd/init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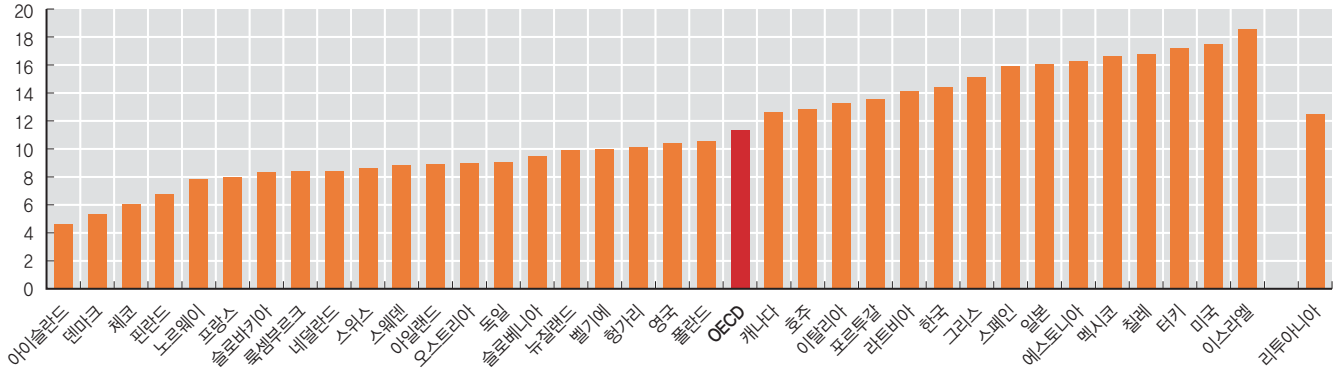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자료는 호주와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은 2014년 자료, 일본과 뉴질랜드는 2012년 자료, 그 외 모든 국가는 2013년 자료이다.

그림 5.5: 2007년 자료는 호주와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2008년 자료, 일본은 2006년, 칠레는 2009년 자료이다. 스위스는 변화 자료가 없다. OECD 평균은 빈곤에 대한 두 정의에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는 25개 OECD 국가를 바탕으로 한다. 빈곤율은 칠레와 일본, 한국은 2006년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은 2007년에 고정되어 있다.

5.4. 상대적 빈곤 수준의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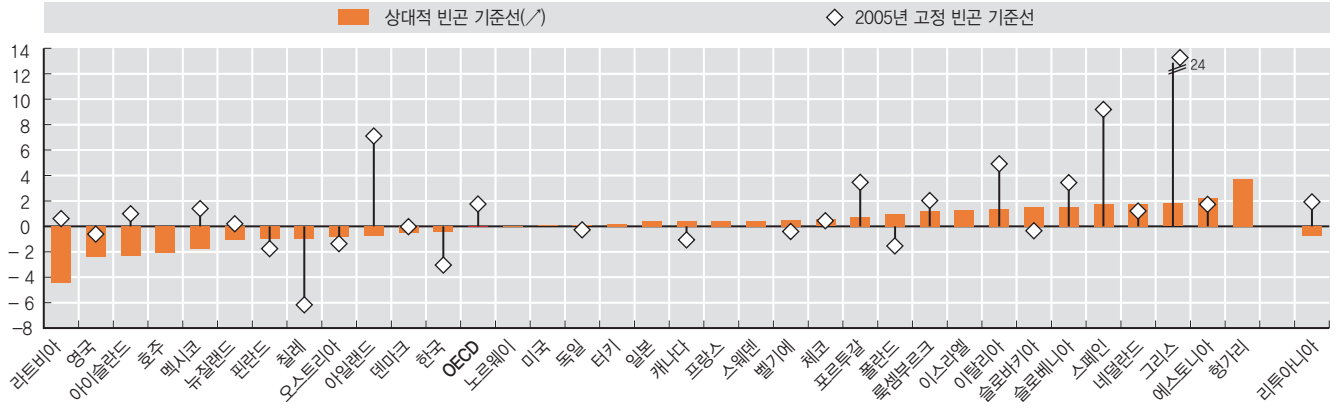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46

5.5. 기준선이 위기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면 빈곤의 변화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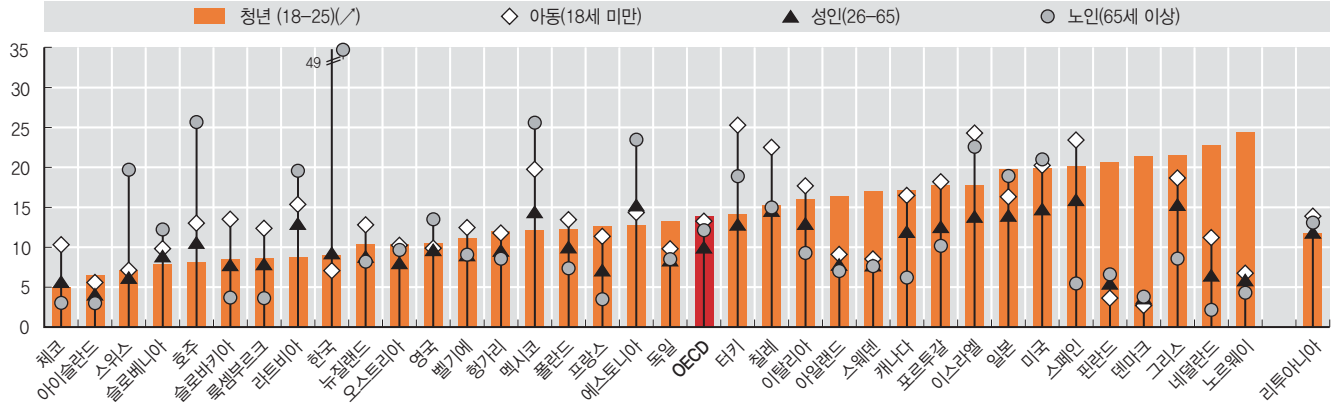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상대적 빈곤율과 "고정" 빈곤율의 비율 변화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54

5.6. 2014년, 빈곤율은 청년과 아동층이 가장 높았고 성인과 노인은 가장 낮았다.

중위 균등화 소득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비율, 연령집단 별,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idd).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64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극단적인 생계곤란을 막으려는 목적의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기준을 주요 수급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된 최저소득급여(GMI)는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수용 가능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는 이렇게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져서 장기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급여를 소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는 더욱 그러하다.

GMI 급여는 자립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실직한 경우, 많은 청년들은 실업보험금 납부기간이 부족해 실업보험금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 개인 및 부부는 성인들과 똑같이 급여 수급자격을 가지나 일부 국가에서는 GMI 프로그램을 청년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었고(프랑스, 룩셈부르크) 일부 국가는 독신 청년에게는 더 낮은 급여를 제공한다(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장기 실업자들의 소득은 실직한지 얼마 안된 이들보다 훨씬 낮다(그림 5.7). GMI 급여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 실업자들의 소득안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일자리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GMI 급여의 관대성에 더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급여가 일반적인 빈곤기준선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있다(그림 5.8). 빈곤의 방지 또는 완화가 GMI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다. 각국의 급여 관대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기준선 대비 급여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급여수준과 빈곤기준선 간의 격차는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크다(그림 5.8). 몇몇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GMI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GMI 부부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 수당 등 주거 관련 급여가 중요한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소득을 빈곤선 근처 또는 그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러나 이 경우 가족소득은 주거지의 유형, 임대료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모든 국가에서 공적 이전 외의 출처로부터 나온 소득은 심각한 빈곤 위험을 피하는데 필요하다.

정의와 측정

각국의 사회보호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순 최저 현금 소득급여(주거지원 포함) 수준을 중위 가구 소득의 50% 또는 60%인 빈곤 기준선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수준은 다른 소득원이 없고 실업 보험 등 주요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없으며 생산연령의 가장을 둔 가정의 현금급여 수급액 전체를 차지한다. 이는 소득세와

정의와 측정(계속)

사회 기여금을 제한 금액이다. 중위 가처분소득 (주거비 감안 전)은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을 출처로 한다. 2014년 경의 1년간에 대해서는 2014년 물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의 제곱근" 균등화 규모를 이용해 가구규모에 맞춰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순 최저현금급여는 2014년 물가로 환산했다.

순 대체율(NRR, net replacement rate)은 실직 중에도 유지되는 순소득 중 극히 일부를 측정한다. 이는 실직 중 순소득을 근로 중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여기 제시된 순 대체율은 자녀가 없고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40세 독신자에 해당한다. 실직 초기 단계는 일정한 대기 기간 이후 급여를 받는 첫 달을 의미하며 장기 실업은 급여수급을 시작한 후 60번째 달을 의미한다.

가족소득은 OECD 세금-급여 모형(방법론은 Benefits and Wages 2007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링크는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다. 자산조사적 급여로 산출된 금액은 상한 추정 값으로 보아야 한다. 주거급여가 급여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평균 근로자소득의 20% 수준의 임대비용 또는 "허용 가능한" 임대비용에 상한선을 두어 둘 중 낮은 쪽으로 산출된다. 이는 실제 주거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멕시코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Immervoll, H., S.P. Jenkins and S. Königs (2015), "Are Recipients of Social Assistance 'Benefit Dependent'? Concepts, Measurement and Results for Selecte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cmgpc6mn-en*.

OECD(2015),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Paris, May 2015, *www.oecd.org/social/Focus-on-Minimum-Wages-after-the-crisis-2015.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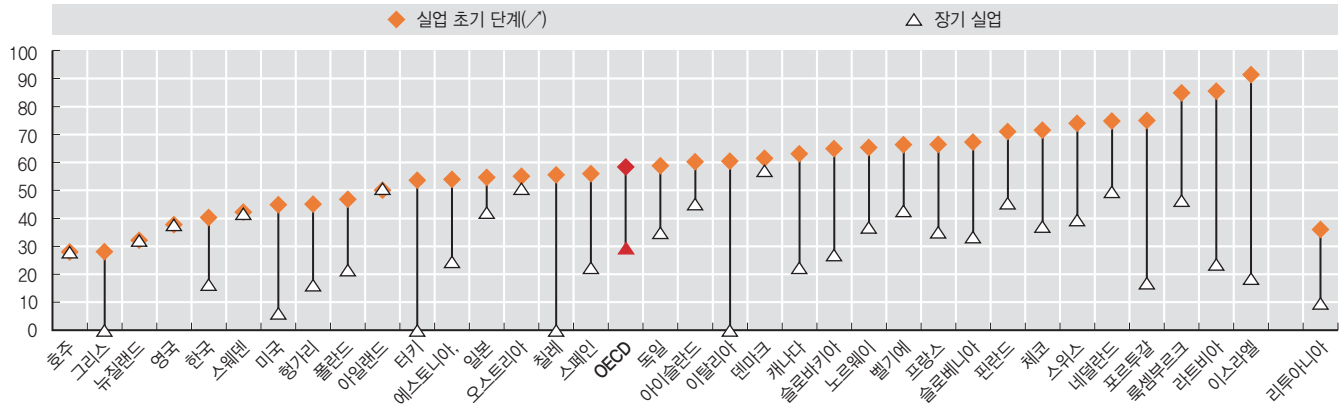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7: 멕시코 자료는 없다.

그림 5.8: 멕시코 자료는 없다. 표준 지표는 40세 성인, 청년은 20세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거급여를 포함한 현금 최저 소득급여 수준의 오름차순으로 나열했다.

5.7.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실업자의 경우 급여소득이 크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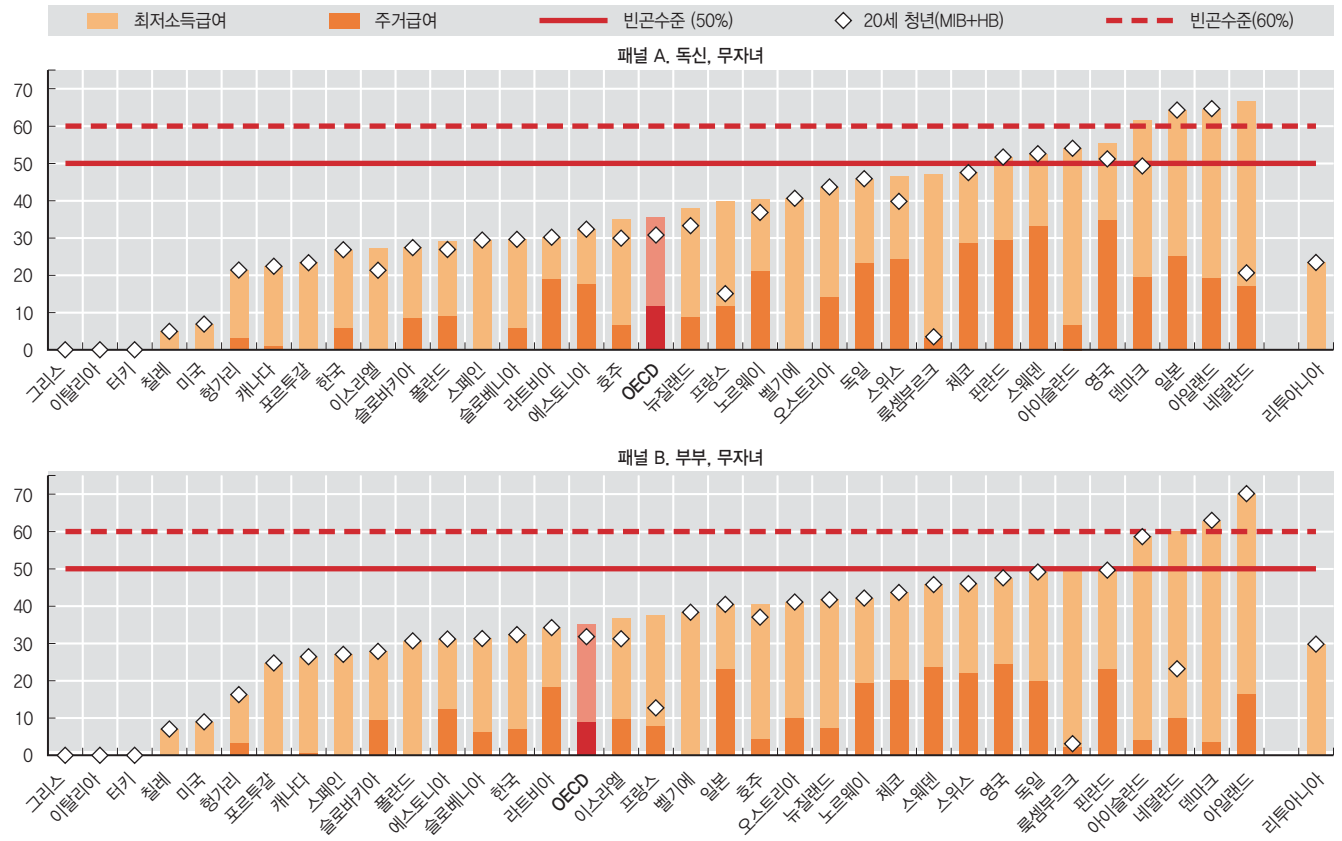
실직 중 순소득을 근로 중 순소득으로 나눈 값(순 대체율), 40세 독신, 2014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79

5.8. 최저소득급여만으로는 특히 청년층의 소득 빈곤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금 최저소득급여(MIB)가 제공하는 순소득수준, 주거급여(HB)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중위 가구 소득 중 비율, 2014년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88

2016년, 35개 OECD 국가에서 공공사회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21% 로 나타났다(그림 5.9).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프랑스가 GDP의 32%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GDP의 30% 를 넘는 핀란드였다.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스는 GDP의 25% 이상을 공공사회지출에 배정하고 있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라트비아, 터키, 한국, 칠레, 멕시코 등 비 유럽 국가로 GDP의 15% 미만을 사회적 지원에 지출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신흥국의 사회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인도의 2% 부터 브라질의 17% 까지 분포한다.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지출이 정점을 찍은 2009-10년 이후 상당히 감소했다. GDP 대비 지출은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에서는 3% 감소했고, 라트비아와 아일랜드는 각각 4% 와 6% 감소했다.

2007년 위기 전 수준과 현 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해보면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일본 (2013)의 경우 2016년 5% 이상 더 높다.

평균적으로 OECD에서 연금 및 보건서비스는 전체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은 가장 큰 지출 분야이다 (그림 5.10). 영어 사용국가 및 유럽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은 공공사회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 소수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생산연령인구의 소득 지원에 사용된다.

세금 및 민간사회급여 (private social benefits)의 효과 (그림 5.10)를 감안하면 국가간에 GDP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수렴한다. 총 순 사회지출은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GDP의 21-28% 수준이다. 미국은 29% 로 더 높은데, 미국의 경우 민간사회지출액과 세금 인센티브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 프랑스가 GDP의 31% 로 여전히 가장 높다.

조기 투자는 청년의 미래 발전과 역량에 중요하다. 가족급여와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그림 5.11). 영유아기의 사회지출은 주로 현금급여/세금혜택과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출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압도적이다. 평균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12-17세에 몰려 있다. 대부분은 이 시기에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므로 교육지출이 전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정의와 측정

사회지출은 일반정부가 재정 흐름을 통제할 경우 공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강제적 기여로 재정이 충당되는 질병수당(sickness benefits)은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질병수당은 "사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림 5.9에 나타난 지출

정의와 측정(계속)

자료는 해당 급여에 부과된 직간접세를 차감하지 않은 것이며 사회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지출을 더하기 전에 기록된다. 세제뿐 아니라 민간사회지출의 영향을 고려한 자료(전체 순 사회지출)는 그림 5.10에 나와 있다.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공공사회지출 합계는 1980-2013/14년의 상세한 사회지출 자료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거의 시리즈에 맞춰 공공사회지출 합계는 2014, 2015년에 대해 산출되었고 2016년은 추정치가 나와 있다.

OECD 국가의 연령-지출 프로파일은 생애 첫 28년 및 출생 전 9개월에 대해 연령별 공공사회 및 교육 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은 급여 규정, 연령별 인구 자료, 연령별로 보고된 수급자료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들 자료에 따라 할당된다. 개별 연령에 대한 상세한 아동 연령-지출 프로파일은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2d2d4pbf0-en*.

OECD(2015), *Integrating Social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3775-en*.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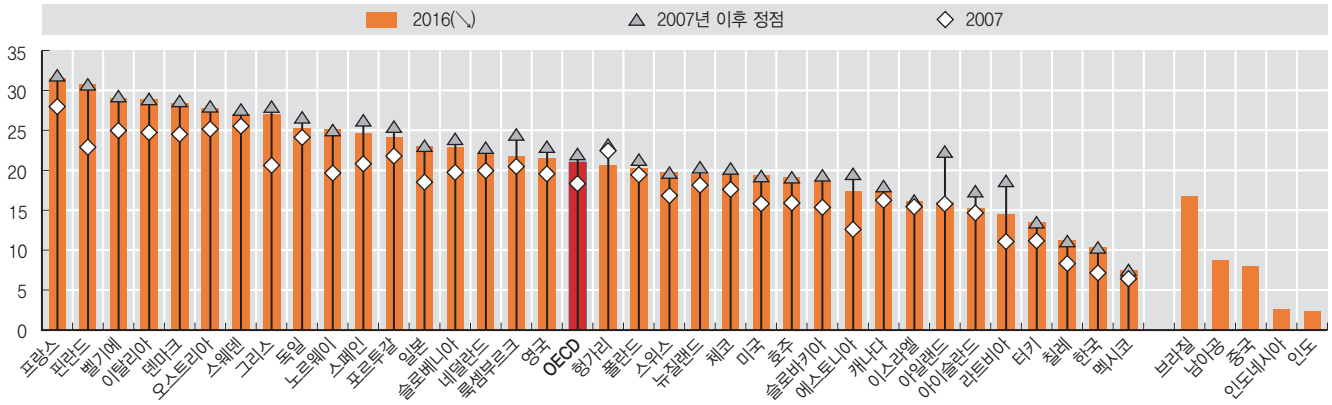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9: 멕시코는 2012년 자료, 일본은 2013년, 터키는 2014년,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는 2015년 자료이다.

그림 5.10: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배열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지출은 현금과 서비스 지출로 구분할 수 없다.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소득 지원은 다음 SOCX 카테고리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무능력 급여, 가족 현금급여, 실업 및 기탈 사회정책 분야. 라트비아는 총 순사회지출 자료가 없다.

5.9. 공공사회지출은 OECD 지역에서 평균 GDP의 22%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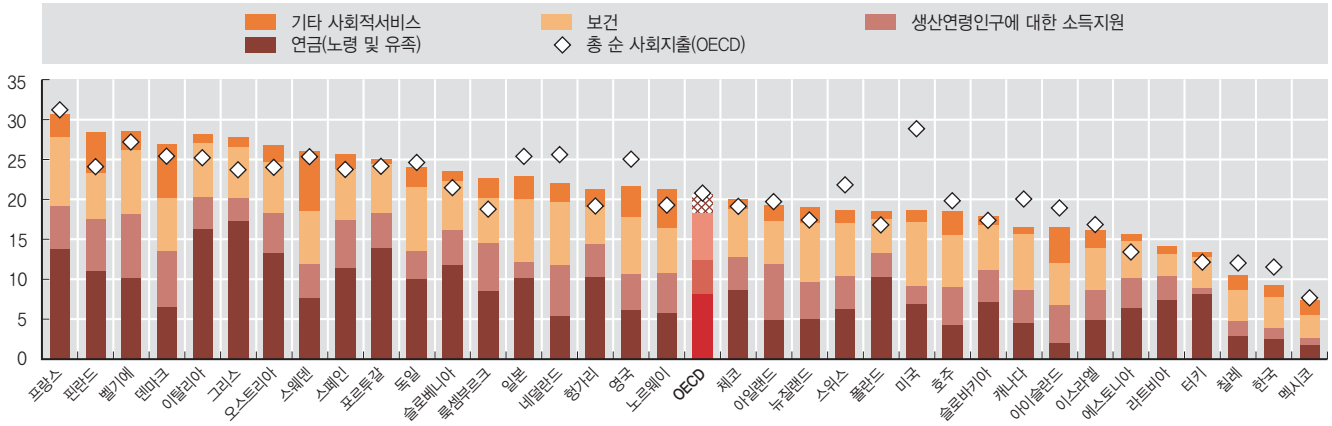
GDP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2007년, 2007년 이후 정점, 2016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490

5.10. 대부분의 지출은 연금과 보건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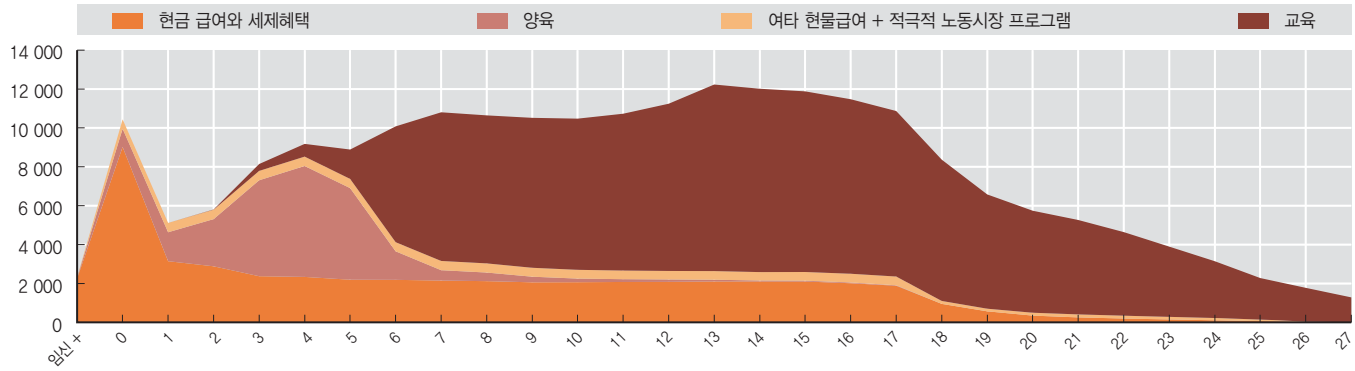
정책 분야별 공공사회지출 및 총 순 사회지출, 2013/14, GDP 중 비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05

5.11. 가족급여 및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아동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OECD 국가의 개입별 평균 사회지출(교육 포함), 2010년대 초 아동 및 연령별 PPP (USD), OECD 평균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15

실업급여 수급자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현금급여는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주된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원의 두 개 층(layer)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차적 실업급여(일반적으로 실업 보험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 대한 이차적 급여(실업 지원 또는 사회적 지원 등 최저소득 급여)가 그것이다.

2012년, 주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생산연령 수급자의 비율은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에서 4%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5.12). 반면 터키와 영국, 일본, 헝가리, 한국에서는 1% 미만이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했다. 평균적으로 OECD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2.3% 가 일차적 실직급여를 수급했다. 멕시코는 국가차원의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없다.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급여제도의 설계 상태를 반영한다. 실업보험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으면 실직자에 대한 적용률도 낮아진다. 칠레가 그러한 경우인데 실업보험이 개인 저축 제도로 만들어져 있고 가입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실업보험 가입이 자발적이어서 실업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감소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급여 수급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핀란드, 미국,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림 5.12). 모두 경제 위기 중 실업률이 치솟은 국가들이다.

2차적 실업급여의 수급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도 증가했다 (그림 5.13, 패널 B). 치솟은 장기실업과 보험급여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의 실직 증가는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미국 (SNAP, 영양지원 프로그램), 스페인에서 크게 나타났다. 수급률은 체코 (최저소득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인해)와 독일 (노동시장 상황 개선으로 인해)에서 다소 떨어졌다.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약 4%가 이차적 실직 급여를 수급했다. 수급률은 아일랜드, 미국, 리투아니아, 핀란드에서 가장 높았고 (그림 5.13, 패널 A), 칠레와 벨기에, 한국, 일본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안전망의 구성은 국가마다 다르다. 멕시코 (Prospera)와 미국(SNAP 및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임시 가족지원 제도))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압도적이다.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는 실업지원이 중요하다. 호주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많은 수의 한 부모들에게 선별적 소득지원을 제공한다. 칠레와 터키, 이탈리아에는 국가차원의 최저소득급여가 없다.

청년들은 실업급여를 쉽게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체 청년 실업자 중 30% 정도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반면 30세 이상 전체 구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40%가 넘는다(제1장과 그림 1.23 참고). 다시 말해 청년의 경우 그 외 성인들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빈곤 퇴치에 효과가 덜하다.

정의와 측정

일차적 실업급여는 실업 초기단계에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급여들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실업보험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대신 자산조사에 근거한 실업 지원을 일차적 급여로 운영한다. 일차적 급여의 수급조건은 대개 이전 고용 경력이나 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원 급여로 이전 고용 경력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차적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관련 요건의 적용을 받지만 이행과 집행 내용은 나라별로, 프로그램 별로 다르다.

실업보험이 일차적 급여인 곳에서는 실업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이 이차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한 부모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선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통계자료는 40개 EU 및 OECD 회원국의 모든 주요 소득대체 급여를 포괄하는 OECD SOCR(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을 기반으로 한다. SOCR은 각국에서 만든 자료에 따라 평균 급여액, 흐름, 건수를 포함하며 4년의 기간(2007-12)을 대상으로 한다.

도표는 생산연령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을 보여준다. 가족 단위로 제공되는 급여(예: 사회적 지원)는 가족 당 한번씩만 계산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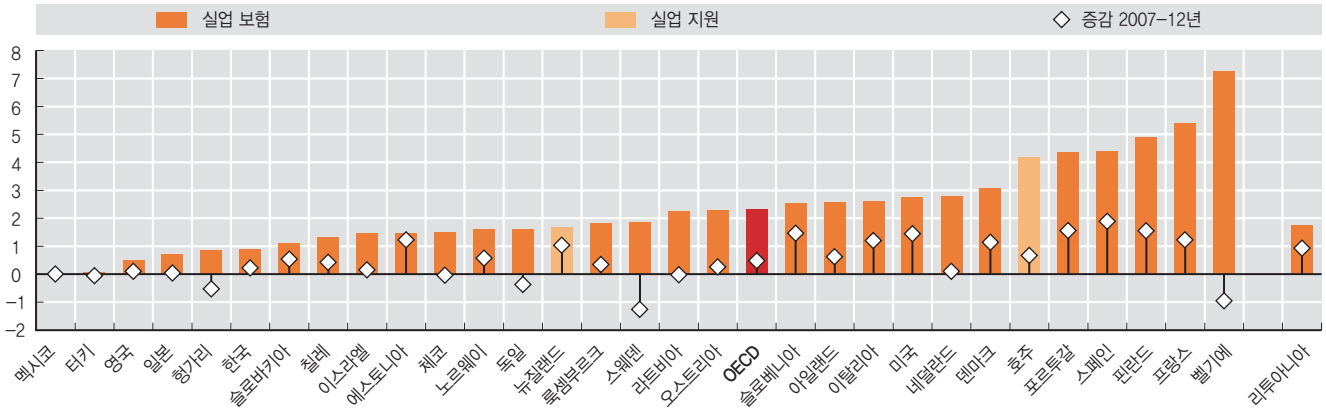
Immervoll, H., S.P. Jenkins and S. Königs(2015), "Are Recipients of Social Assistance 'Benefit Dependent'?: Concepts, Measurement and Results for Selecte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rcmgpc6mn-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12와 5.13: 그리스, 아이슬란드, 폴란드는 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하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캐나다와 스위스도 배제했다. 국가는 대상이 되는 모든 급여의 오름차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했다.

5.12.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일차적 실직급여 수급자가 2007년 이후 증가했다.

생산연령 인구 중 일차적 현금이전 수급자 비율, 2012년 및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비율 변화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27

5.13. 2007년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차적 실업급여(안전망) 수급자가 증가했다.

출처: OECD Benefit Recipients Database (SOCR), www.oecd.org/social/recipients.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35

6. 보건지표

기대여명

인지하는 건강상태

자살

보건지출

흡연 및 음주

기대여명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OECD 지역에서 매년 평균 3-4 개월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활방식의 개선, 근로조건 및 교육의 개선, 의료보건의 발전 등 많은 요인에 의한 것이다.

2014년, OECD 지역에서 기대수명은 평균 80.6세로 1970년 이후 10년 이상 늘어났다(그림 6.1). OECD 회원국 중 거의 4분의 3이 기대수명이 80세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이 거대집단의 선두에는 일본, 스페인, 스위스가 있다. 칠레, 미국, 여러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이 포진한 두번째 집단은 기대수명이 75세에서 80세 사이였다.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곳은 라트비아와 멕시코로 2014년 현재 75세에 약간 못 미쳤다. 2000년 이후 멕시코의 기대수명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으며 OECD 국가 평균적으로 3년 이상 늘어난 데 비해 1년여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 이후 기대수명 연장이 대부분의 타 OECD 회원국보다 적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주로 (1) 미 의료보건제도가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과 일차적 의료 서비스로 전용되는 자원이 비교적 적고 인구 중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서, (2) 1인당 칼로리 섭취량과 비만율이 높고 처방약과 불법약물의 복용률도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고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점 등 의료 관련 행동 때문에, (3)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빈곤율이 높고 소득 불평등성이 커서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국 역시 지난 수십년 간 기대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OECD 평균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성과가 다른 국가에 크게 못 미친 국가는 남아공(주로 HIV / AIDS 창궐 때문)과 러시아(주로 1990년대 경제 과도기의 영향 및 남성들의 위험한 행동 증가 때문)였다.

기대여명은 성별에 따라 다르며 학력에 따른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6.2). 학력이 높으면 사람들이 생활하고 근로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수단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좀더 건강한 생활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자료가 나와 있는 15개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 30세 시점의 최고 학력자들은 최저 학력자보다 기대여명이 6년이나 더 긴 것으로(53년과 47년)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여명의 차이는 특히 남자에게서 두드러지는데 격차가 평균적으로 거의 8년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서는 고학력 남자와 저학력 남자 사이의 기대여명 격차가 10년 이상이었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에서는 격차가 덜했다.

1인당 보건지출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더 길었다. 다만 이 상관관계는 일인당 보건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는 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6.3) 각국의 보건지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은 비교적 기대수명이 길었고 러시아와 미국은 비교적 짧았다.

정의와 측정

기대수명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을지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출생 집단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만일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면(지난 수십년 간 그랬던 것처럼) 실제 기대수명은 현 사망률을 가지고 산출한 것보다 길어질 것이다. 기대수명 산출에 사용된 방법론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1년 미만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은 모든 OECD 국가에 대해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평균을 이용해 산출한다. 교육수준 별 기대여명 산출을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구체적인 사망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사망률 자료에 학력 관련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인당 보건지출은 "보건지출" 지표를 참고한다.

참고문헌

OECD (2015), *Health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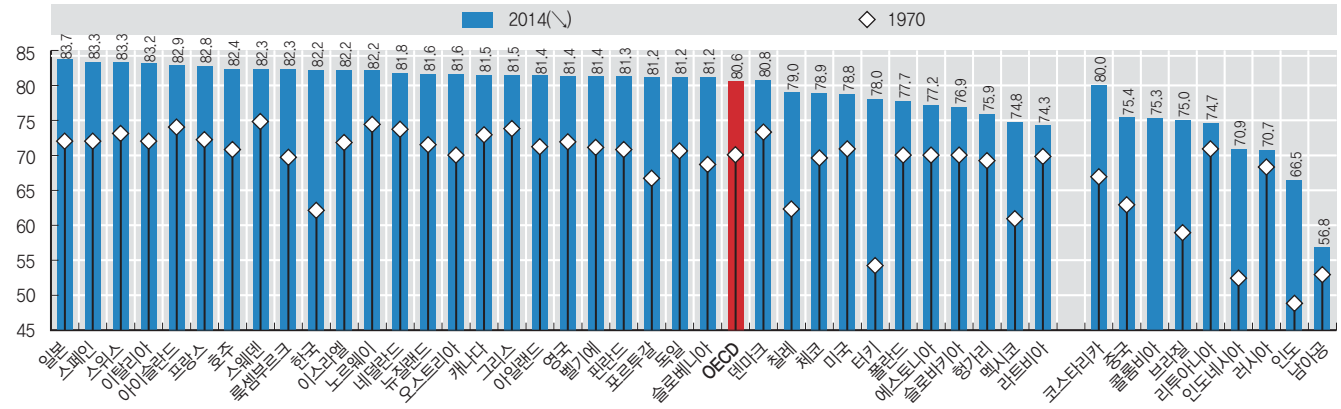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과 6.3: 2014년 자료는, 캐나다는 2011년, 브라질과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은 2013년 자료를 의미한다. 1970은 캐나다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1971년 자료이며 콜롬비아는 1970년 자료가 없다.

그림 6.2: 2013년 자료는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는 2012년 자료를 의미한다.

6.1. OECD 국가에서 기대수명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기대수명, 연도, 1970년과 2014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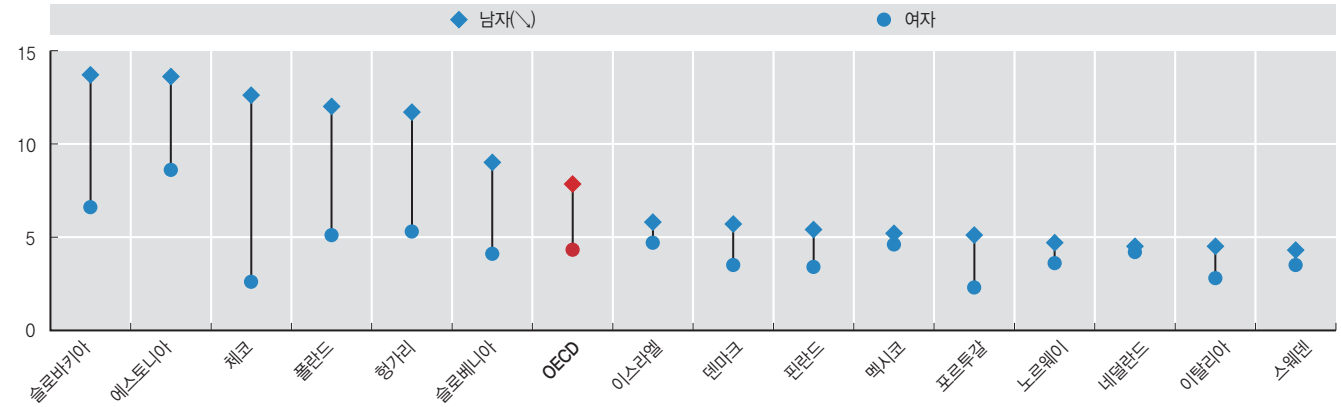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출처 http://dx.doi.org/10.1787/888933405548

6.2. 최고학력자는 최저학력자보다 6년을 더 사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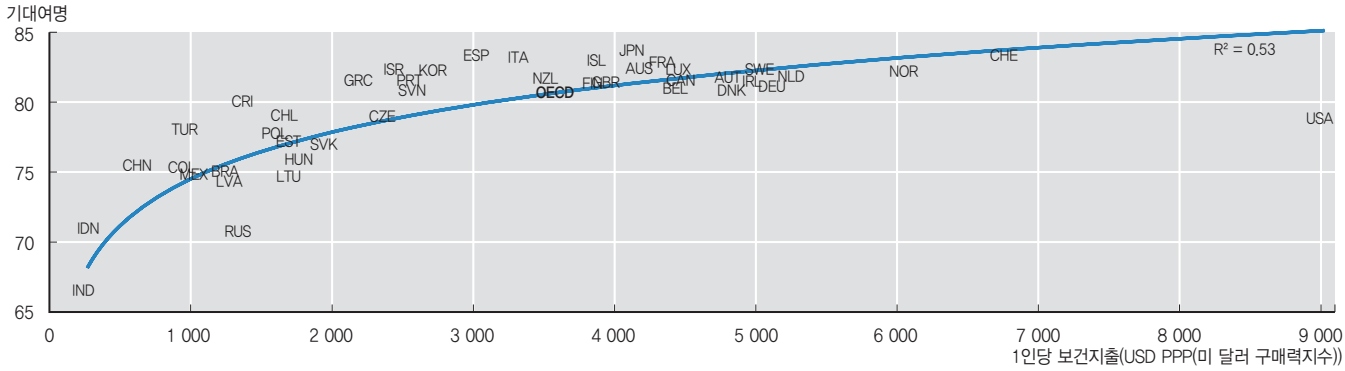
대졸자와 고졸 미만의 30세 시점 기대여명 격차, 남녀별, 2013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Eurostat database complemented with national data for Israel, Mexico and the Netherlands.

StatLink 출처 http://dx.doi.org/10.1787/888933405552

6.3. 1인당 보건지출이 클수록 기대수명은 길다.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출처 http://dx.doi.org/10.1787/888933405561

인지하는 건강상태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성인인구의 대다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나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림 6.4).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열명 중 아홉 명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조사 응답자들에게 제공된 응답 카테고리는 유럽 및 아시아 OECD 회원국에서 사용된 것과 다르다. 이들 국가의 경우 긍정적 선택지가 하나 더 많고 ("최상") 부정적 선택지는 하나 적다 (매우 나쁨). 이로 인해 결과에 상향 왜곡이 발생했다. 반면 일본과 한국, 포르투갈에서는 건강이 좋거나 아주 좋다고 답한 비율이 성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칠레와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에서도 그 비율이 비교적 낮았는데 성인의 60%미만이 본인의 건강이 좋은 상태라고 답했다. 자가 평가한 건강 상태에 대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자들은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칠레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는 남녀간 격차가 특히 컸다.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으로 측정한 결과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6.5(패널 A)는 모든 국가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소득자에 비해 건강이 나쁘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격차에는 차이가 있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소득 최고 오분위에 속하는 이들 중 거의 80%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했고 최하위 소득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그 비율이 60% 를 약간 상회했다**. 이러한 차이는 건강관련 생활방식(예: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의 차이뿐 아니라 생활 및 근로 여건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이건 다른 이유에서이건 특정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비교적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인과관계가 반대일 수도 있다. 즉, 열악한 건강상태가 고용률 저조와 소득 저조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16-29세 청년 인구의 사회경제 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자료도 나와 있다 (그림 6.5, 패널 B). 당연할 일이겠지만 청년들은 건강 상태를 좀더 양호하게 답하고 있다. 이번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고소득 청년들보다 건강이 나쁘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격차는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격차는 에스토니아, 독일, 포르투갈에서 12-14% 차이로 특히 두드러졌다.

정의와 측정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보건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응답자들에게는 "건강이 대체로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중 하나를 고르시오" 등의 질문이 주어진다. OECD 보건통계 (Health Statistics)는 자신의 건강이 "좋음/매우 좋음"이라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 정보를 제공한다.

인지된 건강상태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는데 최소한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본인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며 문화적 배경과 국가적 특성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용된 조사와 국가별로 인지된 건강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질문과 답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에서 사용된 답변 범주는 비대칭(긍정적인 측면에 치우침)이었는데 "최상,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등이었다. OECD Health statistics 자료는 그 중 세가지 긍정적인 답변 ("최상, 매우 좋음, 좋음")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합한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답변의 범위가 대칭적으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라는 식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보고된 자료는 첫번째 두 개 응답 ("매우 좋음, 좋음")만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비대칭 범위를 사용한 국가들의 결과를 상향 왜곡시키고 있다.

소득수준별 주관적 건강인식은 첫번째 오분위(소득집단의 하위 20%)와 다섯번째 오분위 (상위 20%)에 대해 보고되어 있다. 조사에 따라 소득은 개인의 소득일 수도 있고 가구의 소득일 수도 있다(이 경우 소득은 가구원 수를 감안하기 위해 균등화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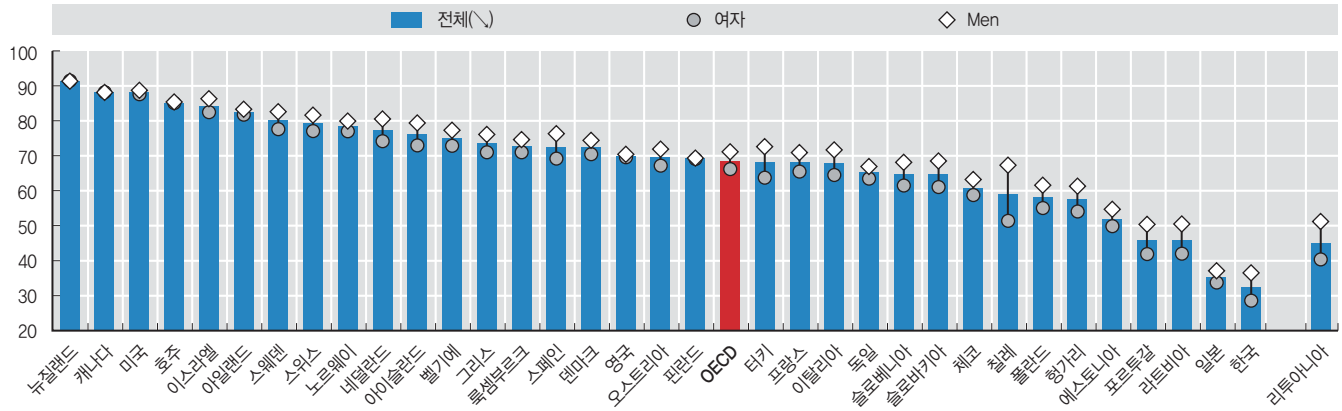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4와 6.5: 호주와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의 결과는는 조사 문항의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 상향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 칠레는 2009년 자료, 일본은 2014년 대신 2013년 자료이다. 멕시코는 자료가 없으며 비 유럽 국가들의 경우 16-29세 자료가 없다. 그림 6.4에서 국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림 6.4. 성인 인구의 대다수가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답했다.

15세 이상 성인 중 건강이 좋거나 나아지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 남녀별, 2014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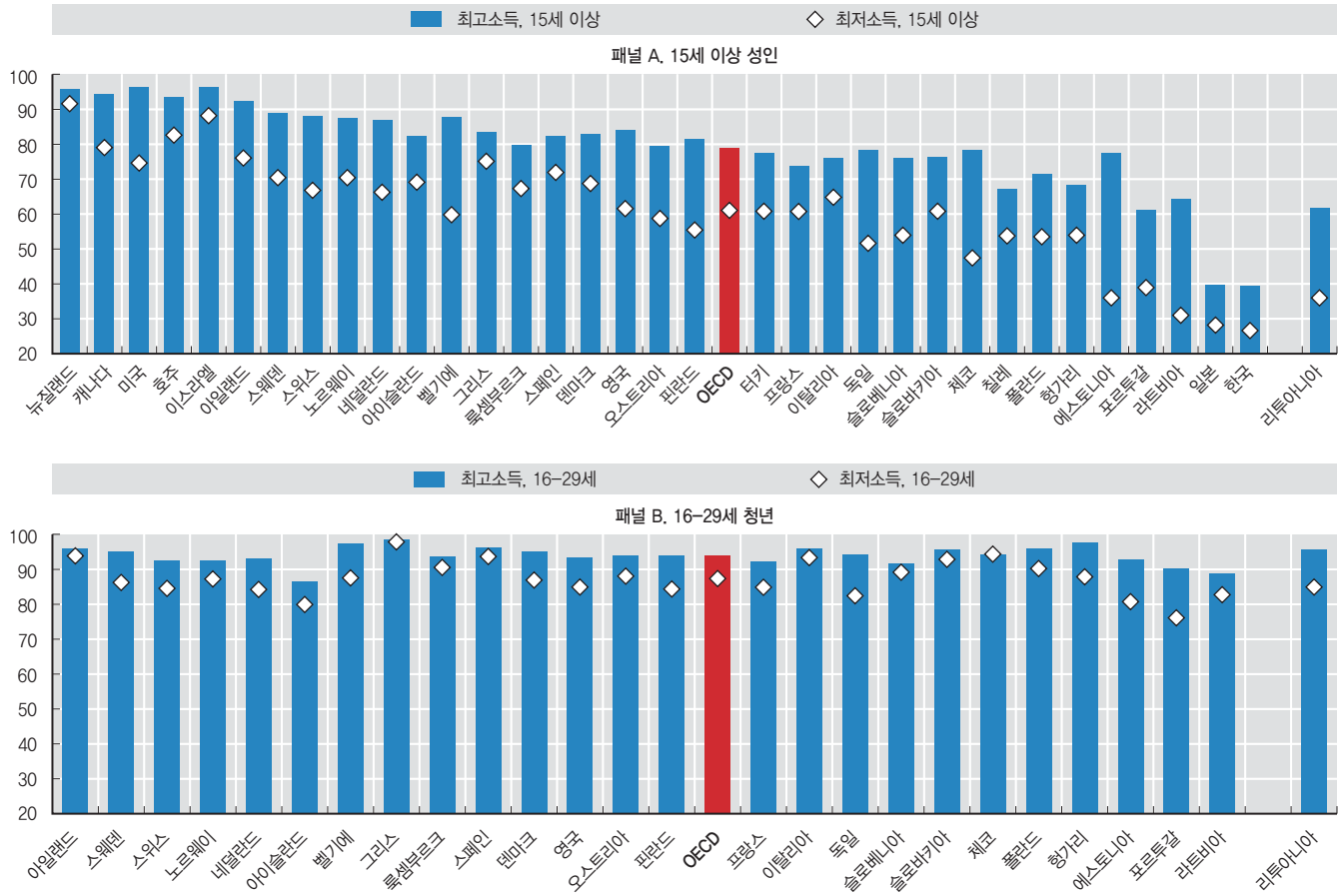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77

6.5. 소득 오분위 최상위 집단의 사람들은 최하위 집단의 사람들보다 건강이 양호하다고 답하고 있다.

건강이 좋다거나 매우 좋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 (%), 소득수준 별,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and EU-SILC for European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88

자살

자살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주된 사망요인 중 하나이며 2014년에는 15만명 이상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즉, 10만명 당 12명꼴로 자살한 셈이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자살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다수의 위험 요인이 있다.

2014년 자살률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과 콜롬비아에서 10만명 중 다섯 명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6.6).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는 인구 10만명 당 18명 꼴로 자살이 발생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와 가장 높은 한국 간에 열한 배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자살자 수는 자살로 인한 낙인이나 보고기준의 차이로 인해 실제보다 축소된 것일 수도 있다.

자살률은 1970년대에 증가했고 1980년대 초반 정점이었다(그림 6.7).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 지역에서 자살률은 약 30%가량 감소했으며** 헝가리의 경우 50%가 넘는 두드러진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일본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던 시기에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 수년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같은 시기에 자살률이 급증했고 이 추세가 2011년까지 이어졌다.

이전의 연구는 부정적인 경제여건과 높은 자살률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Van Gool and Pearson, 2014). **자살률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 위기 초반에 다소 높아졌지만 좀더 최근 자료를 보면 이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전반적인 자살률이 2009년과 2010년 안정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매우 낮은 수준에서 상승했다. 이는 각국이 실업자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서너 배 높다(그림 6.6).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할 확률이 여섯 배 이상이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남녀간 격차가 비교적 작긴 했지만 여전히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평균적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으며, 인구 10만명 당 70세 이상 노인 20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8).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에 따라 자살률이 가장 많이 높아진 국가는 한국으로 최고령자 집단의 자살률은 십대 자살률의 열다섯 배에 육박한다. 남녀간 자살률 차이는 75세부터 특히 중요해지는데, 이 시기에는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여섯 배이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의 경우 오랜 파트너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겪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남자의 질병발생률이 높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예외적인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청년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아서 10만명 당 15-29세 자살자 수는 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청년의 자살률이 노인보다 높았다. 30대 미만 자살률은 핀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았으며 청년 10만명 당 15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와 룩셈부르크였다.

정의와 측정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완전하게 인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자살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간 자료 비교는, 개인의 자살 의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망확인서 발행 책임자는 누구인가, 법의학적 조사는 실시되는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비밀은 유지되는가 등 여러가지 보고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국가간 차이를 해석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망률은 한 해에 한 국가에서 등록된 사망자수를 해당 인구 규모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사망률은 국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상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2010 OECD 인구에 직접 연령-표준화했다. 출처는 WHO Mortality Database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ICD-10 코드 X60-X84로 분류된다.

참고문헌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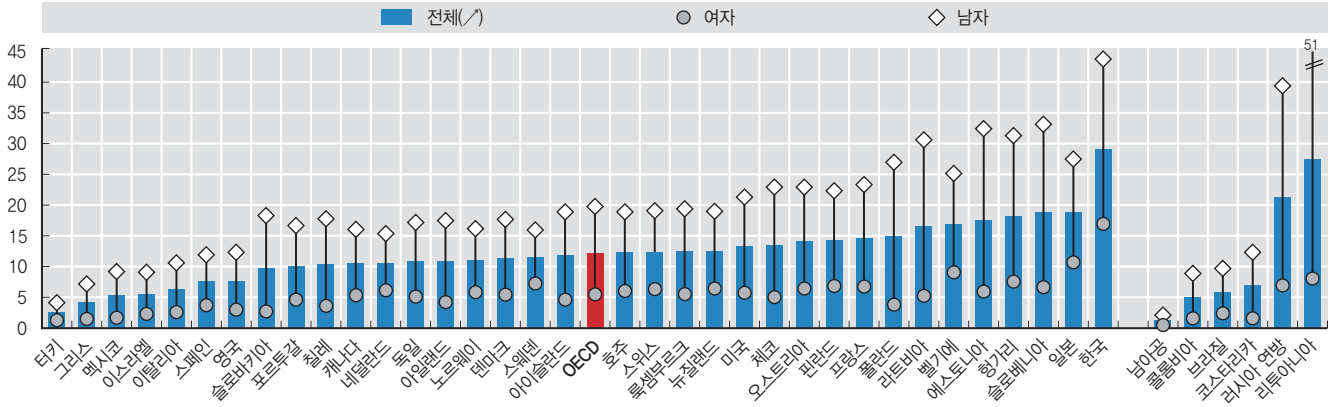
Van Gool, K. and M. Pearson(2014),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x71lt1zg6-en*.

그림에 따른 주석

그림 6.7과 6.8: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확한 최근 연도 자료를 Statlink 참고.

6.6.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에는 열한 배의 차이가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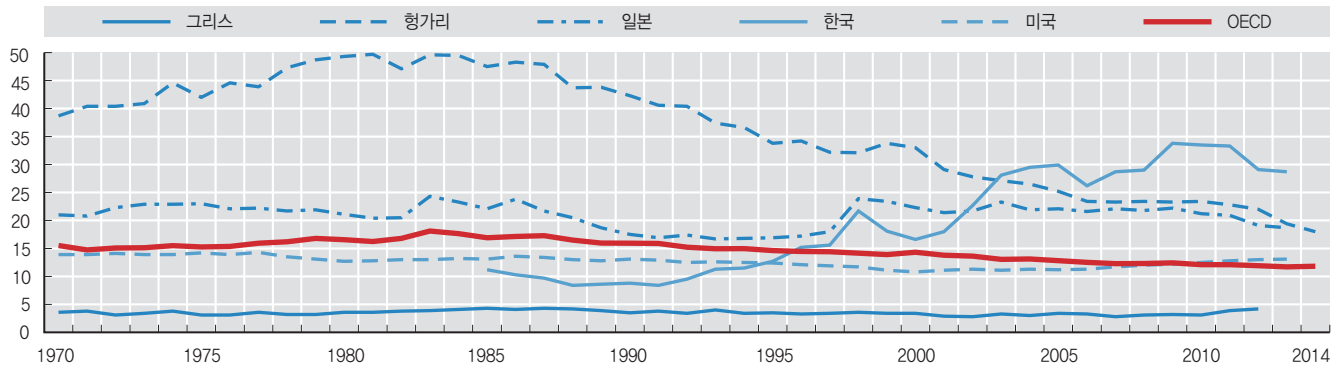
인구 10만명 당 연령 표준화한 자살률, 남녀별,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598

6.7.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0년 중반 이후 자살률이 하락했으며 위기를 겪은 국가의 경우 다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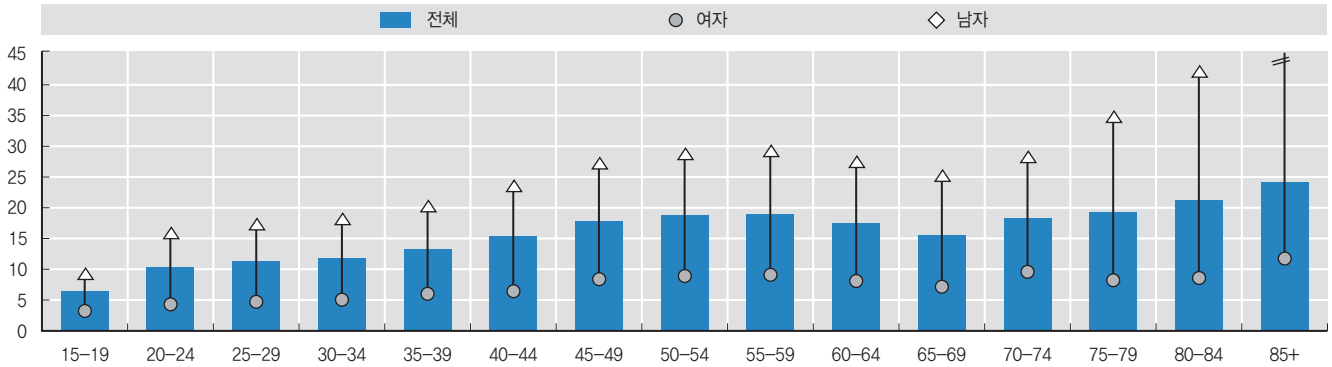
인구 10만명 당 연령 표준화한 자살률 추이, 일부 OECD 국가, 1970-20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05

6.8. 자살률은 은퇴 초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함께 상승한다.

연령집단 및 성별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OECD 평균, 2013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and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form WHO Mortality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11

각국이 보건에 얼마나 지출하며 이러한 지출이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각국 보건 제도의 다양한 재정 및 조직 구조뿐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 및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다.

2015년, 미국의 보건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을 계속해서 큰 차이로 압도하여 1인당 9,450달러를 기록했다(그림 6.9). 이 수준의 보건 지출은 모든 OECD 국가 평균(4,010달러)의 2.5배 정도이며 미국 다음으로 지출이 큰 스위스보다 거의 40%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절반 정도는 1인당 보건지출이 3천 달러에서 6천 달러 사이이다. 지출액이 3천 달러 미만인 국가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남유럽과 중부유럽 국가들 그리고 칠레와 이스라엘, 한국이다. 1인당 보건 지출액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로 천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주요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가 각각 OECD 평균의 18%, 8%, 7% 를 2015년 1인당 보건지출액으로 사용했다.

그림 6.9는 1인당 보건지출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공공지출에 따른 순서는 전체 지출의 순서와 비슷하다. 평균적으로 민간지출이 전체 지출의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멕시코와 미국에서는 민간재원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이 계속해서 재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도 1인당 공공 보건 지출은 여전히 다른 모든 OECD 국가들보다 크며 노르웨이와 스위스만 예외이다.**

2009년 이후 보건지출은 몇몇 OECD 국가에서 수년간의 계속된 성장 이후 눈에 띄게 성장이 둔화되었다. 하지만 35개 OECD 회원국의 보건 지출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2005-09년 1인당 보건지출은 실질 기준으로 연간 3.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10). 반면 이후 6년간 (2009-15) 평균 보건지출은 경제위기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연간 불과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둔화의 정도는 OECD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재정건전화로 인해 지출이 대폭 삭감된 반면 유럽 외 지역 국가에서는 많은 경우 속도가 줄긴 했지만 보건지출의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2009년 이후, 위기 전 지출 증가세가 반전된 국가는 그리스 (2005-09년 연간 성장률 4.5% vs. 2009년 이후 6.6%)와 아일랜드(6.9% vs. -0.3%)이다. 지출의 속도는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둔화되었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보건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특히 캐나다 (0.5%)와 뉴질랜드 (0.8%)에서 두드러졌다. 위기 이후 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5개국 -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스위스 - 뿐이었다.

정의와 측정

보건 지출은 보건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 및 의료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과 행정에 대한 공공, 민간재원에 의한 지출이 포함되며 자본 형성에 대한 지출(투자)은 제외된다.

국가간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보건지출을 공통 통화(미 달러)로 환산했으며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감안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GDP)의 구매력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실질 기준의 성장률 산출을 위해 국가차원의 GDP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예: 프랑스와 노르웨이) 국가적 방법론에 의거한 보건용 디플레이터가 존재하지만 국가간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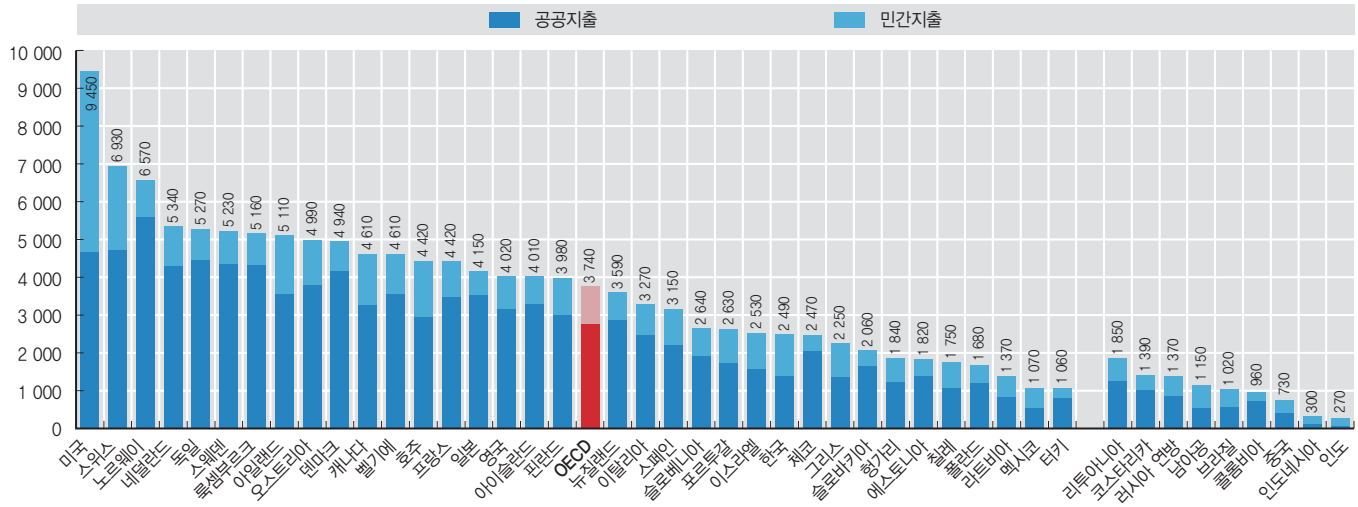
OECD (2015), *Health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9: 브라질, 콜롬비아,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남아공은 2013년 자료이며 투자를 포함한다.

6.9. OECD 내에서도 보건지출의 차이가 크다.

1인당 보건지출, USD PPP, 2015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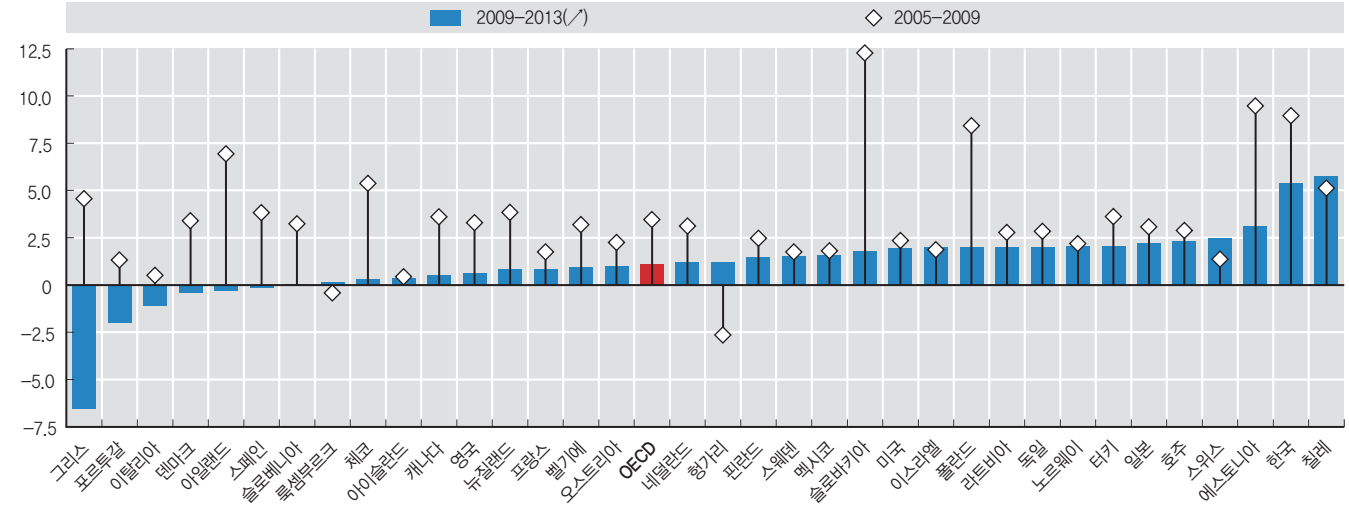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23

6.10. 2009년 이후 몇몇 국가에서는 몇 년 간의 계속된 보건지출 증가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1인당 보건지출의 연평균 성장률, 실질 기준, 2005-09년과 2009-15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37

흡연과 음주

흡연과 음주는 조기사망 - 심혈관 질환과 암 - 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 속하는 주된 위험 요인이다.

평균적으로 2014년, 성인인구의 약 19%가 매일 흡연했으나 이 비율은 OECD 내에서 차이가 크다(그림 6.11). 흡연율은 멕시코와 스웨덴에서 가장 낮았다 (12% 미만). 반면 라트비아의 경우 36%로 높았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흡연율은 크게 감소해왔다. 평균적으로 2000년 이후 약 4분의 1 정도 감소하여 2000년에 26%, 2014년에 19% 를 기록했다. 크게 감소한 곳은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였다. 흡연율이 증가한 곳은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뿐이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흡연율이 12% 미만으로 낮았으나 인도네시아는 3분의 1 이상으로 높았다.

음주량은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자료를 측정했을 때 OECD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당 8.9리터 수준이었다 (그림 6.12).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 프랑스와 체코는 연간 성인 한 명 당 11.5 리터 이상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가장 많았다. 적은 곳은 터키와 이스라엘, 그리고 신흥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일부 인구 집단에서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음주가 제한된 곳들이다. 평균 음주량이 많은 OECD국가에서 2000년 이후 점차 감소해왔지만 - 성인 한 명당 약 3분의 2리터 - 칠레와 라트비아, 폴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주요 파트너 국가인 중국과 리투아니아, 러시아 연방에서는 1리터 이상 증가했다. 개인차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OECD 분석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은 지위가 높은 남성들보다 폭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엔 그 반대였다(OECD, 2015).

청소년 흡연 및 음주는 신체, 정신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되기 쉽고 정기적 음주는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저해뿐 아니라 교육적 성과저하, 폭력, 상해, 흡연, 약물 사용, 위험한 성적 행위와도 관련성이 높다(OECD, 2015a).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여덟 명 중 한 명은 최소 주 1회 흡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은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5% 미만부터 프랑스와 헝가리, 이탈리아의 20% 까지 분포되어 있다(그림 6.13). 핀란드와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러시아 연방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훨씬 높은 반면 체코와 룩셈부르크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15세 청소년 음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최소 2회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주율은 이스라엘의 10%부터 덴마크와 헝가리, 리투아니아의 35% 이상까지 분포한다 (그림 6.14).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연방, 스위스에서는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음주율이 높았다. 영국은 유일하게 여자 청소년의 음주율(잉글랜드와 웨일즈 자료. 스코틀랜드 제외)이 더 높았다.

정의와 측정

매일 흡연하는 이들의 비율은 매일 흡연한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OECD 회원국들의 건강 인터뷰 조사에서 흡연 습관 측정방식이 제대로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간 비교는 제한적이다. 조사된 연령집단, 질문의 표현 방법, 응답 카테고리, 조사 방법(예: 많은 국가에서 흡연을 매일 하는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가라고 질문)의 차이가 남아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응답하는 조사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왜곡이 있고 이는 국가간 비교를 제한할 수 있다.

음주는 15세 이상 1인당 순수한 알코올(리터 단위)의 연 매출로 정의된다. 알코올 음료를 순수 알코올로 전환하는 방법론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는 가정에서 담근 술 등 무자료 알코올 섭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녀별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과 음주는 2013/14 HBSC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학령기 아동의 건강 행동) 조사를 출처로 하며, 여기에서는 26개 OECD 회원국 청소년들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녀별로 나타난 지표는 최소 주 1회 흡연하거나 지금까지 2회 이상 음주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참고문헌

HBSC(2016),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www.hbsc.org/publications/international*.

OECD(2015a), *Tackling Harmful Alcohol Use – Economics and Public Health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1069-en*.

OECD(2015b), *Health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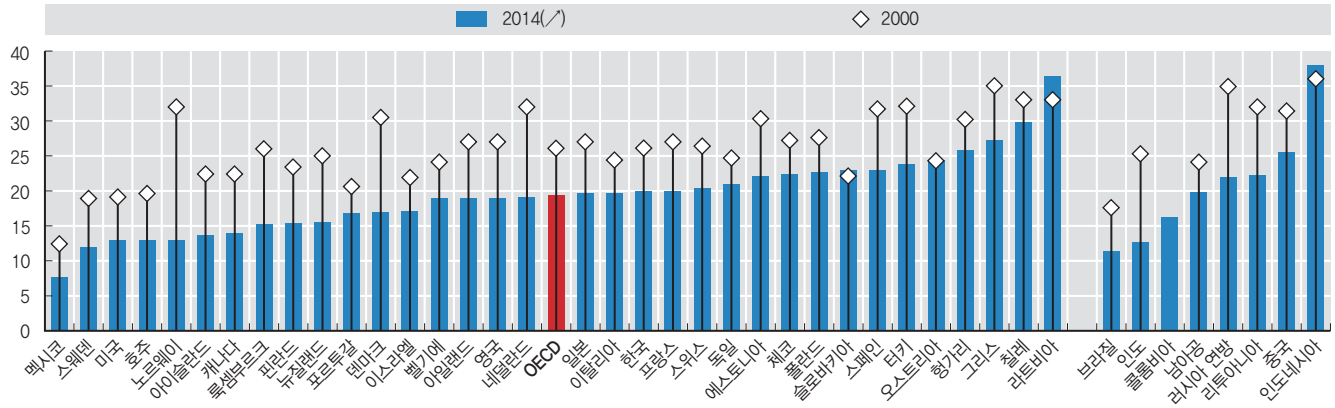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1과 6.12: 정확한 기간은 Statlink 참고.

그림 6.13과 6.14: 벨기에 자료는 플레미쉬(60%)와 프렌치(40%)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산출된 것이다.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85%), 스코틀랜드(9%), 웨일즈(5%)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산출했다.

6.1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성인의 흡연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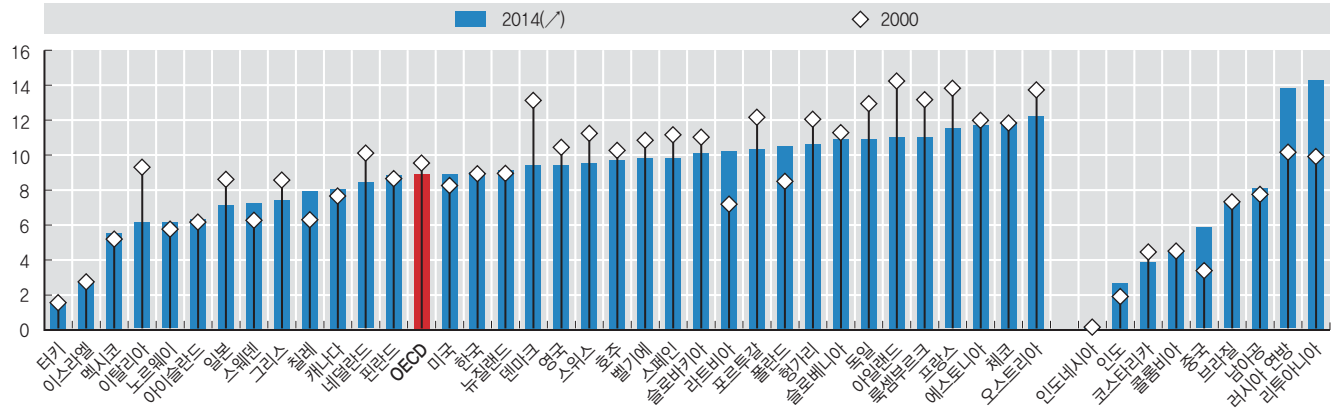
매일 흡연하는 15세 이상 인구 비율, 2000년과 2014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48

6.12.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성인의 음주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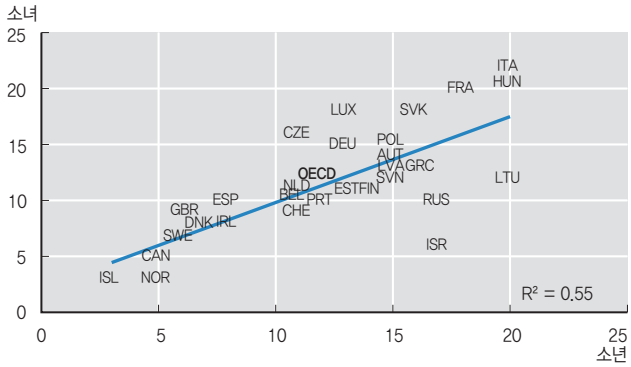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 알콜 섭취량(리터), 2000년과 2014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54

6.13.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여덟 명 중 한 명 꼴로 주 1회 이상 흡연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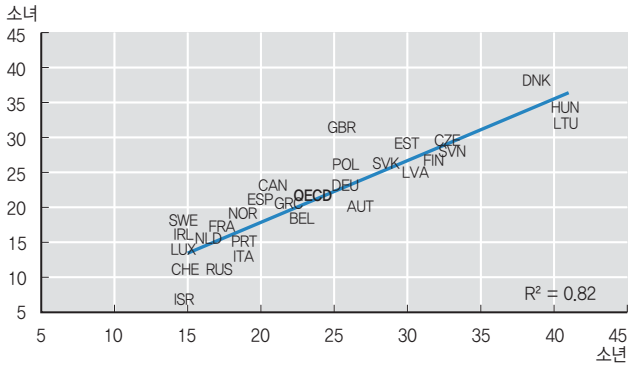
주 1회 이상 흡연하는 15세 청소년 비율, 남녀별, 2013/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62

6.14.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지금까지 2회 이상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회 이상 음주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비율, 남녀별, 2013/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75

출처: HBSC(2016),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www.hbsc.org/publications/international.

7. 사회통합 지표

삶의 만족도

신뢰

투표

범죄와 재소자

사회적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활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스위스와 덴마크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그림 7.1). 이들 국가에서 측정된 만족도는 2014/15년 11단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2.5 단계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위기 중 하락했는데 특히 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두드러졌다. 소득과 노동시장 전망이 가장 크게 악화된 국가는 주관적인 웰빙 수준도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삶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각국을 지역적 또는 문화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위 다섯 개 국가 중 네 곳은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서부유럽과 동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들은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나, 스위스는 예외였고 정도는 덜하지만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예외였다. OECD 회원국 중 영어사용 국가들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모두 상위권이었으며 북유럽 국가들로 이루어진 상위집단을 바짝 뒤쫓았다. 신흥국 집단의 경우 나라마다 차이가 컸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의 6 이상부터 인도와 남아공의 5 이하까지 분포했다.

삶의 만족도가 연령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인집단보다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청년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헝가리와 터키, 에스토니아 청년들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만족도가 55세부터 증가하면서 "U자형"을 보이기도 했다.

십대 소년들은 소녀들보다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7.2는 만족도를 상위수준 (6 이상)이라고 응답한 15세 이상 십대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십대 비율은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10% 많았다. 폴란드와 프랑스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컸다(15% 차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로 십대 청소년의 90% 정도가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일과 삶의 균형에 만족하는 이들이 더 높았다.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오스트리아로 일과 삶의 균형에 만족하는 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못한 이들의 만족도보다 1.7 포인트 더 높았다(그림 7.3). 일과 개인 삶의 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와 측정

갤럽 세계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11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가 있다고 하자. 맨 아래 계단(0)은 최악의 삶이고 맨 윗 계단(10)은 최상의 삶이다. 현재 당신은 개인적으로 몇 번째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섹션에 사용된 주요 지표는 국가 평균점수이다. 갤럽 세계조사는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공통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거의 예외없이 모든 표본은 시골 지역을 포함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대표하며 확률에 기반하여 선정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간 비교는 쉬워지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 표본추출 오류와 응답률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료 특히 청소년 자료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자료는 학령기 아동 행동(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조사를 출처로 한다. 11-15세 청소년에게 0부터 10까지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캔트릴 척도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의 질을 물어보았다(Cantril, 1965). 0은 최악의 삶, 10은 최상의 삶을 의미한다. 응답자가 상위 점수(6점 이상)을 주는 경우 그 응답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Currie et al., 2012).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로 표현된다.

삶의 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 간의 관계 자료는 EQLS (European Quality of Life)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15세 이상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점수 매겨 보도록 했다.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요즘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척도는 1점부터 10점으로 1은 매우 불만족, 10은 매우 만족을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는 성인들의 평균 점수로 표현된다. 일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에 대한 불만족은 가정과 일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응답자들을 바탕으로 한다.

참고문헌

OECD(2015),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Paris,*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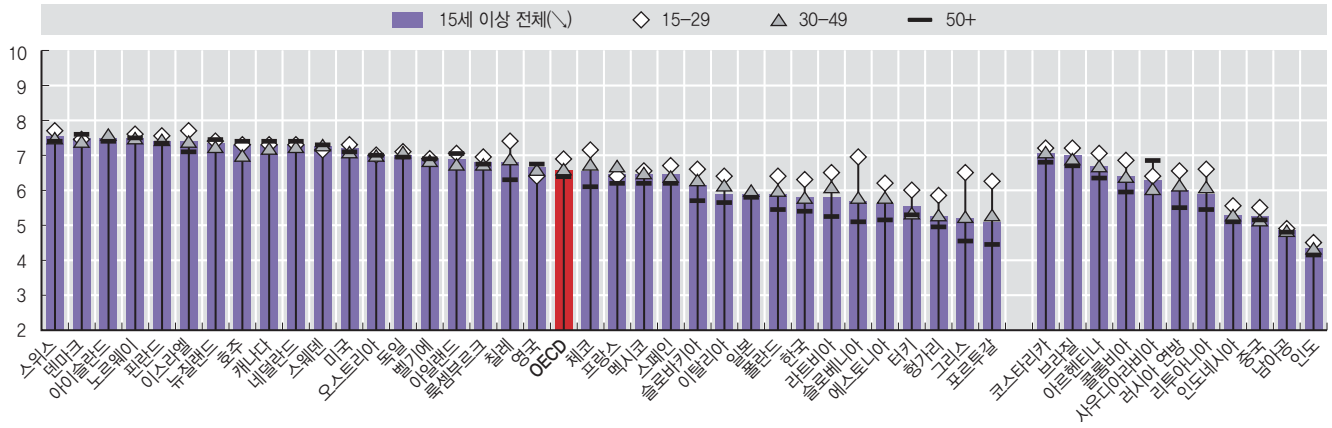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 아이슬란드는 2013년 자료. 아이슬란드와 일본은 15-29세 자료가 없다.

그림 7.2: 벨기에 자료는 플레미쉬 (60%)와 프렌치 (40%)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산출.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 (85%), 스코틀랜드 (9%), 웨일즈 (5%)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산출.

7.1.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0부터 10까지 11단계 중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 연령집단 별, 20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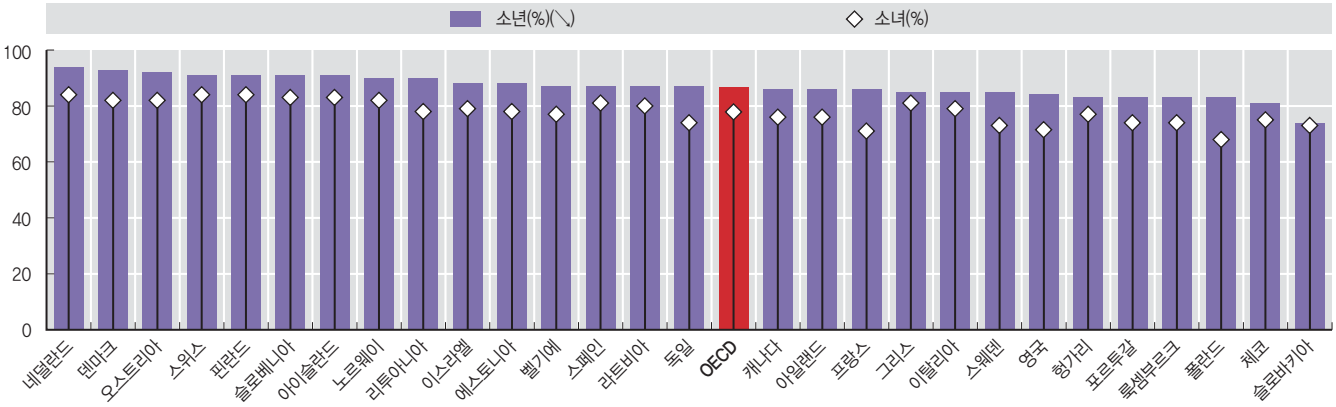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82

7.2. 십대 소년들은 대개 소녀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삶의 만족도를 6점 이상으로 답한 15세 이상 십대소년 비율, 0-10 범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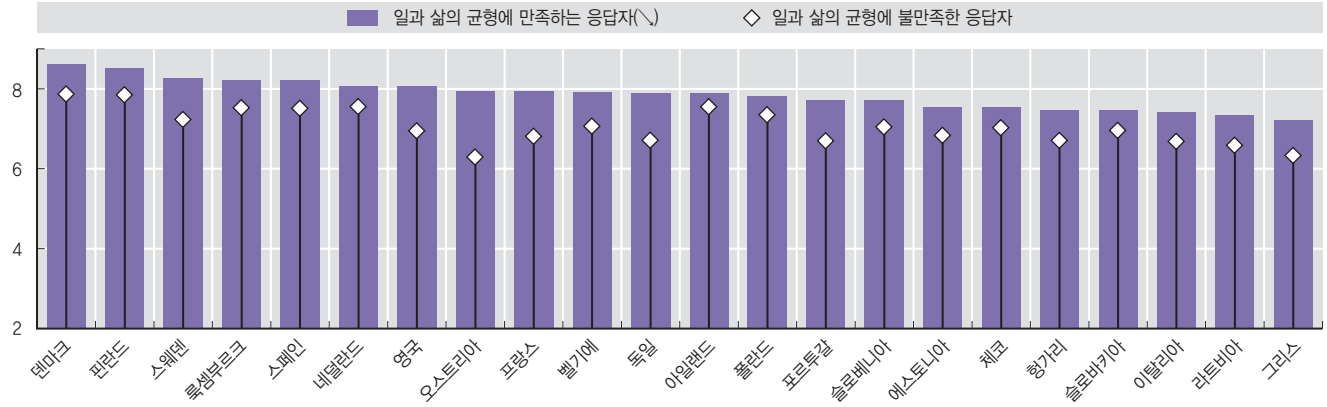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HBSC 2013/14) www.hbs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690

7.3. 일과 삶의 균형에 만족하는 이들이 더 행복하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 2012년



출처: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EQLS), 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07

통합된 사회는 시민들이 타인과 공적 제도에 신뢰를 갖는 곳이다. 신뢰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은 신뢰와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gan and Cahuc, 2013).

타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사람들의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그림 7.4). **OECD 국가에서 응답자의 약 36% 는 타인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북유럽의 경우 응답자의 60% 가, 칠레와 멕시코, 터키는 13% 미만이 서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주요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 국가들보다 대체로 신뢰도가 낮았는데 콜롬비아의 4% 부터 인도의 33% 까지 분포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비슷해서 약 42% 정도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은 낮았고 국가간 차이가 컸다(그림 7.5). 주요 파트너 국가 중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콜롬비아가 가장 낮았다.

평균적으로 청년들의 타인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인구의 신뢰도와 비슷했다. 그러나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미국의 경우 청년들이 전체 인구집단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칠레와 한국, 그리스는 반대였다.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청년 니트족은 비 니트족 청년의 절반이었다(제1장 및 그림 1.19 참고). 시간이 흐르면서 니트 상태는 고립과 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 격차는 스웨덴과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에서 가장 컸다. 멕시코와 한국, 일본, 에스토니아, 스페인에서는 65% 이상이 실직이나 취업 실패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그 비율이 네 명 중 한 명 미만이었다(그림 7.6).

정의와 측정

타인에 대한 신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은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 또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이다. 출처로는 두 개의 조사가 사용되었다. 6차에 나온 모든 국가는 WVS(World Values Survey, 세계가치조사)(6차), 캐나다는 5차, 이스라엘은 4차, WVS에 없는 유럽 국가는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4차)이다. 국가간 자료 비교는 표본 크기 및 응답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뢰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전반적인 신뢰율은 니트족 표준 크기가 충분한 OECD 국가들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림 1.19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의와 측정(계속)

정부에 대한 신뢰 자료는 갤럽 세계 조사를 출처로 한다. 갤럽 세계 조사의 질문은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의 중앙 정부를 신뢰하십니까?"이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하며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대표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간 비교는 쉬워지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 표본 추출 오류와 응답률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료, 특히 청년 자료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직 또는 구직 실패에 대한 우려 자료는 WVS 6차: 2010-14년을 출처로 한다. World Values Survey (www.worldvaluessurvey.org)는 변화하는 가치와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글로벌네트워크이다. WVS 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90% 를 차지하는 100개국에서 실시된, 대표성 있고 비교 가능한 서베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신념과 가치를 시계열로 조사한, 최대 규모의 비 상업적, 국가간 조사로 응답자 수가 거의 40만명에 육박한다. WVS는 과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전세계 사람들의 신념, 가치, 동기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Algan, Y. and P. Cahuc(2013), "Trust, Well-Being and Growth: New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ZA Discussion Paper*, No. 7464, Bonn.

OECD(2015), *Government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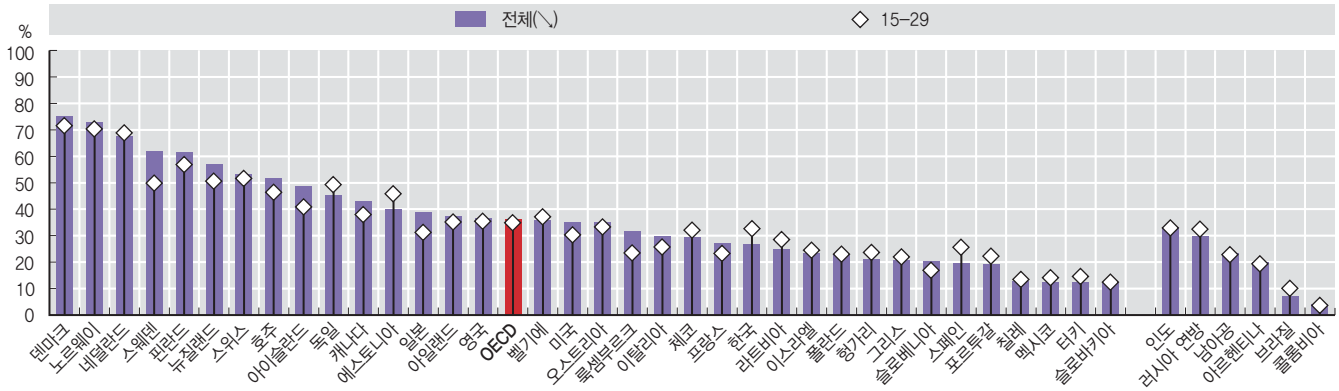
그림 7.4: 호주와 칠레,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자료는 WVS 6차 (2010-13) 자료이고, 캐나다는 5차(2009-09), 이스라엘은 4차(1999-04) 자료이다. 다른 국가들은 European Values Survey (2008-10) 4차 자료이다.

그림 7.5: 스위스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칠레, 일본, 미국, 한국, 브라질 등 2014년 자료를 사용한 곳을 제외하고는 평균 2014/15. 표본 크기가 작아서 아이슬란드 자료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림 7.6: 브라질, 인도는 2014년, 아르헨티나, 독일은 2014년, 호주와 콜롬비아,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는 2012년, 칠레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미국은 2011년, 일본과 한국은 2010년 자료.

7.4. 북유럽 국가가 신뢰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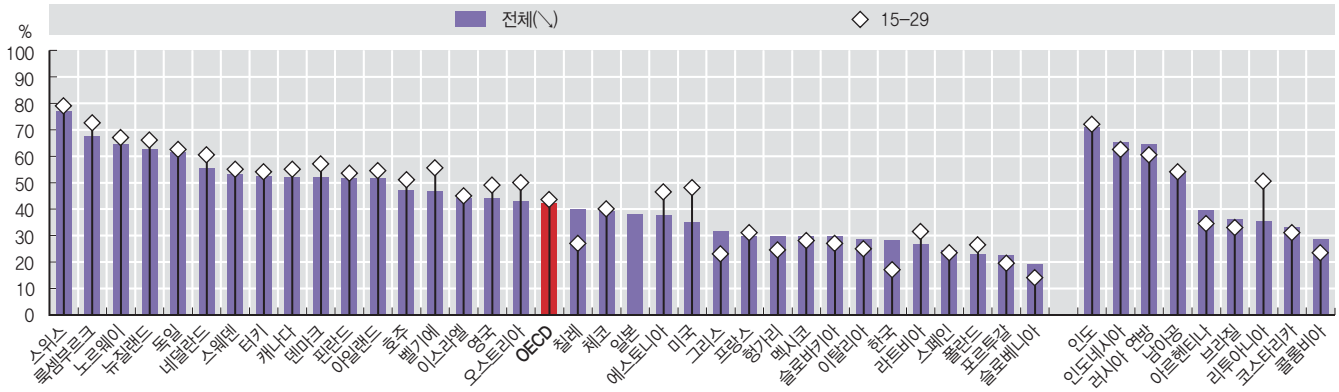


출처: World Value Survey(wave 6: 2010-14) for countries present in wave 6, WVS wave 5 (2005-09) for Canada and WVS Wave 4 (1999-2004) for Israel. European Values Survey(EVS) (2008-10, wave 4) for all other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11

7.5.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연령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평균 20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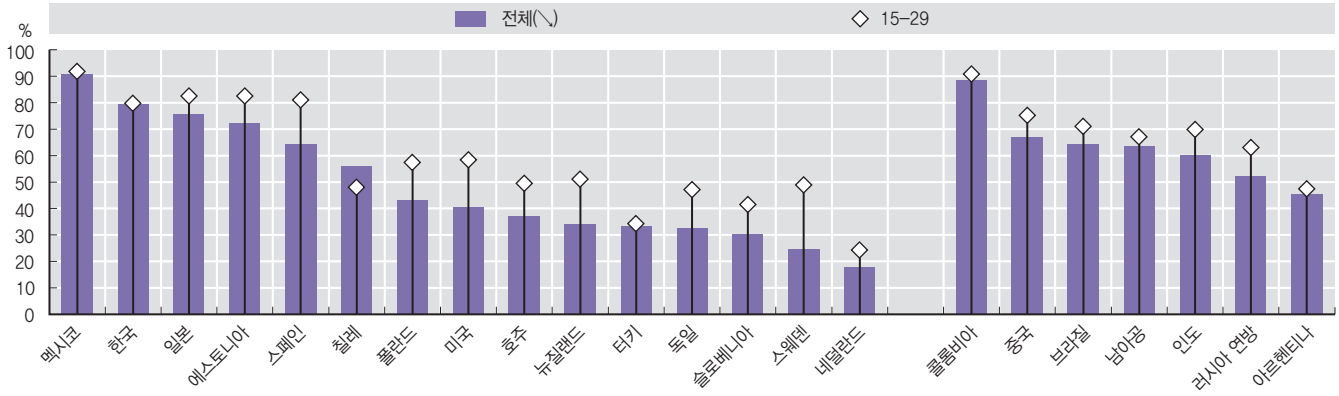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www.gallup.com) extracted at January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26

7.6.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청년층이 크다.

실직 또는 구직 실패에 대해 매우 또는 상당히 걱정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연령별, 2010-14



출처: World Values Survey(wave 6: 2010-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31

투표율은 OECD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높은 투표율은 국가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높거나 투표가 강제사항임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 연령 참여율은 호주와 벨기에, 덴마크와 터키 등 투표가 강제사항인 국가뿐 아니라 아이슬란드, 한국, 스웨덴에서 80% 이상이었다. 스위스는 50% 미만이다(그림 7.7).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많은 잠재 유권자들이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83%)와 콜롬비아 (52%)의 투표율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18-24세 청년의 투표율은 25-50세보다 16% 낮았다(그림 7.8). 영국과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의 경우 청년들의 투표율은 핵심 연령층보다 훨씬 낮았다. 유일하게 한국만 젊은 유권자들이 핵심생산 연령층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 남녀간 투표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정치적 삶에 행위자로 참여하도록 만들게 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 인구 중에는 다섯 명에 한 명이 동일한 응답을 했다(그림 7.9). 칠레와 포르투갈은 전체 인구의 정치 무관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와 독일, 일본, 노르웨이는 가장 낮았다. 15-29세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은 칠레, 체코, 헝가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40% 이상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정의와 측정

의회 선거에 대한 투표는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선거 과정에의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투표연령인구 투표율" 즉, 투표 연령 인구(VAP) 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로 회원국 행정 기록이 존재한다. VAP는 투표연령이나 여러 이유로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측값이다. 등록이 강제사항 및/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예: 주민등록 기록을 바탕으로),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등록된 유권자 수가 VAP에 가깝다.

투표율의 국가간 비교는 법적 투표 연령, 투표 등록제도(자동 등록인지 잠재적 투표자의 조치가 필요한지), 투표가

정의와 측정(계속)

강제적인지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투표 연령은 18세이나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한국은 17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와 지리적 관할지에 따라 선거 유형이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이 의회선거 투표율보다 높은데, 아마도 이러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이들이 헌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운영에 좀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표율 자료는 민주주의 선거지원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에서 관리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다.

그러나 IDEA는 유권자를 연령과 성별로 분류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청년 유권자 및 남녀별 투표율 정보는 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자료는 선거제도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 module 4: 2011-16)와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s) (ESS) 양쪽에서 추출했다. ESS는 최근 국가 선거(의회 또는 대통령 선거)의 참여율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CSES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자료는 ESS(European Social Surveys)와 세계 가치 조사 6차(World Value Survey Wave 6: 2010-14)를 출처로 했다. 두 조사 모두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묻고 있으며 응답자는 매우 관심있음, 상당히 관심있음, 거의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의 네 개 중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다. 자료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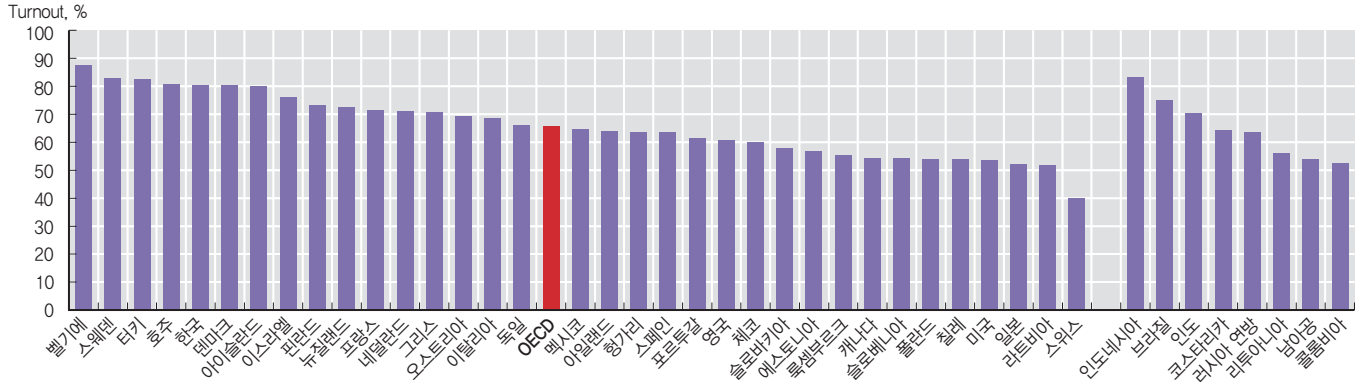
그림 7.7: 자료는 대선 투표율이 높아 대선을 고려한 콜롬비아,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는 의회선거 자료를 의미한다. 2015년 대신, 벨기에와 헝가리, 일본,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2014년, 호주와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2013년, 프랑스와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연방, 슬로바키아, 미국은 2012년, 캐나다와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는 2011년 자료이다. 노르웨이 자료는 나와있지 않다.

그림 7.8. 칠레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터키 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그림 7.9: 캐나다와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7.7. OECD 지역의 투표 참여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가장 최근 의회선거의 투표율, 투표 가능 연령 인구비율, 2015(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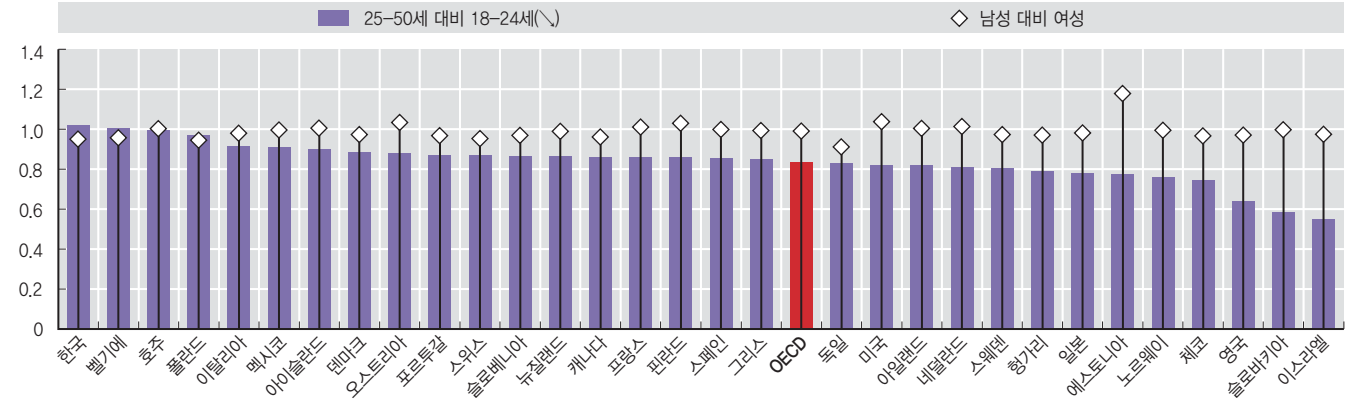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IDEA) voter turnou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40

7.8. 청년들은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인구 집단의 투표율, 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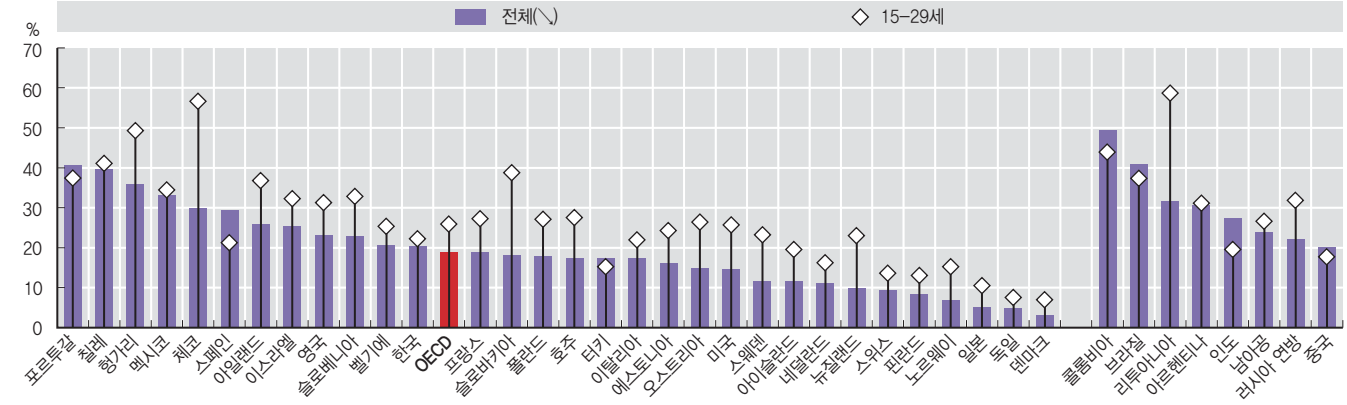


출처: Module 4 of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 2011-16) and European Social Survey(ESS) for other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52

7.9. OECD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연령집단별, 2012-14



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ESS6-2012, ESS7-2014 and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67

2013년, 평균 10만 명 당 2,100명이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와 공식 접촉했다. 전체 인구의 범죄율은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평균적으로 약간(거의 3%) 감소했다(그림 7.10). 감소폭은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서 20% 이상으로 가장 컸으며 룩셈부르크와 터키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는 평균 거의 20%만큼 감소하여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체코와 네덜란드는 50% 이상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터키는 거의 50% 증가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재소자 수는 OECD 국가 평균 2010년대 중반 10만명 중 147명이었으며 국가간 차이가 컸다(그림 7.11).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3년 10만명 당 거의 700명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8년 755명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스라엘)보다 세배나 높은 것이다. 재소자 비율은 주요 파트너 국가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OECD 평균 미만으로, 예외였다.

청소년(18세 미만)은 재소자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그림 7.12). 22개 OECD 국가에서는 1% 미만이지만 독일은 거의 3%, 캐나다는 4%, 멕시코는 최고 14% 이다. 이는 OECD 국가별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교정 형태, 즉 여기에 사용되는 통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가 적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들 청년들은 조사에 응할 수 없으므로 니트족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소자 비율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증가했다가 2010년대 초반 약간 감소했다. 35개 OECD 국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 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는 10만명 당 117명에서 2010년 156명으로 증가한 후 2010년대 중반 147명으로 다소 줄었다(그림 7.11). 1992년 이후 수감인구는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캐나다와 에스토니아, 한국, 라트비아, 북유럽 3개국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만 줄어들었다. 2010년 이후 재소자비율은 미국을 포함해 OECD 회원국 중 3분의 2의 국가에서 줄어들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수감인구가 기존 시설의 수용능력을 넘어설 만큼 증가했다(그림 7.12). 거의 절반의 OECD 회원국에서 교도소 수용률(occupancy level)이 100% 를 넘어서고 있으며 벨기에와 헝가리, 멕시코는 120% 를 초과하고 있다. 수용률은 비유럽 주요 파트너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교도소가 북적대면 폭력과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정의와 측정

범죄율 자료는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s)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는 국제사회가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자료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운영 자료를 수집한다. 지수는 모든 범죄를 합하여 인구 10만명 당 경찰/형사사법제도와 공식 접촉하는 사람들 - 과 18세 미만 청소년 - 의 총 숫자를 바탕으로 한다. 자료에는 용의자, 체포되거나 경고를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간 비교는 신중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범죄의 법적 정의가 다르거나 범죄 건수를 세고 기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지만 수감 관련 비용 역시 상당하다. 이들 비용은 대개 범죄자에게 징벌을 가하고 다른 이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로 정당화된다. 재소자 규모는 범죄의 수준, 법적 조치, 집행 조치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재소자 규모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는 각국의 인구 10만명 당 재소자 수(재판 전 구금인과 구치소 수감자 포함)이다. 재소자 자료는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 비율 등 인구학적 특성과 법적 지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단, 재소자라고 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아니다. 재판이나 판결을 기다리는 이들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용률(Occupancy level)은 공식적인 수용능력 대비 수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 나타난 지표들은 형사정책연구원(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이 세계 교도소 브리핑(World Prison Brief)에서 수집한 것이다(www.prisonstudies.org).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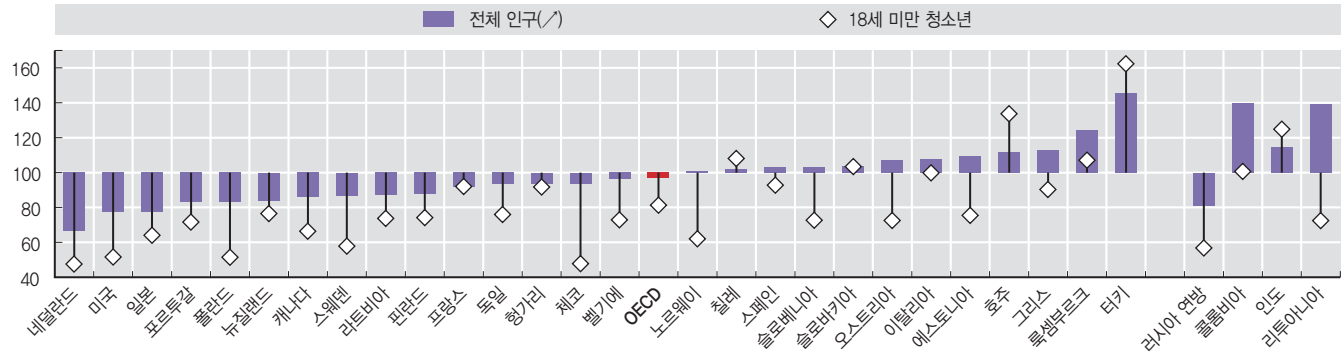
그림 7.10: 칠레와 뉴질랜드, 터키는 2012년, 에스토니아,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2013년 대신 2011년이다.

그림 7.11과 7.12: 20016년 대신, 호주와 오스트리아, 칠레, 일본,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중국,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남아공은 2015년, 벨기에와 캐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브라질, 코스타리카, 인도, 라트비아는 2014년, 미국은 2013년 자료. 중국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1992년 대신 2000년.

그림 7.12: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청년 자료 없음. 중국은 수용률(occupancy level) 자료 없음.

7.10.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특히 청년층에서 그렇다.

인구 10만명 당 경찰 및/또는 형사 사법 제도와 공식 접촉한 사람들의 비율, 2013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전체 범죄, 2008년 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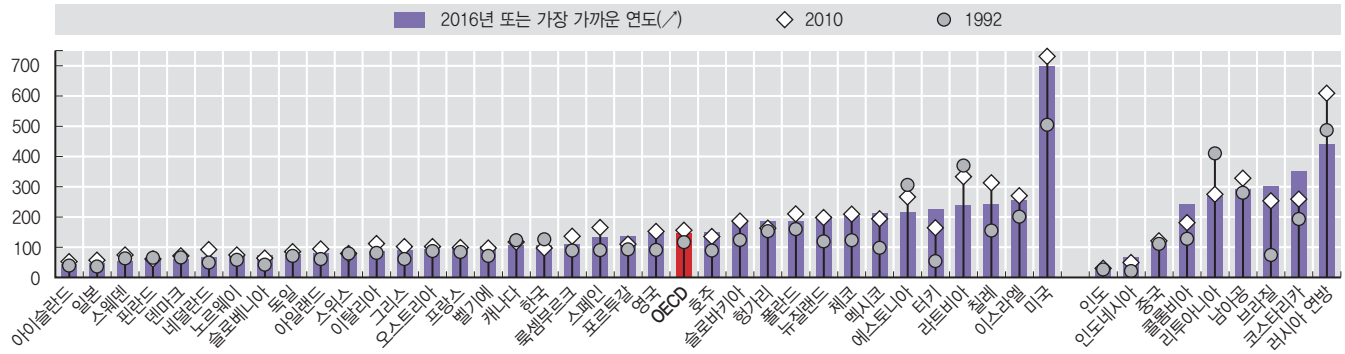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UNODC) Database (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statistics/crime.html) accessed on 15 March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77

7.11. 재소자 비율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약간 감소했다.

인구 10만명 당 재소자 비율, 1992년, 2010년과 2016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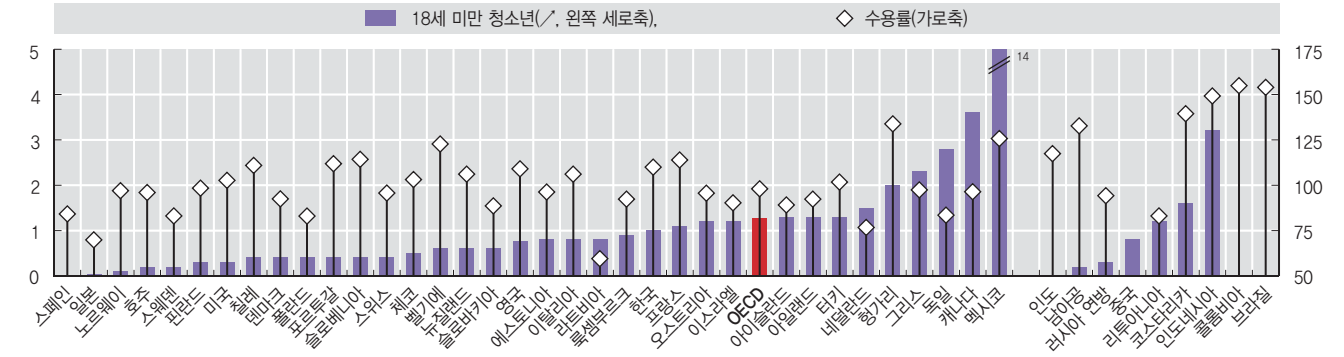


출처: World Prison Brief,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World Prison Brief (www.prisonstudies.org) accessed on 15 March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83

7.12. 청소년 재소자 비율 및 교도소 수용률 차이

재소자 중 청소년(18세 미만)의 비율 및 공식 수용능력 대비 재소자 비율, 2016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World Prison Brief,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www.prisonstudies.org) accessed on 15 March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797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접적으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결성은 다양한 성과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방에 있는 이들에게 좀더 만연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들의 경우 외로움이 건강을 해치고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cioppo et al., 2011).

젊은 사람들은 노인 집단보다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 OECD 평균적으로 15-29세 인구의 93% 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그림 7.13). 30-49세 인구의 경우 89%, 50세 이상은 87% 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청년의 90% 이상은 의지할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답했고 터키와 멕시코만 이 수준에 못 미쳤다(각각 83%와 84%). 터키와 한국은 둘 다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비교적 낮았는데, 한국은 50세 이상 인구의 61%, 터키는 68% 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덴마크는 여러 연령집단에 걸쳐 사회적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곳들이었다.

청년들 사이에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들의 온라인 연결 정도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은 온라인 사회망을 통해 물리적 사회망 밖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사회적 규범을 배운다(Mizuko et al., 2009). 16-24세 인구는 전체 인구(16-74세) 대비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경우가 1.4배 이상 많다(그림 7.14). 평균적으로 OECD에서는 청년의 89% 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멕시코의 53%부터 아이슬란드의 97% 까지이다. 온라인 소셜 연결성은 물론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 소유와 관련이 있다. 멕시코의 경우 35% 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90% 가 넘었다(PEW, 2016). 멕시코 가구 중 인터넷을 갖고 있는 비율은 26% 에 불과한 반면 아이슬란드는 전체 가구의 95% 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OECD, 2016).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신의 웰빙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ier and Stutzer, 2007). OECD **지역 청년들 중 5분의 1을 약간 넘는 수가 지난 달에 자원봉사를 했다고 답했다(그림** 7.15). 이는 30세 이상 인구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OECD 내에서도 회원국 별로 크게 다르다. 그리스, 터키, 헝가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성인 비율이 10% 미만으로 자원봉사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뉴질랜드, 아일랜드, 미국의 경우 전월 자원봉사에 나선 성인 비율이 높다(3분의 1 이상).

정의와 측정

사회적 지원 및 자원봉사 자료는 갤럽 세계 조사를 출처로 하며 다음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것으로 생각되는 친지나 친구가 있습니까?", "전월에 다음 중 한가지라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기관에 당신의 시간을 할애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갤럽 세계 조사는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공통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거의 예외없이 모든 표본은 시골 지역을 포함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대표하며 확률에 기반하여 선정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간 비교는 쉬워지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 표본추출 오류와 응답률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료, 특히 청소년 자료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비율은 "네"라고 답한 이들을 의미하며 "모르겠다"와 "응답거부"로 응답한 이들도 분모에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자료는 OECD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한다. 가구 및 개인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과 이용(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자료 중 일부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Eurostat 가구 및 개인 통계(Statistics on Households and Individuals)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유럽 통계 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의 일부이다. 그 외 비 EU 국가의 경우 정보는 OECD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며 이 자료는 각국 통계청의 공식 조사를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Cacioppo, J. et al.(2011), "Social isol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231, pp. 17-22.

Mizuko, I. et al. 2009), "Living and Learning with New Media: Summary of Findings from the Digital Youth Project", MacArthur Foundation Reports.

OECD(2016), "Internet access (indicator)", *http://dx.doi.org/10.1787/69c2b997-en* (accessed 24 May 2016).

OECD(2015),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Innovation for Growth and Socie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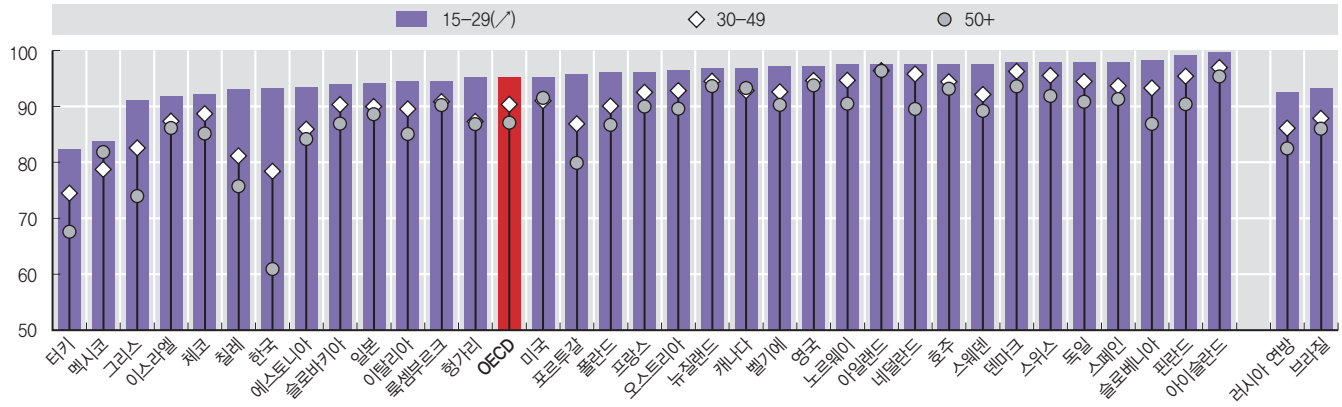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2016) "Smartphone Ownership and Internet Usage Continues to Climb in Emerging Economies", *www.pewglobal.org/files/2016/02/pew_research_center_global_technology_report_final_february_22__2016.pdf*.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4: 미국 자료 없음. 캐나다와 일본은 16-24세 자료 없음. 2014년 자료는 호주와 이스라엘은 2013년,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2012년 자료임.

7.13. 사회적 지원은 청년들이 가장 높다.

의지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연령별, 2006-14년 취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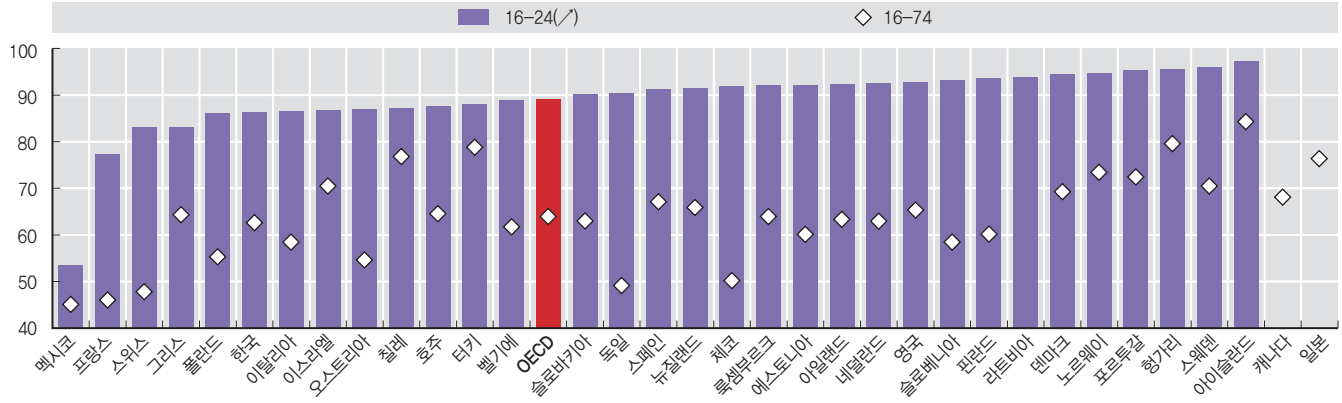


출처: OECD(2015), How's Life 2015 – MeasuringWell-being,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801

7.14. 청년들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더 많이 참여한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각 연령 카테고리 별 비율,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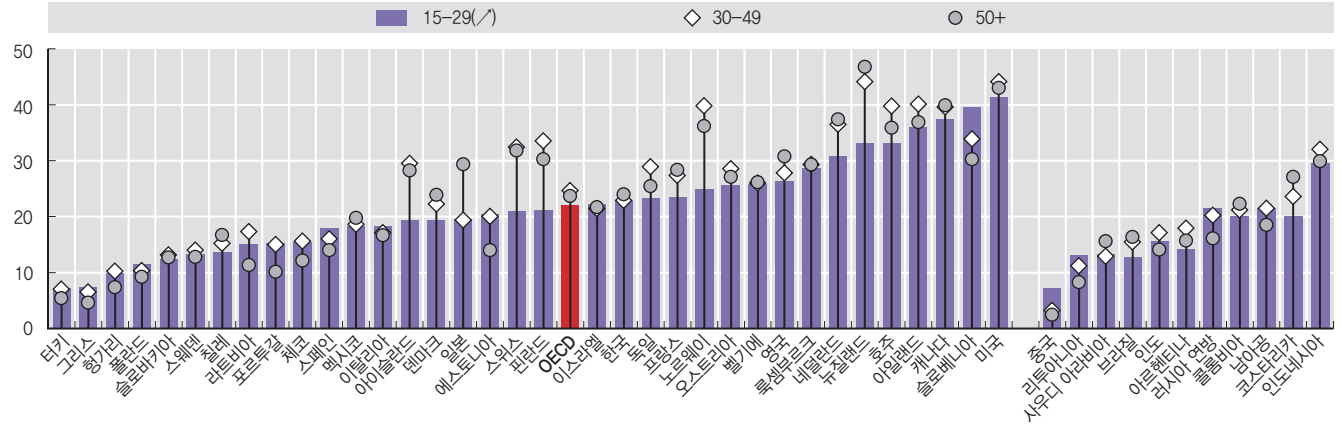


출처: OECD ICT Database;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Database, March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818

7.15. 청년들은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전월 자원봉사에 시간을 할애한 각 연령 카테고리 별 비율, 2006-15 취합 결과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405829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 지표

발 행 일:	2017년 7월
원 저:	OECD
번역 · 발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4 Fax. 02 3210 1313 www.oecdkorea.org
인 쇄:	아이프리넷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이 보고서는 OECD의 격년 발행 사회적 지표 개황인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의 여덟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점점 커져가는 사회적 웰빙과 트렌드에 관한 정략적 증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2001년 최초 발행시부터 다루었던 지표와 몇 개의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여 총 25개의 지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35개 OECD 회원국 자료와 접근 가능한 핵심 파트너 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의 자료, 기타 G20국가(아르헨티나와 사우디 아라비아)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특별히 NEET Challenge와 실업 및 비활동 청년을 위한 조치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으며, 독자들이 OECD사회지표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지표는 OECD iLibrary의 e북과 웹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니트족 문제: 실업 및 소외 청년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2장 OECD 사회지표 해석
제3장 일반 지표
제4장 자활 지표
제5장 형평성 지표
제6장 보건지표
제7장 사회통합 지표

http://oe.cd/sag